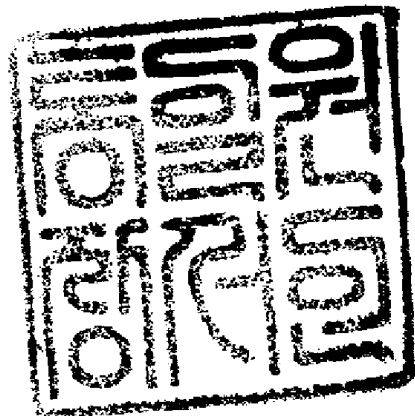


통남 96-9-23

# 남북국회회담 쌍방 주장 비교

—예비접촉(1985), 준비접촉(1988~1990)—

1996. 9.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 목 차

## I. 남북국회회담 추진경과

1.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85. 7. 23~9. 25) .....	7
가. 성립경위 .....	7
나. 쌍방 대표단 명단 .....	8
다. 회담경과 .....	8
라. 제2차 예비접촉 이후 동향 .....	10
마. 쌍방 주요제안 대비 .....	13
2.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88. 8. 19~'90. 1.24) .....	17
가. 성립경위 .....	17
나. 쌍방 대표단 명단 .....	18
다. 회담경과 .....	19
라. 제10차 준비접촉 이후 동향 .....	23
마. 쌍방 주요제안 대비 .....	25

## II.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쌍방 주장 비교

1. 회담의의 및 자세 .....	31
2. 본회담 의제 .....	33
3. 본회담 형식 .....	47
4. 대표단 구성 .....	52

- 5. 본회담 실무절차 ..... 55
  - 가. 회담장소 ..... 55
  - 나. 회담공개여부 ..... 56
  - 다. 보도 및 기록 ..... 57
  - 라. TV중계 편의제공 ..... 58
  - 마. 왕래절차 ..... 59
  - 바. 연락수단 ..... 61
  - 사. 편의보장 ..... 62
  - 야. 회담날짜·주기 ..... 63
- 6. 버마사건 ..... 64

### Ⅲ.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쌍방 주장 비교

- 1. 회담 의의 및 자세 ..... 69
- 2. 본회담 의제 ..... 81
  - 가. 의제일반 ..... 81
  - 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문제 ..... 90
  - 다. 남북인적·물적교류와 협력 문제 (직접자·경제회담 제개문제) ..... 113
  - 라.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 122
  - 마.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 137
- 3. 본회담 형식 문제 (대표회담·연석회의·합동회의) ..... 145
- 4. 본회담 진행방식 ..... 173
  - 가. 남북국회합동회의(개·폐회 모임) ..... 173

나.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의) .....	177
다. 집행부(간사회의) .....	194
라. 공동운영위원회 .....	199
5. 대표단 구성 .....	204
6. 회담운영절차 .....	208
가. 합의방식(합의제·다수결) .....	208
나. 합의서(공동결의문·공동선언문) .....	223
다. 공동의장제 .....	224
라. 개·폐회모임 연설 .....	225
마. 회담개최 시기 및 장소(서울·평양) .....	227
바. 기타 운영절차문제 .....	229
7. 회담 외적 문제 .....	232
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	232
나. 밀입북자 사법처리 .....	244
다. 콘크리트장벽 철거 .....	246
라. 민족통일협상회의 개최 .....	253
〈부록〉 쌍방 합의서(안) .....	261

## I. 남북국회회담 추진 경과

## 1.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85.7.23~9.25)

### 가. 성립경위

- 북측은 '85. 4. 9 민정·신민·국민 3당 총재앞으로 보낸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의장 명의의 대남편지를 통해 불가침선언 발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우리측에 제의해 왔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85. 6. 1 이재형 국회의장 명의의 대북편지를 통해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에 따른 제반 문제와 기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을 7월중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이어 북측이 '85. 7. 5 대남전통문을 통해 우리측의 예비접촉개최 제의에 동의해 옴으로써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두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음.

- 제1차 예비접촉('85. 7. 23) :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2차 예비접촉('85. 9. 25) :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나. 쌍방대표단 명단

우 리 측	북 측
<p>〈수석대표〉 권정달(민주정의당)</p>	<p>〈단 장〉 전금철(조선노동당)</p>
<p>〈대 표〉 정시채(민주정의당) 박관용(신한민주당) 신순범(신한민주당) 강경식(한국국민당)</p>	<p>〈대 표〉 주창준(조선노동당) 최장룡(조선노동당) 염국렬(조선사회민주당) 우달호(천도교청우당)</p>

## 다. 회담경과

-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비접촉에서 남북쌍방은 회담형식·의제 등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따른 제반 절차 문제를 논의한 결과 회담형식·대표단구성 등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회담의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음.
- 우리측은 의제분제와 관련하여
  - 남북의 입법기관간의 회담인 남북국회회담에서는 통일국가의 기초가 되는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마땅하며
  - 북측이 제의한 불가침에 대한 문제는 남북한 정부당국간에 협의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통일헌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계속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해야 할 의제로 고집하였음.
- 한편 북측은 '86. 1.20 「팀스피리트 '86 훈련」을 구실로 남북간의 모든 대화를 중단시켰으며 이에 따라 '86. 2.18 개최기로 합의하였던 제3차 예비접촉은 무산되었음.

〈쌍방입장〉

구 분	우 리 측	북 측
회 담 형 식	대표회담	연석회의 또는 대표회담
대표단 구성	쌍방 각기 11명	연석회의 : 100명 대표회담 : 9~11명
회 담 의 제	통일헌법 기초를 위한 민족통일 협의회의 기구 구성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문제</li> <li>•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토의하는 문제</li> </ul>
기 타	국회회담용 직통전화 설치운영	국회회담 전용 직통전화 설치

〈합의사항〉

- 회담형식 : 쌍방 국회의 대표회담
- 대표단규모 : 쌍방 각기 11명
- 회담장소 : 서울·평양 윤번개최



- 일 시 : 예비회담 종료후 1개월 이내

## 라. 제2차 예비접촉 이후 동향

- '85. 10. 9 북측 전금철 예비접촉 단장, 예비접촉 재개 촉구 대남 전통문
- '85. 10. 12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예비접촉 일자 추후통보 대북전통문
  - 『국회의사 일정으로 인해 아직 결정 못하였으므로 차후 적절한 시기에 연락』
- '85. 10. 25 북측 전금철 예비접촉 단장, 예비접촉 일자 수정제의 대남전통문
  - 11월 1일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개최 제의
- '85. 10. 30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예비접촉 일자 추후통보 대남전통문
- '85. 11. 18 북측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예비접촉 촉구 대남 편지
  - 11월 안으로 접촉 성사 기대
- '85. 11. 28 우리측 이재형 국회의장, 예비접촉일자 관련 대북편지

- 『우리 국회의 정기회기가 종료되면 우리측 수석대표가 제3차 예비접촉 일자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보낼 것임』
- '85. 12. 20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예비접촉 재개 제의 대북전통문
  - 제3차 예비접촉을 '86. 2. 18.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
- '85. 12. 24 북측 전금철 예비접촉 단장, 예비접촉 일자 동의 대남전통문
- '86. 1. 22 북측 전금철 예비접촉 단장,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예비접촉 연기 대남전통문
  - 『팀스피리트 '86 합동군사 연습이 끝난 다음 정세를 보아서 그 시일을 정할 것임』
- '86. 1. 23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예비접촉 재개 촉구 대북전통문
- '86. 2. 18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북측의 예비접촉 회피 관련 논평
  - 북측에게 쌍방의 현안문제와 의견차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와 노력을 촉구

- '86. 3. 26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예비접촉 재개 촉구 및 개최일자 제의 대북전통문
  - '86. 5.14(수)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
- '86. 3. 31 북측 전금철 예비접촉 단장, 팀스피리트 '86 훈련관련 예비접촉 재개 거부 대남전통문
- '86. 4. 1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예비접촉 재개 촉구 논평
- '86. 7. 11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예비접촉 재개 재촉 구 및 접촉일자 제의
  - '86. 8. 13(수)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
- '86. 8. 13 우리측 권정달 예비접촉 수석대표, 예비접촉 재개 재촉 구 성명

마. 쌍방 주요제안 대비

(1) 본회담 관련 기본문제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회담형식	○ 국회대표회담	○ 쌍방 국회연석회의 또는 국회대표회담	
대표단 구성	○ 각 11명의 대표	○ 연석회의:연석하는 측(방문측)에서 100명 정도가 상대측 국회 본회의에 참가 ○ 대표회담:9~11명 대표	
	○ 쌍방 수석대표를 국회의장이 지명 <2차 접촉시 수정안> ○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장급 이상의 국회의원	○ 단장은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 수행원 20명정도, 기자 50명정도 참가	
회담장소	○ 서울과 평양 교대 개최  <2차 접촉시 수정안> ○ 서울	○ 평양과 서울 교대개최, 1차 회담은 평양 개최  <2차 접촉시 수정안> ○ 평양	
회담의제	1.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회의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2.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1.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하여 2.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토의할데 대하여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p>〈2차 접촉시 수정안〉</p> <p>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회의의」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p>	<p>〈2차 접촉시 수정안〉</p> <p>(최초안)</p> <p>(1)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하여</p> <p>(2)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문제에 대하여</p> <p>(수정안)</p> <p>「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p>	
회담일시	○ 예비접촉의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결정	○ 대표회담 경우 : 제1차 회담은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내에 개최	
직통전화	○ 국회회담용 직통전화를 1차 예비접촉일로부터 7일내 개설	○ 국회회담 전용 직통전화를 서울·평양간 연결	

(2) 본회담 관련 실무절차문제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회담공개여부	○ 기타 진행절차 문제는 쌍방 협의·결정	○ 원칙상 비공개, 필요시 쌍방합의에 따라 공개	
보 도	상 동	○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합의 사항은 공동 합의문건을 작성·발표	
기 록	상 동	○ 녹음·녹화·속기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TV중계 편의제공	○ TV중계는 기술적 협의 필요	○ 초청자측은 상대측 지역까지 녹음·TV중계선을 보장 ※ 토론시 TV생방송도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	
신변안전 보 장	○ 종전 관계에 따름	○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담보성명을 쌍방 관계당국이 발표하고 그 성명문본을 서로 교환	
신분확인	상 동	○ 대표들은 신임장, 수행원 및 기자들은 신분증명서 휴대 ○ 사진 첨부된 명단을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군사분계선 통과시 서로 확인	
편의보장	상 동	○ 초청측은 교통수단과 숙식을 비롯한 일절의 편의를 제공	

(3) 제2차 예비접촉 일자·장소문제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일 자	○ 85년 9월 25일	○ 8월중 개최	
장 소	○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제2차 예비접촉때부터 회담을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며 개최	

(4) 비마사건 문제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비마사건 반성촉구	<p>○ 기초발언을 통해</p> <p>-『제작년 「비마」에서 발생한 동족살상의 참극은 우리 민족의 분단과 대결상이 빚은 엄청난 사건으로서 전세계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p> <p>-『우리는 이같은 사건이 나라의 밖에서나 안에서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귀측 당국의 반성과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여 왔다』고 주장</p>	<p>○ 회담종료시, 『회담과 관계 없으며, 우리와 관계없는 자극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볍게 언급</p>	

(5) 차기접촉 일자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3차예비 접촉일자 및 장소	<p>○ 일자 : 미정</p> <p>○ 장소 :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p>○ 일자 : 10월 16일</p> <p>○ 장소 : 판문점 통일각</p>	<p>○ 추후 식 통전화 로 통지</p>

## 2.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88. 8. 19~'90. 1. 24)

### 가. 성립경위

- '88. 7. 18 김제순 국회의장은 북측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우리 국회가 채택한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 참가 촉구 결의문」을 담은 대북편지를 전달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7. 21자 양형섭 명의의 대남편지를 통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와 남측이 제기하는 긴장상태 완화 및 평화보장에 유익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국회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음.
  - 이어서 북측은 7. 26자 대남편지를 통해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서울올림픽에 북측을 초청하는 문제와 올림픽 공동개최안을 긴급의제로 동시에 토의하자고 제의해왔음.
  - '88. 8. 1 우리측은 8월중에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을 개최하고자 북측에 제의하였음.
  - 이에 따라 '88. 8. 9 북측은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개최에 동의해온 바, 이후 10차례의 준비접촉이 진행되었음.
- 제1차 준비접촉('88. 8. 19) : 관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제2차 준비접촉('88. 8. 20) : 관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 제3차 준비접촉('88. 8. 22) :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수석대표 단독접촉('88. 8. 24) :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 제4차 준비접촉('88. 8. 26) :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 제5차 준비접촉('88. 10. 13) :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제6차 준비접촉('88. 11. 17) :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 제7차 준비접촉('88. 12. 29) :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제8차 준비접촉('89. 10. 25) :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 제9차 준비접촉('89. 11. 29) :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제10차 준비접촉('90. 1. 24) :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 나. 쌍방 대표단 명단

우 리 측	북 측
<p>&lt;수석대표&gt;</p> <p>박준규(민주정의당) : 1차~ 6차</p> <p>채문식(민주정의당) : 7차~10차</p> <p>&lt;대 표&gt;</p> <p>이한동(민주정의당) : 1차~ 6차</p> <p>김현욱(민주정의당) : 7차~10차</p> <p>김봉호(평화민주당) : 1차~10차</p> <p>박관용(통일민주당) : 1차~10차</p> <p>김용환(신민주공화당) : 1차~ 7차</p> <p>이희일(신민주공화당) : 8차~10차</p>	<p>&lt;단 장&gt;</p> <p>전금철(조선노동당)</p> <p>&lt;대 표&gt;</p> <p>안병수(조선노동당)</p> <p>리동철(조선노동당)</p> <p>리주웅(조선사회민주당)</p> <p>박문찬(천도교청우당)</p>

## 다. 회담경과

### (1) 개 황

- 남북 쌍방은 '88. 8. 19부터 '90. 1. 24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준비접촉에서 회담형식·의제 등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하였음.
- '88. 8. 26 개최된 제4차 준비접촉까지 쌍방은 회담형식을 대표회담으로 할 것인가 연석회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였음.
- 서울올림픽이 개막된 이후 속개된 준비접촉에서 쌍방은 회담진행순서, 회담개최장소 및 시기, 대표단 구성 등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의제문제에서도 부분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았음.
- 그러나 제8차 접촉시부터 북측은 「방북인사 사법처리중지」등 회담외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회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오다가 '90. 1. 24 개최된 제10차 준비접촉에서는 소위 「콘크리트장벽 철거」를 요구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를 긴급의제로 상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실무절차문제 토의를 거부하였음.
- 이어서 북측은 '90. 2. 8 「팀스피리트 '90 훈련」을 구실로 2. 22 개최기로 합의한 제11차 준비접촉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음.

- 「팀스피리트 '90 훈련」이후 우리측의 꾸준한 대화재개 노력에 따라 쌍방은 제11차 준비접촉을 '90. 7. 19에 개최기로 합의하였으나, 7. 17 북측은 우리 국회 내부사정(야당의원 의원직 사퇴)을 구실로 동 접촉을 무기연기 시킴으로써 사실상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무산되었음.

## (2) 쌍방 입장

- 남북 쌍방은
  - 남북국회회담을 쌍방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개·폐회모임(합동회의)과, 각기 50명씩의 대표가 참가하는 의제토의모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 의제토의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쌍방 각기 5명씩으로 구성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 개회모임은 준비접촉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평양에서, 의제토의모임은 개회모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2차부터는 1개월 주기로 평양·서울 윤번개최), 폐회모임은 의제토의모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음.
- 또한 쌍방은 본회담 의제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와 「남북 불가침선언 문제」로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음.

○ 그러나 쌍방은 의제토의모임의 형식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기본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음.

○ 이와 관련 우리측은

— 남북국회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의제토의모임의 형식과 운영은 쌍방합의 방식의 대표회담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과거 회담선례 및 남북국회간의 합의 존중

— 또한 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쌍방 국회가 관심을 표명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동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자는 입장임.

○ 그러나 북측은

—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인 만큼 대결관념에 기초하는 쌍무회담방식이 아니라 같은 민족성원 입장에서 각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대표회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 정상회담도 환경이 마련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스스로 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동 문제의 의제 채택을 거부하였음.

〈의견접근사항〉

구 분	내 용
형 식	○ 개회모임, 의제토의모임, 폐회모임 순으로 진행 - 개·폐회모임 : 합동회의(전원참석), 공동의장제 - 의제토의모임 : 쌍방 각기 50명의 대표 참석 (각기 5명으로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의 제	①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 * 교류·협력의 표기순서는 미합의 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회 담 장 소	○ 개회모임 : 평양 ○ 의제토의모임 : 서울·평양 윤번개최(1차는 서울) ○ 폐회모임 : 서울
회 담 일 사	○ 개회모임 : 준비접촉 종료후 1개월 이내 ○ 의제토의모임 : 개회모임 종료후 1개월 이내 (2차회의 부터는 1개월 주기) ○ 폐회모임 : 의제토의모임 종료후 1개월 이내

〈쟁점사항〉

구 분	우 리 측	북 측
형 식	○ 의제토의모임은 쌍무적 성격의 대표회담(쌍방 합의제)	○ 의제토의모임은 연좌형태의 대표회의(일차 합의제)
의 제	○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의 의제 채택	○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의 의제 채택 반대 ○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의 긴급 의제 상정

## 라. 제10차 준비접촉 이후 동향

- '90. 2. 8 남북회담 북측 대표단, 회담거부 연합성명
  - － 「팀스피리트」기간중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모든 남북회담 거부
- '90. 2. 21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채문식 수석대표, 준비접촉 재개 촉구 대북전통문
  - － 제11차 준비접촉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데 대한 유감표명 및 준비접촉 재개 호응 촉구
- '90. 6. 20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전금철, 준비접촉 제의 대남전통문
  - － 제11차 준비접촉, '90. 7. 12 개최 제의
- '90. 7. 5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채문식 수석대표, 북측의 준비접촉 제의 관련 대북전통문
  - － 준비접촉 일자를 7. 19로 수정제의
- '90. 7. 7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전금철, 우리측 준비접촉 일자 수정 관련 호응 대남전통문
- '90. 7. 17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전금철, 준비접촉 무기 연기 통보 대남전통문

- 우리 국회 내부사정을 이유로 제11차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
- '90. 7. 18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재분식 수석대표, 북측의 준비접촉 무기 연기 통보 관련 대북전통문
- 제11차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 유감 표명 및 제11차 준비접촉 조속 호응 촉구

마. 쌍방 주요제안 대비

(1) 본회담 의제 및 회담형식

구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회 담 의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li> <li>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li> <li>③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문제</li> <li>②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li> </ul> <p>※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문제는 7차 접촉시 제 1의제로 제시했다가 8차 접촉시 일단 유보, 10차 접촉시 다시 긴급의제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차 접촉시 쌍방의견일치 - 단, 교류·협력 표기순서를 협력·교류로 주장</li> </ul>
회 담 형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국회회담은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폐회모임 순으로 진행</li> <li>○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 형식</li> <li>○ 대표회담은 쌍방에서 각기 5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쌍무회담형식으로 하며,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는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국회회의를 개막회의,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의, 폐막회의로 함.</li> <li>○ 개막회의와 폐막회의는 북남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로 함.</li> <li>○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회의는 쌍방 각기 5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대표회의로 하며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는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합의 - 단, 의제토의를 위한 회담 형식은 상이</li> <li>○ 쌍방합의</li> <li>○ 회담형식은 쌍방쟁점사항</li> </ul>



## (2) 본회담 운영절차

구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회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국회회담은 상호 존중 및 불간섭, 상호 형평의 원칙 등에 따라 상호주의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개회모임은 준비접촉 종료 후 1개월내에 평양에서 개최</li> <li>○ 개회모임에서는 준비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토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개회연설과 각정당대표의 축하연설 교환</li> <li>○ 대표회담은 개회모임 이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2차 회담 부터는 1개월 주기로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li> <li>○ 대표회담은 쌍방합의 제로 운영하며 표결 배제</li> <li>○ 집행부는 대표회담의 위임에 의해 대표회담에서 제기된 의견차이를 협의·조정하고 쌍방합의에 따라 공동합의문 초안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 음</li> <li>○ 개막회의는 판문점 상봉 종료 후 1개월 안에 평양에서 소집</li> <li>○ 개막회의에서는 판문점 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대표회의에 파견할 쌍방 대표의 명단을 발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개막연설과 북과 남의 각 정당대표 및 개별인사들의 축하연설 교환</li> <li>○ 제1차 대표회의는 개막회의 이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하며 차기회의부터 1개월을 주기로 평양·서울에서 번갈아 개최</li> <li>○ 대표회의에서 기본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는 일차합의방식(표결방식)</li> <li>○ 집행부는 대표회의에서 제기되는 의견차이를 협의·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합의</li> <li>○ 의견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북측은 개별인사(무소속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 포함</li> </ul> </li> <li>○ 쌍방합의</li> <li>○ 쌍방 쟁점사항</li> <li>○ 협의조정기능은 동일하나 북측은 공동합의문 초안을 별도의 문건작성 그룹이 작성</li> </ul>

구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부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은 대표회담에서 확인·채택(표결배제)</li> <li>○ 공동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작성 등 회담운영과 관련된 실무문제 협의</li> <li>○ 폐회모임은 대표회담종료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개최</li> <li>○ 폐회모임에서는 대표회담에서 합의·채택된 공동합의문을 확인·공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폐회연설과 각 정당대표들의 축하연설 교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문건작성 그룹에서 작성된 공동합의문을 대표회의에서 표결로 확인·채택(일치합의제)</li> <li>○ 공동운영위원회는 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li> <li>○ 폐막회의는 대표회의종료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개최</li> <li>○ 폐막회의에서는 대표회의에서 작성한 공동합의서를 박수로 확인하고 쌍방 국회의장의 폐막연설과 각 정당대표 및 개별인사들의 축하연설 교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표결배제, 확인·채택방식을 연구하겠다고 언급(6차접촉)</li> <li>○ 쌍방합의</li> <li>○ 의견일치 - 다만 북측은 개별인사(무소속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 포함</li> </ul>

(3) 기타 진행절차

구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세 부 진 행	○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하고 사회는 번갈아가며 함.	○ 개막회의와 폐막회의는 공동의장제로 하며 사회는 번갈아가며 함.	○ 쌍방향의
	○ 대표회담과 집행부는 쌍방수석대표가 공동주재하고 공동운영위원회는 쌍방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대표가 공동주재	○ 대표회의는 공동의장제로 운영하며 집행부는 완전합의제(만장일치제)	○ 북측은 공동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개·폐회모임과 대표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의 회담은 비공개로 할 수 있음.	없 음	
	○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남북왕래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없 음	
	○ 개·폐회모임과 대표회담의 상대측 체류기간은 4박 5일	없 음	
	○ 개·폐회모임과 대표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은 각기 150명 내외의 지원인원과 200명 내외의 기자동행	없 음	
	○ 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문제 등 기타 제반준비절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남북왕래의 선례를 존중하되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실무대표 1명씩을 선정하여 협의·결정	없 음	

## Ⅱ.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쌍방 주장비교

### 〈접촉일자 및 장소〉

- 제1차 예비접촉 : '85. 7. 23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제2차 예비접촉 : '85. 9. 25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1. 회담의의 및 자세

우 리 측	북 측
<p>오늘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속에 남북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첫 예비접촉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임.</p> <p>조국해방 40년이 되는 올해에 와서 처음으로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마주앉아 대화를 갖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접촉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꼭 다행한 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온 겨레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됨.</p> <p>우리 대표단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을 안고 오늘 아침 이곳 판문점으로 달려오면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가로지른 우리 겨레의 깊은 분단의 상처를 다시한번 목격하였음.</p> <p>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곳 판문점에는 아직도 6·25 동족상잔의 불행했던 현장이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고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p>	<p>오래동안 격폐되어있던 북과 남사이에 최근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에 이어 국회회담 예비접촉까지 마련되게 된 것은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기초를 쌓아나가는데서 또하나의 전진으로 되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더우기 나라가 분렬된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권위있는 북남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것은 오랜 세월 분렬의 고통과 전쟁의 불안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하고, 또 시급한 문제인가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음.</p> <p>우리는 조국광복 40주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민족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땅에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국회회담이 하루속히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음.</p> <p>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 하고 쌍방의 기본입장을 밝히게 되는 만큼 서로 좋은 분위기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검토하여 내외가 기대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 2. 본회담 의제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남북간에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이 협의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봄. 대한민국의회는 지난 6월 1일 이러한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채택하여 귀측에 서한으로 보낸바 있음.</p> <p>이러한 일관된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했으며, 거기서 다룰 의제로서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제시한 바 있음.</p> <p>아울러 우리 정부는 포괄적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면서 평화적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실천적 조치로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행사 지양, 상호 내정불간섭, 군비경쟁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p> <p>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p>	<p>국회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토의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쌍방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통하여 명백히 되었다고 생각함.</p> <p>우리는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쌍방국회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할 것을 귀측에 제의하였음.</p> <p>그것은 이미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이 문제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이며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임.</p> <p>그렇기때문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는 마땅히 국회회담의 최우선적인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함.</p> <p>우리는 국회회담에서 간박하고 절실하게 제기되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것과 함께 귀측이 주장하는 통일헌법</p>

우 리 측	북 측
<p>구체적인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주장해 왔음.</p> <p>따라서 귀측이 진실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의에 귀측 정부당국이 호응해 나오도록 촉구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p> <p>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는 행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책임있는 상대정부당국과 협상해 왔으며, 그 결과 협정도 체결하고 또 그것을 집행해 왔음.</p> <p>불가침문제도 실권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정부당국자가 책임을 가지고 협의해야 마땅하며, 그 결과 어떤 합의서나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국회는 당연히 그것을 심의하고 비준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p> <p>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일헌법의 제정이 어느 무엇보다도 요청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음.</p> <p>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아래 벌써 40년을 살아온 우리</p>	<p>제정문제도 토의하는데 반대가 없음.</p> <p>우리의 접촉은 어디까지나 쌍방접촉인것만큼 어느 일방의 의견만 존중되고 절대화되어서는 안되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미풍이 발양되어야 함.</p> <p>이런 입장에서부터 우리는 귀측이 주장하는 문제가 불가침에 관한 문제와 같이 긴박한것은 아니지만 아량과 성의를 보여 그것도 국화회담에서 같이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임.</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가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기초가 되는 대헌장이 필요하며, 그 대헌장이 바로 통일헌법인 것임.</p> <p>통일헌법 제정사업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남북국회회담이 열린다면 쌍방 주민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거기서 구체적으로 토의해야 할 것임.</p> <p>우리는 이미 1982년 1월 22일에 천명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속에서 이에 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음.</p> <p>우리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의 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이 통일헌법을 남북한 전역의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하자는 것임. 그리고 이 헌법을 토대로 하여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임.</p> <p>남북의 협의기구가 마련되면 쌍방은 우리민족 전체가 회구하는 조국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통일헌법 기초에서부터 통일국회와 통일정부 수립까지의</p>	

우 리 측	북 측
<p>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p> <p>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회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지금 우리 쌍방이 무엇보다도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임. 그래서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 신뢰를 도모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함.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해가 증진되고 서로 대화가 오고가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p> <p>회담이 잘 진전되어 가지고 서로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신뢰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고 긴장완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 내지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우리는 이렇게</p>	<p>거기서 이제 민족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문제와 이에 따르는 통일기반 조성문제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음.</p> <p>(1차 예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봐서, 이런 문제등을 포함해 가지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임.</p> <p>(1차 예비접촉-토의)</p> <p>귀측은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공동발표하고 또 당국자회담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인데, 너무 과정이 복잡함. 왜 그러냐 하려는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공동발표하고 그 다음에 당국간의 회담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그리고 난뒤에 우리 정부당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일종의 조약이나 협정으로 선언·합의한 내용이니까 이것이 비준·동의를 위한, 또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가지곤 국회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번잡한 문제가 있음.</p> <p>그래서 불가침선언문제를 논의하지 말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긴장완화를 위해서 불가침문제는 논의를 하자는 주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간 회담에서 불가침선</p>	<p>우리가 제안한 불가침에 관한 문제와 같은 것이 해결되어서 평화가 보장되고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이런 기초에서 통일을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p> <p>그런데 이런 통일을 위한 전제를 조성하고 기초를 마련하는 긴장완화문제라든지 불가침문제 같은 것은 해결안하고 통일하자, 통일문제 협의하자 이러니까 조금 논리비약이고, 실천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그래서 문제임.</p> <p>그렇지만 우리가 쌍방이니만큼 이제와 같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쌍방이니만큼, 우리가 그쪽 안을 받아들임. 그래서 토론하자는 것임.</p> <p>그다음 두번째 문제임. 불가침문제에 대해서는 이제와 같은 그런 이유로 해서</p>

우 리 측	북 측
<p>언을 포함한 긴장완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그것이 바로 국회에 와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p> <p>또 정부당국에서 여러가지 긴장완화를 위한 제안들 내놓고 있으니 서로 당국끼리 당국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불가침선언 문제같은 것은 하던데 통일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려는 여러가지 문제가 이제 논의가 거기서 되어되지 않겠는가?</p> <p>그래서 우리 주장은 지금 통일헌법 제정을 위해서 협의기구 같은 것을 구성해서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간다면, 하나의 장전이 되고 역사적인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시를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토의)</p>	<p>못하시겠다 그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함. 이 문제 제기할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제기한 것임.</p> <p>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조성된 정세로 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로 보나, 그리고 모든 것을 인민들의 염원에 비추어 보나, 그리고 또 그쪽에서 말씀드린 국회의 권능이나 기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건 마땅히 응당히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제기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마는 불가침선언 문제는 정부쪽에다가, 그쪽에다 맡기자.</p> <p>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님네 하고 넘기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왜 이것을 세번에 걸쳐서 하느냐? 그러니까 두단계를 거쳐서 처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노력도 낭비 안하고 시간도 낭비 안하고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3단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임.</p> <p>귀측에서의 편지내용을 보면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공동발표하고 그 다음에 정부당국간 회담에서 이걸 채택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러니까 절차상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정부당국끼리 불가침선언을 포함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이 문제를 다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잘되도록 밀어주고 할 그런 입장에 있음.</p> <p>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미 다 제안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p>	<p>지금 당장 당국자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조성 못되었음. 우리가 이번에 잘해 놓았음. 거 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는 간단한 것임. 그걸 발표해 놓으면 당국에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정치적인 하나의 기초가 됨.</p> <p>그걸 기초하여 다루면 됨. 그 다음에 국회에서 또 쉽게 통과됨.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자꾸 다른데로 넘길려고 하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하자 하는,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말고 또 빠른 길로 가서 해결하자 하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 이외에 통일헌법제정을 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또 우리 국회회담을 통해서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수 있도록 국회의원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대표단끼리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뢰를 점점 구축해 나가자, 우리가 현실도피를 하려고 한다, 왜 이런 긴박한 문제를 놓고 정치인이 현실도피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말씀을 했음.</p> <p>우리가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진작부터 우리측의 의사를 천명했음.</p> <p>1974년에도 했고 1982년 1월 22일 날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에서 바로 그것을 밝혔음. 모든 분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p>	

우 리 측	북 측
<p>으로 하자, 또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서 군비경쟁 중지, 또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를 위해서 협정을 체결하자고 분명히 1982년 1월 22일 날 우리가 제의를 했음.</p> <p>뿐만 아니라 1983년 1월달에 이미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에서 이러한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문제를 우선적인 과제로서 촉구를 한 사실이 있음.</p> <p>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당국자간에 해야 되고, 또 당국자간에 2년전에 3년전에, 우리는 이걸 제안해 놓았음. 뿐만 아니라 11년전에 이걸 제안을 해놓았음.</p> <p>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침에 관한 문제는 이미 몇번 정부당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통일의 대헌장, 헌법을 만드는 일임.</p> <p>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한 나라가 건국을 하고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세계 어</p>	

우 리 측	북 측
<p>는 나라를 불문하고 다 제헌의회를 통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었음.</p> <p>이 통일헌법은 뭐냐, 우리 6천만 민족의 통일의 의지와 염원을 담고 앞으로 통일국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임.</p> <p>이러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그 밑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함.</p> <p>불가침에 관한 선언문제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나라고 느끼고 있음. 긴장완화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전쟁재발 방지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p> <p>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74년부터 또 82년, 83년 우리가 제의를 해놓고 있고 귀측 당국에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기를 했음.</p> <p>이것을 우리가 귀측에서는 정부당국에 하도록 촉구를 해야 할 문제고 우리 국회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문제 보다는 통일헌법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 의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p> <p>(1차 예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또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한 바 있음.</p>	<p>북남국회회담을 열고 여기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우리의 발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리유와 근거에서 출발하고 있음.</p>
<p>우리측은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다지는 일은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이미 분명히 한 바 있음.</p>	<p>첫째로, 불가침문제는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된 중대하고도 간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은 권위있는 정치기관이 마땅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임.</p>
<p>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실천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해당 정부당국이 관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로 되어 있음.</p>	<p>북과 남의 국회는 응당 이 문제에 자기의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며 다른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모든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봄.</p>
<p>남북간의 불가침문제도 그것이 제반조치가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쌍방 정부당국간에 토의·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임.</p>	<p>둘째로, 국회회담에서 불가침문제를 협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우리는 인정함.</p>
<p>이와같은 견지에서 우리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p>	<p>우리가 제안한 불가침문제는 국회의 이러한 보편적인 권능과 기능에 완전히 부합되며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모순점</p>

우 리 측	북 측
<p>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귀측에 제의하고 거기에서 긴장완화와 전쟁방지 등 남북간의 시급한 당면문제들을 서로 진지하게 협의·해결할 것을 촉구하여 왔음.</p> <p>귀측도 지난번 제1차 집측에서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긴장완화와 전쟁방지 문제가 쌍방의 정부당국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솔직히 인정하였음.</p> <p>따라서 귀측이 진실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우리측과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구태여 남북국회회담에 그 문제를 상정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귀측 당국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회담에 빨리 동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도 없음.</p> <p>셋째로,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 행정당국에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용이하고 담보있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임.</p> <p>이미 1차집측 때에도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는 국회회담에서는 불가침의 필요성을 위한 해결방향과 원칙을 규재하며 당국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집행 조치를 예전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자는 것임.</p> <p>&lt;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gt;</p> <p>『4. 회담의제』</p> <p>의제는 쌍방이 내놓은 안을 다같이 의제로 설정하되</p> <p>ㄱ)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하여」</p> <p>ㄴ)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문제에 대하여」로 한다.』</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남과 북이 긴장상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임. 서로 교류를 하는 것도 우리가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결국은 이게 의제나 마찬가지로 됨.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이렇게 하면 의제가 무의제가 됨.</p>	<p>내가 제안을 내놓겠는데 긴장완화 문제로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할데에 대한 문제와 통일헌법 제정할데 대한 기구문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뭐 불가침에 대한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할 문제라 하니, 좀 일반화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즉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이렇게 단일의 제로 하나로 해서 하면 어떤가?</p>
<p>왜 그러냐 하면 전부 우리가 통일을 향하여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촉진하는 문제」가 되면 의제없이 모든 문제를 내놓고 다 이야기 하자는 결과가 됨.</p>	<p>이렇게 하면 쌍방이 내놓은 의견을 충분히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음. 불가침이란 이런 표현을 하지말고 통일헌법이란 이것도 그대로 하지말고 좀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것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에 주요한 하나의 방도로 되는데 동시에 불가침에 대한 공동선언 발표하고 조국통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임.</p>
<p>이렇게 했을 경우는 의제가 없이 정치문제를 토론하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개괄적임. 그렇기 때문에 의제라는 것은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함.</p>	<p>쌍방이 다 걸림. 그쪽 통일헌법 제정도 긴장완화하는데 복무하고, 동시에</p>
<p>구체화 시키는 방법중에 하나가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다 이렇게 됨.</p>	

우 리 측	북 측
<p>오늘 의제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합의가 안될 것 같음. 왜 안되냐 하면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개괄적이어서 무의제가 되니까 의제가 없어짐.</p> <p>(2차 예비접촉-토의)</p>	<p>조국통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임.</p> <p>(2차 예비접촉-토의)</p>

### 3. 본회담 형식

우 리 측	북 측
	<p>먼저 우리는 국회회담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는가, 다시말하여 국회연석회의 형식으로 하겠는가 아니면 국회대표 회담형식으로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봄.</p> <p>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은 이번 제안을 내놓으면서 국회회담을 쌍 방 국회연석회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국회대표회담형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밝혔음.</p> <p>연석회의라고 하면 서로 같은 권한 과 의무를 지니고 우리 최고인민회의 에 귀국회의원들이 연석하고 귀국회본 회의에 역시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 원들이 연석하는 방법으로 회담하자는 것이며 국회대표회담은 각 정당출신 국회의원들을 망라한 적당한 수의 대 표단을 구성해서 회담을 진행하는 방 법으로 하자는 것임.</p> <p>우리는 지금도 이 두가지 국회회담 형식중에서 어느 것이나 다 좋다는 의 견임.</p> <p>그런데 우리로서는 두가지 회담형식</p>

우 리 측	북 측
	<p>중에서 되도록이면 연석회의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임.</p> <p>명백한 일이지만 회담을 쌍방 국회 연석회의방식으로 하면 각당, 각파 출신국회의원들이 다수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대화를 보다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진행할 수 있고 문제토의에 각계각층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음.</p> <p>그리고 연석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귀측 국회의원들이 서로 광범히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북과 남사이에 호상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촉진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봄.</p> <p>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은 수의 국회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회대표회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계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면에서나 국회의원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원활히 해나가는데 있어서</p>

우 리 측	복 측
<p>그러니까 이쪽에서 100명이 가고 저쪽에서 100명이 오고, 연석회의할때 참석하자 하는 이런 제안이신데, 여러가지 그동안에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회의를 주재도 많이 하고 또 참석도 우리가 많이 해보며는 벌써 인원수가 많아지며는, 하나의 행사 내지는 이미 하부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가 거기에서 결정을 보는 이런 과정의 회의밖에 될수가 없다하는 것임.</p> <p>우리 국회만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라는</p>	<p>일정한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봄.</p> <p>이처럼 연석회의방식은 어느모로 보든지 국회대표회담형식 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회담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대표회담도 무방하지만 이왕이면 국회연석회의를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런 의견임.</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형식문제, 우리는 국회연석회의형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제기했음.</p> <p>말하자면 그래도 국회회담을 여는 바에야 좀 그져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가하는 형식을 선택해야 그래도 우리 인민의 의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음.</p> <p>그 다음에는 또 많이 참가하는 회담 형식을 갖추면 국회의원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광범히 접촉하고 이런 행정을 통해서 뿌리깊은 불신을</p>

우 리 측	북 측
<p>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여·야간에 의논이 되어가지고 결론이 내려져서 본회의에 가서 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100명이 오신다 할 때는 우리 국회로서는 376명이 되고 우리가 100명이 갔을 때는, 최고인민회의가 615명 되지요? 715명 되고,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실한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회담이라야 그쪽의 3개정당과 우리 3개정당, 여섯 개 정당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25명이 초과 하니까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잘 안됨.</p> <p>그래서 우리가 11명 쌍방이 11명씩 해서 22명 규모로 함으로써 진지한 토론도 하고 의견도 하자 하는 의견을 내어 놓았음. 그래서 연석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오손도손하게 실지로 의</p>	<p>해소하고, 민족적 화해를 도모하고 더 효과적으로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것임.</p> <p>지금 적십자 그쪽 선에서도 몇백명씩 지금 오고가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여기서야 무엇때문에 이렇게 너무 적게 규제 하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토의)</p> <p>〈북측제사 합의서 초안〉</p> <p>『1. 회담형식 국회회담은 국회대표회담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부 측
<p>건을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함.</p> <p>(1차 예비접촉-토의)</p>	

#### 4. 대표단 구성

우 리 측	북 측
<p>남북국회회담에 참가하는 쌍방의 대표단은 각각 11명으로 구성하며, 쌍방 수석대표는 국회의장이 지명함.</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북남국회회담은 나라가 분열된지 40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의원들의 회담이고 또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다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매우 의의가 큰 정치회담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따라서 국회회담대표들은 회담의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토의문제의 성격에 비추어서 각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협상을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우리 생각임.</p> <p>연석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국회의원 전원이 연석하면 제일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쌍방 국회의원 정원수에서 차이가 있고 또 회담운영에서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연석하는 측에서 약 100명 정도의 각정당출신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상대측 국회본회의에 참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p> <p>이 경우 연석하는 측의 국회의원들은 초청측의 국회의원들과 동등한 권한</p>

우 리 측	북 측
	<p>과 의무를 지니고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 같음.</p> <p>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 양될 수 있고 합의된 문제의 이행을 위 한 담보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p> <p>국회대표회담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가 귀측에 보낸 편지에서 제기한대로 각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 정당출신 국회의원들로 대표 단을 구성하되 지금 북과 남의 국회에 참가하고 있는 정당수를 고려하여 9~ 11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당 할 것 같음.</p> <p>그리고 대표단에 동행할 수원과 기 자들의 규모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국 회연석회의 경우나 국회대표회담의 경 우를 막론하고 수원은 20명 정도, 기 자는 50명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수석대표는 의장이 부의장을 지명할 수도 있음.</p> <p>(1차 예비접촉-토의)</p>	<p>단장문제인데, 그쪽으로 말하자면 수석대표임. 의장이 임명하는 분으로 정하자 이런 의견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음. 그쪽 의장은 가령 부의장을 지명했는데 우린 다른 분을 지명하고, 급수도 맞지 않고, 비교적 급수도 맞아야 되는데.</p> <p>따당히 의장이 책임을 지고 나와야지 의장이 누굴 임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남이 보아도 좋지 않음. 의장을 그저 단장으로 하자.</p> <p>(1차 예비접촉-토의)</p>
<p>수석대표의 급 문제는 상임위원장급 이상에서 융통성을 두는게 좋겠다고 생각함. 우리는 국회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함.</p> <p>(2차 예비접촉-토의)</p>	<p>〈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p> <p>『ㄱ) 대표단 단장은 국회의장으로 한다.</p> <p>나.) 대표단 단장을 포함하여 각 정당 출신의원 11명으로 구성한다.</p> <p>ㄷ) 대표단 수원은 20명, 동행기자는 50명으로 한다.』</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현실적으로 하자. 이것도 안되면 나중에 좀 비루자.</p> <p>(2차 예비접촉-토의)</p>	<p>의장이 어려우면 부의장으로 하자.</p> <p>(2차 예비접촉-토의)</p>

## 5. 본회담 실무절차

### 가. 회담장소

우 리 측	북 측
<p>쌍방은 남북국회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함.</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쌍방국회연석회의를 하는 경우는 자연히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하기 마련이고 국회대표회담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생각임.</p> <p>첫 국회연석회의나 국회대표회담을 하게 될 장소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평양에서 먼저 회담을 하고 다음 서울에서 하기를 희망함.</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 희망은 서울에 한번 모두 오셔가지고 처음 열었으면 좋겠음.</p> <p>(1차 예비접촉-토의)</p>	<p>첫 회담 장소문제인데, 우리가 제안하기는 평양에서 먼저하자 이런 제안했는데, 다른 의견 없는가?</p> <p>평양에서 하는 걸로 하자.</p> <p>(1차 예비접촉-토의)</p>
<p>제1차 남북국회회담의 개최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은 서울로 할 것을 거듭 주장함.</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p> <p>『(1) 북남국회회담은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p> <p>나) 제1차 회담은 평양에서 가진다.』</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나. 회담공개 여부

우 리 측	북 측
<p>기타 남북국회회담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쌍방의 협의하에 정함. (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데, 구체적인 문제, 운영방법의 원칙을 뒤 비공개로 하고 필요시 공개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회의진행상에 있어서 아주 실무적인, 사무적인 문제임. (1차 예비접촉-토의)</p>	<p>국회연석회의를 하는 경우나 국회대표회담의 경우냐를 막론하고 토의안건의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회담을 능률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원칙상 비공개회담으로 하고 필요할 때 쌍방의 협의에 따라 공개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임. (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때 공개로 하면 됨. (1차 예비접촉-토의)</p> <p>〈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 『회담은 원칙상 비공개 회담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의 협의에 따라 공개로도 한다.』 (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다. 보도 및 기록

우 리 측	북 측
	<p>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합의된 사항은 종전대화의 관례대로 공동합의 문건형식으로 작성발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음.</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p> <p>『회담에 대한 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며 합의를 본 사항들은 공동합의 문건형식으로 발표한다.』</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기록은 녹화도 좋고 속기도 좋고 쌍방이 편리한대로 함.</p> <p>(1차 예비접촉-토의)</p>

라. TV중계 편의제공

우 리 측	북 측
<p>중계하는 문제, 이걸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음. 방영문제는 좀 고려하자. 돌아가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음.</p> <p>(1차 예비접촉-토의)</p>	<p>텔레비중계를 초청자측에서 상대측까지 늘이자, 생방송 중계도 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도 있으니까.</p> <p>(1차 예비접촉-토의)</p> <p>〈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p> <p>『회의기록은 녹음과 녹화, 속기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초청자측은 상대측지역까지 녹음, 텔레비존중계선을 보장한다.』</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마. 왕래절차

우 리 측	북 측
<p>관례대로 하고 절차문제는 나중에 사무적으로 하자.</p> <p>(1차 예비접촉-토의)</p>	<p>국회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하게 되면 회담관계로 북과 남을 내왕하게 되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쌍방관계당국에서 신변 안전담보성명을 먼저 발표하고 그 성명문본을 사전에 서로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p> <p>내왕인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들은 신임장을 제시하고, 그밖의 수원이나 기자들은 신분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자,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에는 사진이 첨부된 명단을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 명단에 근거하여 서로 확인하면 되리라고 생각함.</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lt;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gt;</p> <p>『7. 래왕절차</p> <p>가) 회담관계로 북과 남을 래왕하게 되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 관계당국이 신변안전 담보성명을 발표하고 그 문본</p>

우 리 측	북 측
	<p>을 사전에 교환한다.</p> <p>ㄴ) 래왕인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담대표들은 신임장을, 수원들과 기자들은 신분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한다.</p> <p>ㄷ)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에는 사진이 첨부된 명단을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 명단에 근거하여 대조 확인한다.』</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바. 연락수단

우 리 측	북 측
<p>남북국회회담 추진에 따른 제반업무 연락을 위하여 쌍방간에 국회회담용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함.</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직통전화 가설을 1개월 이내에 하자.</p> <p>본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거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왜 그런가 하면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보내고 그것을 또 적십자 통해서 받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임.</p> <p>(1차 예비접촉-토의)</p>	<p>회담을 위하여 쌍방 국회사이에 통신연계를 가질수 있도록 국회회담전용으로 평양과 서울사이에 직통전화를 연결시켜서 운영하도록 하자.</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그건 좀 연구해 보자.</p> <p>우리 안은 앞으로 본회담이 열릴 때에 본회담 사업보장을 위해서 국회와 국회사이에 평양과 서울 사이에 직통전화 가설하자는 것임.</p> <p>(1차 예비접촉-토의)</p>
	<p>〈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p> <p>『9. 통신연락수단 회담을 위하여 쌍방 국회사이에서 국회회담전용으로 평양-서울 직통전화를 운영하도록 한다.』</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사. 편의보장

우 리 측	북 측
<p>편의보장 문제는 좋을 것 같음. (1차 예비접촉-토의)</p>	<p>대표단과 기자들이 상대측지역에 가 있는 기간에 제공되는 교통수단과 숙식을 비롯한 일체 편의제공은 초청자측에서 무료로 봉사하도록 하자는 의견임. (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 『8. 편의보장 대표단과 기자들이 상대측지역에 가 있는 기간의 교통수단과 숙식을 비롯한 모든 편의는 초청자측에서 무료로 보장한다.』 (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아. 회담날짜·주기

우 리 측	북 측
<p>쌍방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에 부응하여 남북국회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일시는 이 예비접촉의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결정함.</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지금 북남국회회담에 대해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큼.</p> <p>우리는 이러한 내외인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국회회담의 개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함.</p> <p>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우리는 국회대표회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차회의를 이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안에 열며 연석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겠으니까 이때는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2개월안에 하자.</p> <p>회담주기는 국회대표회담을 할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고 그때그때 정하자. 연석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쌍방에서 각각 1년에 2번정도하여 총 4번정도 하되 한회담을 1주일정도 하자 이런 뜻임.</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북측 제시 합의서 초안〉</p> <p>『10. 제1차 국회회담날자</p> <p>제1차 북남국회회담은 예비접촉이 끝난 때로부터 1개월안에 하되 구체적인 날자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협의결정한다.』</p> <p>(2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 6. 버마사건

우 리 측	북 측
<p>더우기 지금 남북한 사이에는 6·25 전쟁의 총소리가 멈춘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결관계가 침에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언제든지 또 다른 전쟁으로 폭발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p> <p>이같은 극히 비정상적이고도 위험한 관계는 계속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음.</p> <p>귀측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작년 「버마」에서 발생한 동족살상의 참극은 우리민족의 분단과 대결상이 빚은 엄청난 사건으로서 전세계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p> <p>우리는 이같은 사건이 나라의 밖에 서나 안에서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귀측 당국의 반성과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여 왔음.</p>	<p>오늘 그쪽에서, 첫 발언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 들었는데 발언 원고에 오늘 우리 분위기를 잘해야 되겠다, 대찬성임. 그런데 상대방 자극하는 이런 얘기 있었고 우리와 관계없는 이런 문제, 더구나 오늘 이 회의와 관계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급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대화의 분위기를 위해서, 대화의 전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없으면 하는 이런 걸 권고함.</p> <p>우리가 지금 모였으니까 우리가 회담을 잘하자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이고 또 관계없는 문제는 다시 하지 말자 이걸 좀 강조함.</p> <p>자극제를 좀 쓰지 말자.</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예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부 측
<p>우리는 이자리에서 지난 일을 파헤치고 잘잘못을 시비하고 싶지는 않음. 다만 우리가 오늘 「버마」사건을 환기시키는 뜻은 앞으로 그러한 민족자해 행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현실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자는데 있음.</p> <p>(1차 예비접촉-기조발언)</p> <p>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 뜻이고 앞으로 우리 회담을 잘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발언한 것임.</p> <p>(1차 예비접촉-토의)</p>	

# 1. 회담 의의 및 자세

우 리 측	북 측
<p>남북간의 40년 역사속에 기복이 많았음.</p> <p>우리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대화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임.</p> <p>일단 남북의 정치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p> <p>우리 정치인들은 새로 시작되는 남북 국회회담에서 민족의 당면 과제와 장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해결해 나가는데 응분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임.</p> <p>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쌍방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쌍방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구현시키는 방향에서 남북국회회담에 임해야 할 것임.</p> <p>오늘 이 접촉에서는 남북국회회담의 형식, 대표단 구성, 의제, 회담운영, 회담</p>	<p>북남 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우리들의 상봉은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진로를 열어 나가는데서 아주 고무적인 사태발전임.</p> <p>저레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엄혹한 시각에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대결과 긴장과 무력충돌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화해와 신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출발을 해야 할 것임.</p> <p>남북국회연석회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올림픽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해결되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되리라고 생각함.</p> <p>남북국회연석회의가 열리어 현안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면 북남관계는 민족공동의 이익과 통일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기초우에 발전하게 될 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의 길도 열리게 됨.</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일시 및 장소, 그리고 기타 실무절차문제를 협의·결정해야 하리라고 봄.</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4천만 전체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평화정착을 염원하고 있고, 교류하고 싶어하고, 불가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들이 불타고 있다는 이러한 기초위에서 이러한 기본위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음.</p> <p>(1차 준비접촉-토의)</p> <p>무엇보다도 접촉에 임하는 우리 쌍방의 자세가 상호 존중과 호양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p> <p>어느 일방의 생각과 주장만을 앞세우기 전에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p> <p>(4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하여 얘기하고자 함.</p> <p>첫째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서 느끼는 것이 여전히 넓은 관념과 사고방식에 집착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p> <p>이것은 자세와 입장문제이지 결코 뭐 실무문제 100명이나 200명이나, 무슨 10명이나 20명이나 하는 이숫자에 관한 얘기가 아님.</p> <p>지금 정세가 훨씬 변했음. 통일염원이 올라가고 있으며, 북에서도 남에서도 통일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각계 각층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p> <p>또 하나 새로운 정세는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그쪽 국회가 새로 출범했다는 것임.</p> <p>주변정세도 그새 많이 달라졌음. 대국들사이에도 어제까지 적대관계에 있</p>

우 리 측	북 측
	<p>던 나라들도 이젠 화해관계로 돌아서서 이제는 무장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핵무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휴양소를 건설하고 있음.</p> <p>이런 정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국회가 뭐 기능이 어떻다, 복잡하다, 효율성이 어떻다 뭐 이러면서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쪼물썩하게 남북관계를 이런 협상방식으로 다루자 한다면야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임.</p> <p>둘째,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건 민족주체적 입장에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p> <p>민족주체성을 살려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됨.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면서 둘로 갈라졌으며 이런건 지구상의 다른나라에는 거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을 종식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 특수한 민족문제를 안고 있음.</p> <p>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남의 방식, 남의 그 어떤 기능, 남의 해결방도, 남의 원칙,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문</p>

우 리 측	북 측
<p>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부로 부상되어가는 전환기적 국면에서 남북국회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자세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리라고 생각함.</p> <p>이제 남과 북은 단결과 대결이 아니라 노력과 화해만이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 민족의 진정한 통일을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음.</p> <p>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의 생각과 주장만을 절대화하기 전에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서로간의 차이점을 줄이며 공통점을 찾는 방향에서 접촉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함.</p> <p>자기 합리화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전가와 같은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 좁</p>	<p>제에 고유한 우리 민족감정에 맞는 이런 기능을 찾아야 되고 이런 원칙을 찾아야 되고 이런 방도를 모색해야 됨.</p> <p>(3차 준비접촉-토의)</p> <p>쌍방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은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과 통일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p> <p>우리 상봉의 진전을 위하여 몇가지 원칙적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려고 함.</p> <p>첫째로, 우리의 상봉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문제를 대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낡은 대결의 관념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입장을 견지해야 함.</p> <p>민족의 통일강령인 7·4 남북공동성명에도 명백히 지적되어 있는 바와같이 대화와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과 남</p>

우 리 측	북 측
<p>더 대범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모처럼 마련된 이 남북정치인들의 접촉이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p> <p>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절대화하고 책임은 상대측에 전가하려는 이른바 자세논쟁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무엇보다도 이 회담에 주어진 주제에 충실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호의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임.</p> <p>이제부터라도 쌍방이 남과 북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정치인들로서 그 사명에 충실한다면 이 접촉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합리점을 찾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함.</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함.</p> <p>둘째로, 우리는 민족 앞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에 충실해야 한다고 인정함.</p> <p>셋째로, 우리는 높은 성실성과 신의를 가지고 대화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p> <p>하루빨리 국회회담을 열고 올림픽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다음 상봉날짜를 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상봉에 대한 성실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음.</p> <p>쌍방국회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토의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인데도 이것저것 여러가지 의제를 제기하여 상봉 앞에 복잡성을 조성한 것도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라고 말할 수 없음.</p> <p>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민족주체적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다른 분단국들도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의 일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음.</p> <p>이러한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열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겪어온 분단의 불편과 고통은 조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p> <p>우리 정치인들은 이같은 민족의 불행과 비극적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서 응분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임.</p> <p>나는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 정신을 잘 살려 나가야 되리라고 믿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들이 대화를 시작한 이후 지난 4개월동안은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각성하여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음.</p> <p>민족분단사에 마흔세번째의 연륜이 새겨지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속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음.</p> <p>이러한 내외정세와 민족의 염원에 부응하여 우리 정치인들이 북남사이에 걸려있는 당면한 중대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의 무대를 마련한 것은 겨레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고무적인 사태발전이 아닐 수 없었음.</p> <p style="text-align: center;">(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남북국회회담은 쌍방 대의기관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인 만큼, 우리의 준비접촉을 하루 빨리 타결함으로써 다른 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p> <p>그러기 위해서는 쌍방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상대방의 권능과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상호존중의 정신에 기초하여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음.</p> <p>우리의 준비접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제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회담외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 회담진행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임.</p> <p>남북사이에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음.</p> <p>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리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대화가 열달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 이게 대체로 두가지 큰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봄.</p> <p>하나는 그쪽에서 의세와 함께 반대하는 전쟁행위, 군사연습을 강행해서 북남의 관계를 아주 침체하게 만들고 대화앞에 난관을 조성하고 그래서 대화가 중단됐다, 이런 총화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귀측이 책임을 느껴야 되겠다는 이거 하나하고.</p> <p>다른거 하나는 통일에 나선 사람들을 반공이라는 대결정책, 이런 정책으로 해서 또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의 대화가 상당한 정도로 중단되어 왔음.</p> <p>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진전시키고 앞으로 대화를 성공시키고 하자면 지금 대화는 대화대로 잘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여기에 지금 장애로 되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음.</p> <p>말하자면 죄없는 사람들 그쪽에서 내</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이 첫발언에서 회담중단 및 연기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대화분위기를 저론하면서 매우 부당한 요구를 해 온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p> <p>사실 지난 7차접촉이후 지금까지 회담이 중단되고 연기된 책임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귀측이 지난 여섯차례의 접촉과정에서 거론하지 않던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거나 예정된 접촉날짜를 일방적으로 무기연기시키는가 하면, 대화상대방인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이중적 태도를 취해온 데 그 원인이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8차 준비접촉-토의)</p>	<p>농도록 석방하도록 그쪽 국회가 옹당한 조치, 응당히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것임.</p> <p>이와 관련해서 귀측 발언에서 우리 대화의 어느 일방의 내부분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되고, 대화외적 문제를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화와 관계없고 대화에 장애를 주지않는 문제가 구내여 사실상 들고 나오지 말아야 됴 그건 대원칙임.</p> <p>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들은 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북남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세우는 것임.</p> <p>「팀스피리트」때문에 대화가 중단된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사실상 76년부터 13년동안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대화는 매번했지만 진진이 없었고 공전하고 했음.</p> <p>문익환복사·서경원의원·임수경학생 문제 이견 통일을 위해 우리들 한테 좋은 일을 위해 왔다간 사람들을 우리와 연관시켜서 옥에 가두고, 그 결과로</p>

우 리 측	북 측
<p>사실 지난 제8차 접촉은 중단된 지 10개월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리측은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회담에 임했음.</p> <p>따라서 기초발언을 통해 회담부진의 원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난 일들을 들춰내어 왈가왈부 논쟁을 벌이는 일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p>	<p>북남관계가 대단히 악화되고 또 귀측 자체가 이 문제로 해서 대화를 무기연기까지 시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화에 장애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임.</p> <p>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좋은 일한분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좋게 내놓고, 북남관계 석연하게 풀고.</p> <p>그래서 대화앞에 아주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니까 그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한 요청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8차 준비접촉-토의)</p> <p>오늘 세계적 범위에서 보더라도 자유와 민주, 화해와 단합,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로 되고 있으며 오랜기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분쟁문제들이 대화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해결되어 나가고 있음.</p> <p>그런데 하물며 단일민족인 북과 남 사이에 대결로 인한 불신의 장벽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열렸던 대화가</p>



우 리 측	북 측
<p>밝혔음.</p> <p>또한 우리들의 접촉을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제나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회담외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국회회담을 실현시킴으로써 온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자고 귀측에 촉구했던 것임.</p> <p>그러나 귀측은 우리측이 구체적인 합의서안까지 제시하고 절차문제 협의에 들어갈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회담과는 관계가 없고 우리 대표들에게 맡겨진 기본책무에도 벗어나는 문제들을 제기하여 심히 부당하고 내정간섭적인 주장을 뉘풀이함으로써 회담은 끝내 공전되고 말았음.</p> <p>40여년간 단절과 대치상태를 지속해 온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p>	<p>중단되는 곡절을 겪고 있으며 지어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박해해 나서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p>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더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중단되었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8차 상봉에서 대화에 장애로 되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하여서와 통일성업에 나선 사람들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귀측에 진심으로 권고한 바 있음.</p> <p>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대화 앞에는 의연히 장애가 조성되고 있음.</p> <p>이에 대하여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사태가 바로잡아지게 되기를 기대함.</p> <p style="text-align: right;">(9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존중하는 가운데 호양의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대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됨.</p> <p>남북대화는 모름지기 상호 이해와 노력을 위한 건설적인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이에 역행하거나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9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지난 제9차 접촉에서도 나는 우리 대표들에게 부여된 임무에 부합되게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p> <p>오늘날의 국제적 조류는 화해와 협력, 자유와 민주화의 방향으로 일대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변화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음.</p>	<p>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여러 번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상봉은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열리는 북남정치인들의 대화라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p> <p>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분열의 비극이 1990년대에 들어선 오늘까지 근 반세기동안이나 지속되어 오고 있음.</p> <p>이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p>

우 리 측	북 측
<p>지금 온 겨레는 남북간에도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세계의 관심과 이목도 진행중인 남북대화에 쏠리고 있음.</p> <p>지금이야말로 40여년간 지속돼온 냉전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임.</p> <p>(10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인도주의적 전지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음.</p> <p>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근 반세기를 갈라져 살아온 것만 해도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러한 비극을 다음 세기까지 연장시킨다면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물론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참으로 역사와 민족 앞에 커다란 한을 남기게 될 것임.</p> <p>더는 갈라져 살 수 없고 또 이대로 살아서는 안된다는 민족적 양심과 자각으로 하여 북에서는 물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 속에서 자주, 평화통일 기운이 날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절대로 무심히 내하지 말아야 함.</p> <p>(10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 2. 본회담 의제

### 가. 의제일반

우 리 측	북 측
<p>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측선수들의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참가 문제</li> <li>②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문제</li> <li>③ 남북당국간의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li> <li>④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문제</li> <li>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권고하는 문제</li> </ol>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진지하게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함. 경제회담을 열어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야 하고, 학생체육회담도 해야하고, 끊어진 철도도 연결해야 하고, 이런것들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 가야 함.</p> <p>지금 중핵적인 문제는 여러분과 교류를 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중핵적인 문제임.</p>	<p>연석회의 의제는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로 하며 그밖에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도 의제로 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이렇게 의제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음.</p> <p>첫째, 우리가 고려한 점은 국회연석회의에서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임.</p> <p>둘째, 우리가 고려한 점은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돌파구로 될 수 있는 그런 중심문제, 그런 절</p>

우 리 측	북 측
<p>또 올림픽문제 다급한 문제임. 빨리 해결 해야함.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의제로 올린 것임.</p> <p>(1차 준비접촉-토의)</p>	<p>당면의제로 설정해 본 것이며, 이것은 위의 문제와 연관됨.</p> <p>다 해결할 수 없다, 그 많은 중에서 북남관계 전반과 통일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해결하는데서 돌파구로서 될 수 있는 그런 중핵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당면한 아주 긴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그것을 우리 국회연석회의에서 협의·해결하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고, 그런 의도임.</p> <p>(1차 준비접촉-토의)</p>
<p>오늘 우리들의 준비접촉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종의 마를 거두어 역사적인 남북국회회담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일념에서 의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문제</li> <li>②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와 협력 문제</li> <li>③ 남북불가침 문제</li> <li>④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 재개문제</li> <li>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li> </ul>	<p>어제 귀측에서 여러가지 의제를 내놓았음. 이것은 기본문제 토의, 당면한 의제문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성과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는 것임. 우리가 지금 제안한 두가지 문제는 어디까지나 현 단계에서 북과 남의 국회가 모여 앉아서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초안의 문제들이고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스치고 자날 수 없는 긴박한 문제들임. 중핵적인 문제들인 것임. 이러한 두가지 문제가 풀리면 이</p>

우 리 측	북 한 측
<p>우리측의 이같은 새로운 의제안은 우리측 주장뿐만 아니라 귀측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공명정대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음.</p> <p>(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예비접촉에서의 의제문제는 그렇게 중요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함.</p> <p>본회담에 가서 의제를 놓고 진지하게 심도있게 깊이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의제의 선택과 의제의 명칭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함. 왜 그러나 하면 우리들이 남북국회회담을 갖고자 하는 기본적인 입장과 기조라는 것은 통일의 기반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긴장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또 민족의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큰 명제밑에서 남북간의 접촉과 회담을 갖고자 하는 피차간의 뜻이 있기 때문임.</p> <p>의제 명칭을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하</p>	<p>제 그쪽에서 제기한 이여의 문제들은 스스로 풀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음.</p> <p>(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의제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귀측에서 우리측 의제를 받아 들이면 간단한 건데, 귀측에서 의제문제를 양보안하는 것도 그 자체가 의제문제라는게 상당히 첨예한 문제라는걸 의미하는 것임. 그야말로 회의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함.</p> <p>의제문제에 대해 어떻게 오늘 타결해 보자는 입장에서 새로운 안을 제기함.</p> <p>첫째,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둘째,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에 귀측이 우리측을 초청한 문제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제, 셋째, 북남사이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로 함.</p>

우 리 측	북 한 측
<p>고 넘어가야 된다면, 이 회담의 성격이 자칫 잘못하다간 본회담의 성격과 비슷한 회담이 되고 말것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됐든 국회회담 본회의의 마당에서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의논하자 이런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측의 의제문제에 대해서 신축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봄.</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는 남북국회회담이 이달안에 열려서 첫째로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 문제 이것을 토의하고, 둘째는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 재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문제, 세째로 남북불가침문제, 네째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이런 네가지로 압축해서 상호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담을 열어 거기서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하자는 이러한 제안을 내겠음. 여기에 대해서 귀측의 호응을 기대함.</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다만 여기에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협력과 교류 실현에 관한 문제」는 위의 첫번째, 두번째 문제를 우리가 제안한대로 합의하는 조건에서 세번째 문제로 우리가 받아 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임.</p> <p style="text-align: right;">(2차 준비접촉-토의)</p> <p>오늘 그쪽에서 의제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대단히 복잡성을 조성하고 그에게 합의된 것을 뒤집어 엮는 것으로 되어있고 훨씬 후퇴한 것으로 되어 있음.</p> <p>올림픽 문제는 여전히 이미 합의된대로 「우리측을 24차 올림픽에 초청하는 문제하고 공동주최문제」 이렇게 정한대로 누르자는 것임.</p> <p>그다음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는 이미 합의된 것이니까 그대로 누르자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불가침 문제는 우리가 제기한대로 그쪽에서 제기한 그 어떤 불가침 협정에 대한 권고문제는 불합리하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측의 공동선언 발표문제에 다 포함되어 있고 수용되어 있으니까 철회하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 이렇게 하여 3가지로 정립하자는 의견을 제기함.</p> <p style="text-align: right;">(3차 준비접촉-토의)</p> <p>북남국회합동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토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남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li> <li>②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제와 제24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을 초청하는 문제</li> <li>③ 북남사이에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li> </ol> <p style="text-align: right;">(4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의제문제는 올림픽문제가 자동적으로</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은 회담의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제의함.</p> <p>①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문제</p> <p>② 남북불가침선인 문제</p> <p>③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할 것을 제의함</p> <p>의제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좀더 말하겠음.</p> <p>의제문제에 있어서는 쌍방간에 공통점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그 근본원칙은 쌍방이 하고싶은 문제, 현안문제는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었고 귀측의 8월의 서한</p>	<p>로 탈락된 조건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와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이 두가지로 하자는 것을 주장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에도 나타나 있었음.</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다음의 3개 항으로 함.</p> <p>①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의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다 각적인 교류·협력 문제</p> <p>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p> <p>③ 남북정상회담개최 문제</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남북국회 회담의 의제는 다음의 3개 항으로 함.</p> <p>①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 제</p> <p>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p> <p>③ 남북정상회담개최 문제</p> <p>(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의제문제에서는 이미 쌍방이 의견일 치를 보고있는 두가지 의제 즉 「북남 불가침선언 문제」와 「북과 남사이의</p>

우 리 측	북 측
<p>지난번 집측에서 쌍방은 두가지 의제, 즉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와 「남북불가침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차이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음.</p> <p>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p>	<p>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표현만 정리하면 되리라고 생각함.</p> <p>그리고 귀측에서 상정시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는 이미 2차 상봉때 귀측이 철회할 의사를 밝힌 바도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양쪽의 정상들이 만나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기 때문에 환경이 마련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봄.</p> <p>그러므로 북남국회가 구태여 그 문제를 토의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9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있음. 귀측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뒤로 미루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음.</p> <p>정상회담은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임.</p> <p>남북정상회담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국회가 그 기능에 맞게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남북의 정치인들이 다해야 할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함.</p> <p>이러한 견지에서 귀측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의제로 설정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p> <p>(10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문제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이 귀측선수들의 올림픽대회 참가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안한 것은 지난 7월 9일 우리측 국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대회가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일대 세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p> <p>우리는 이 기회에 남북이 서울에 모여 함께 올림픽을 통일로 향한 민족의 제전으로 만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p> <p>남북선수들이 개폐회식 입장시 오륜기를 앞세우고 각기 자기측 국기를 들고 함께 대열을 이루면서 행진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민족의 일체성을 반방에 과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p> <p>우리측은 올림픽 개막직전까지 귀측에 올림픽참가의 문호를 개방해 놓을 것이며, 귀측이 참가의사를 밝혀올 경우 동포애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대회 전기간을 통해 최대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것입니다.</p>	<p>눈앞에 다가온 올림픽경기문제도 분열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스포츠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문제로서 민족공동의 이익과 통일의 염원에 맞게 해결되어야 함.</p> <p>실로 불가침문제나 올림픽문제는 통일도상에 나서는 초미의 민족중대사이며 일순의 유예도 허용치 않는 긴절한 과제임.</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이 상봉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를 권고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참가하는데 대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야 함.</p> <p>북에서도 남에서도 전민족이 관심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 문제임.</p> <p>우리 전민족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이념에 맞게, 어떻게 유익하게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이미 우리측은 귀측 선수단의 올림픽참가에 대비하여 선수단 입장 및 시상시에 필요한 귀측의 국기와 국가는 물론 귀측선수단 및 기자들을 위한 숙소를 선수촌, 기자촌 및 호텔 등에 확보해 놓는 등 모든 준비를 다해 놓고 있음.</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올림픽참가문제는 우리 국회가 결정을 못함. 그러나 우리 희망은 체육회도 있고 정부당국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 공동결의로 참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p> <p>(1차 준비접촉-토의)</p> <p>「올림픽문제」는 다른 의제와는 달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초미의 문제임.</p> <p>시기적으로 볼 때 서울올림픽대회의 최종엔트리 마감이 9월 2일로 박두해 왔고 문화올림픽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각국 선수들이 속속 들어와 준비까지</p>	<p>개막을 앞둔 제24차 올림픽 경기대회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과 통일염원에 맞게 해결하는 것은 북과 남의 정치인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제임.</p> <p>조선에서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체육축제를 치루자면 분열이 아니고,</p>

우 리 측	북 한 측
<p>하고 있는 실정임.</p> <p>우리 쌍방은 그 시기를 놓침으로써 내외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임.</p> <p>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올림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달안에 남북국회회담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본 준비접촉이 조속히 타결될 것을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올림픽 공동주최문제는 「로잔느」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올림픽대회의 주관자인 IOC의 현장상으로나 지금까지 올림픽을 개최해온 관례상으로나 이진 안된다는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문제임.</p> <p>지금와서 이 올림픽 공동주최문제를 남북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남북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p>	<p>통일에 도움이 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게 해야하고, 그러자면 24차 올림픽 경개대회를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으로 주최해야 함.</p> <p>올림픽 문제와 관련해서는 귀측에서 우리가 제의한대로 「제24차 올림픽 경개대회문제」로 수정해서 나온것은 아뿔다 다행한 일로 생각함.</p> <p>내용상으로 남북주최를 받아들였다면 더욱 좋겠는데, 그점에서는 견해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올림픽개막식도 20여일 밖에 안남은 현 시점에서 공동주최를 논의해 봐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됨.</p> <p>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적 대화해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른다고 하면 이것은 21세기의 세계 역사를 우리가 주도하는 주역국가로서 세계무대속에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초 우리 국회서한에서의 의지를 담아 북한선수들이 참가를 해 주라는 것임.</p> <p>공동으로 하는 것이 월등 유리하다고 봄.</p> <p>서울이 올림픽을 '81년 「바덴바덴」 총회에서 유치했음. 그때부터 공동하자 하면 얼마든지 되었는데, 절대 서울개최는 안된다고 국제회의때 마다 깎았는데, 지금와서 뒤늦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없음.</p> <p>(2차 준비접촉-토의)</p>	<p>도대체 단독올림픽을 하는 것과 공동주최를 하는 것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대답하여 주기 바람.</p> <p>(2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다른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올림픽문제 하나만을 다루기 위해서 이달안으로 국회 본회답을 한번 하는 게 좋겠음. 그 회답에서는 「24회 올림픽 경기대회」 이렇게 의제를 해가</p>	<p>공동주최가 월등하다면 우리가 직후에 제기했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든지 있었음. 어쨌든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가?</p> <p>공동주최가 월등하다는 것은 인정한 셈임. 분열된 북과 남의 현 상황을 고려해서 북과 남 사이에 공동주최에 합의하면 IOC는 반대 못할 것임.</p> <p>시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음. 우리가 준비가 다되어 있는 조건에서 예하면 이제 그쪽에서 『서울에 오기만 하면 된다』어떻게 되지 않는가? 간단함. 공동주최에 합의하면 마찬가지로 그만큼 간단함.</p> <p style="text-align: right;">(2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가 제기한 제1차 북남국회 연석회의를 8월 6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데 합의하면 됨. 올림픽문제가 현안문제라는 것은 우리도 더 잘 알고 있으며 또 여기에 날자를 늦추고 초청문제만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p>

우 리 측	북 측
<p>지고 우리가 제기한 올림픽에 북한선수들을 초청하는 문제와 그밖에 귀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모든 점을 다함께 한번 검토하는, 또 논의하는 그러한 국회 본회담을 이달 29일 평양에서 한번, 올림픽문제만을 따로 다루는 본회담을 29일 평양에서 하자 하는 결 정식으로 제의함.</p> <p>8월 29일 평양에서 각기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현안의 제로 올림픽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으로, 회담형식은 물론 대표회담임.</p> <p>(2차 준비접촉-토의)</p> <p>남북긴장완화나 교류문제는 지금 40년간 문제가 되어 왔으니, 그것도 긴급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토의를 해도 좋으나 초미의 근본은 올림픽의 대제전에 160여개국에 다 참석하고 동·서를 초월해서 모두가 모이는데 북한팀이 같이 못 온다는 것이 속이 섭섭해서 우리 민족적 의지를 담아 가지고</p>	<p>임.</p> <p>(2차 준비접촉-토의)</p> <p>어제 토의한 과정에 올림픽문제와 관련해서 귀측에서 제기한 안(案) 하고 제24차 올림픽대회에 우리 북측 선수를 초청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제의한 올림픽공동주최문제, 이 두개를 병렬해서 하나의 의제로 만들자 하는데 합의된 건데,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음.</p>

우 리 측	북 측
<p>여러분에게 몇번 호소했음. 호소를 했는데, 이 호소를 안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다른 정치적인 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됨.</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의 긴급의제로서 제24회 서울올림픽문제만이라도 시급히 협의·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불과 며칠 후로 다가온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족화합의 일대전기를 마련하는데 그 참뜻이 있음.</p> <p>올림픽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달리 시급을 요하는 초미의 과제이며, 이달</p>	<p>제일 처음 귀측에서 올림픽문제 제안에 이렇게 내놓았느냐 하면 우리 안 모두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문제, 이 하나를 올림픽의정으로 했음. 대단히 일방적이었음.</p> <p>이제 이른바 수정했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올림픽경기문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상 자기것을 원래 취소해야 됨.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는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수정이 아님.</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이 2차상봉에서 올림픽경기대회 문제만을 토의하기 위해서 오는 8월 29일 평양에서 남북국회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금번 상봉의 근본취지에 심히 배치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의 토의가 무의미하게 될 것임. 그것이 현실임.</p> <p>올림픽문제를 우선 협의·해결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개최하고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올림픽문제에 관한 토의가 끝난 후에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올림픽문제 협의를 위해서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국회회담에 쌍방에서 각각 20명의 대표가 참가하고 40명의 지원인원과 50명의 취재기자를 동행시키며, 체류기간은 3박4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함.</p> <p>대표단의 남북왕래절차문제, 신변안전문제, 판문점 통과문제, 편의제공 등 기타 제반실무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바라는 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함.</p> <p>(3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우리 남쪽에서 얘기하는 공동주최라는 그러한 어휘의 사용은 귀측에서 말하는 공동주최라는 뜻이 아님. 함께 우리 민족이 어울려서 올림픽을 하자는 것임.</p> <p>귀측에서 말씀하시는데로 서울에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를 두고, 평양에 따로 두자는 것이 아님. 민족내부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한반도내에 올림픽을 두군데에나 갈라 놓을 수 없음.</p> <p>IOC현장이나 IOC에서나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양쪽측에서는 우리 그거 반대다, 어디선가 한군데서 해야된다하고 나오는 것이 이게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함.</p>	<p>올림픽문제를 우리가 두개 나라가 두개 깃발을 들고, 공화국은 공화국 깃발을 들고, 남쪽은 남쪽깃발을 들고 그대로 일렬로 서서 하자는 게 도대체 민족의 양심이 있는 소린가, 이게 의심스러움.</p>
<p>(3차 준비접촉-토의)</p>	<p>(3차 준비접촉-토의)</p>
<p>이번 올림픽대회문제는 귀측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 바와 같이 초미의 문제임.</p> <p>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는 앞으로 26일이 지나면 개막식을 갖게 되어 있으며 더욱이 9월 2일은 올림픽 참가선</p>	<p>29일에 따로 이 문제를 위해서 연석회의를 열자고 하는 것은 후퇴임.</p> <p>이것은 의제를, 의제내용을 분산시키는 것이요, 문제해결을 더욱 후퇴시키고 연장시키는 것임.</p> <p>그리고 본질에서 우리가 의심하는</p>

우 리 측	북 측
<p>수들의 조편성 조정을 마감하는 시한으로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음.</p> <p>따라서 올림픽문제야말로 이 국회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의제로 되어 있는 불가침문제를 위시한 다른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것은 올림픽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 또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예비접촉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같이 해주시길 바람.</p> <p>우리는 이미 본회담 개최일자에 대해서 귀측이 8월 26일을 원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측의 긴급제의를 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회담형식과 의제문제를 놓고 상호 의견 접근 없이 준비접촉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p>	<p>것은, 우리가 26일 국회연석회의를 가지자는 우리 제안을 무산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짐.</p> <p>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토의의 속도를 높여서 「26일 평양에서 국회연석회의를 가지는 문제」로 합의를 누르면 되는 것이지, 무엇 또 다른 것을 탄생시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3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수 만은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임.</p> <p>민족적 대사인 올림픽 문제를 남북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협의·해결한다면 불가침이나 교류·협력 등의 다른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리라고 기대함.</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는 공동개최라 할 것 같으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임.</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원래적으로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협의에서 귀측이 공동주최안 하고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올림픽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하고 통일을 하는데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한데 대해서 오직 공동주최가 훨씬 우월하다고 했음.</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그쪽에서 이제 논리전개가, 서울하고 뽕양에서 따로 따로 조직위원회 구성하자는 것은 어떤 분열된 것이다 했는데, 그 논리전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음.</p> <p>서울하고 평양이라는 곳이 이국이나</p>

우 리 측	북 측
<p>올림픽문제에 관해서는 귀측도 「초미의 민족 중대사」 또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는 말로써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본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한 8월 26일 바로 오늘</p>	<p>이민족이 아님.</p> <p>한 나라 안에서 한 민족안에 두 뿌리, 두 조직, 가지자는 뜻이지 두 나라안에 두 조직 가지자는 뜻은 아님.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야 함.</p> <p>공동주최를 하면 북과 남사이에 개방이 되고, 수만이 왔다갔다 하게 됨. 그리고 공동주최라는 이 자체만 해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기여하는 것이고, 통일에 기여하는 것임.</p> <p>그쪽에서 하는 일방적인 강행, 일방적인 올림픽 그것은 분명히 대결에 복무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3차 준비접촉-토의)</p> <p>연석회의를 빨리 열고 올림픽문제를 긴급의제로 먼저 토의하는 모든 일이 순차대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올림픽문제만을 따로 다루는 대표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새로운 논쟁점을 자꾸 만들어서 초점을 분산시키고</p>



우 리 측	북 측
<p>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p> <p>우리는 올림픽문제 토의를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기적 절박성을 고려하여 오늘 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우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협의·해결하기 위한 우리측의 8월 29일 평양회담 개최 여부를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함.</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지금까지 귀측에서 말한 것을 종합해서 들으면 올림픽문제 하나만을 다루는 8월 29일에 하자고 한 우리측의 긴급제의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일단 그렇게 우리는 받아 정리할 수 밖에 없음.</p> <p>그것은 왜 그리나하면 지금까지, 지금도 또 확실히 말했지만 회담형식이 북측에서 제의한대로 그런 내용의 합동회의가 빨리 열리면 거기에서 제1차 회의에서 긴급의제로 올림픽을 토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제하고</p>	<p>그렇게 함으로서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음.</p> <p>북남국회합동회의 제1차 회의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함.</p> <p style="text-align: right;">(4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올림픽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서울 초청문제 하나만 토의하자고 아주 불공정하게 일반적으로 제기했는가 하면, 후에는 그것이 논박당하니깐 그것을 일반화 했는데, 그것도 다시 북합의제로 했고, 다시 또 수정해서 올림픽문제만 단독으로 하자고 했고, 이제와선 또 올림픽 단일의제로 하자고 하고 대단히 번잡하게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함께 다루는 제1차 회의에서 같이 다루자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회의형식에 대해서 합의를 못보면, 그 회의가 안 열리면 올림픽문제는 토의를 못한다 이 말로 해석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올림픽문제가 급하니까 빨리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도 동감임. 빨리하자는 것임.</p> <p>그런데 그쪽에서는 바로 이것을 국회대표회담에서 하는 것이요, 우리는 국회연석회의에서 하자고 주장해 왔음.</p> <p>이 문제 이제 합의되지 않았음. 이것이 또 우리 상봉에서 쫓점이며 핵으로 되는 것임.</p> <p>이것이 정립되지 않고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은 우리 상봉 토의와 앞으로 국회연석회의 앞에 혼란을 조성하자는 것임.</p> <p>이것 결정안하고 어떤 특정한 문제를 분리시켜서 또 어느날에 한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국회연석회의는 날라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도 대답할 수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자꾸 긴박한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회담형식이 귀측에서 제의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연석회의적 성격을 갖는 그런 합동회의가 아니면 안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렇지 않다고 함.</p> <p>이렇게 자꾸 서로간에 말이 엇갈려가지고, 속된 얘기로 서로 우겨대는 것과 같은 이런 내화가 왔다 갔다 하면 안됨.</p> <p>올림픽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고, 또 올</p>	<p>합동회의를 열고 거기 참가대상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배제하고 보류하고 이렇게 하자 했으니까 여기에 합의하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합동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올림픽문제를 제1차 의정으로 하자, 제1차 의정으로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별도로 하자는 것과 본질에서 같음. 선차적으로 토의 하자는 것과 같음.</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올림픽문제는 우리가 오늘 합동회의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빨리 소집하고 그날 제일 첫 의정으로서 올림픽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림픽문제야말로 양측에서 선뜻 합의만 하면 빨리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이 문제만이라도 20명이면 20명, 대표가 모여서 귀측에서 정말 회담준비가 될 수 있는 그 시일을 택하되, 우리가 「엔트리」 마감이 9월 2일이니까 그 이전에 쌍방 대표간에 상봉을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의견을 제시해주고 얘기를 하겠다고 해야지, 말로만 단장선생님이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자꾸 뒤로 넘기면 우리 측에서 회의진행의 가닥을 정리할 수가 없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바람.</p> <p>(4차 준비접촉-토의)</p> <p>9월 2일까지, 「엔트리」마감까지 어떻게 민족공동체로서의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렇게 회담해 왔음.</p>	<p>그쪽에서 정당·단체문제에 대해서 논박을 했으므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했고, 명칭문제 이것도 그쪽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한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대폭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 적어도 타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으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아무런 진전 없음.</p> <p>이것이 해결됐다면 올림픽문제도 우리가 며칠사이에 긴급의제로 상정하고 능히 그것도 타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p> <p>(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그렇다고 해서 귀측이 내놓는 문제를 토의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타이밍」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덜 급하고, 9월 2일까지 올림픽은 급하다 해서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 들었는데 아무리 날짜를 빨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때, 9월 2일까지 본회의를 마치기는, 상당히 어려움. 올림픽문제 이것을 가지고는 이 초미의 급무를 불모로 잡아가지고 회담형식에 동의시킨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p>제안을 하겠음.</p> <p>9월 2일안이라도 올림픽에 관해서 무슨 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해주면 올거고, 안그러면 좀 연락을 해서 10월에는 꼭 상봉을 하기 바람.</p> <p>그러니까 총정의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분이라도 열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p> <p>그래서 날짜에 관해서 만일 9월 2일</p>	<p>출로는 지금 열리게 되어 있는데, 해결책은 지금 있는데 오늘 귀측에서는 아무런 양보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음 회의날짜, 상봉날짜를 10월로 넘기자고 함.</p> <p>다음 상봉날짜를 10월로 넘긴다는 것은 결국 올림픽문제는 날려 보내겠다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의하고 엄중시하지</p>

우 리 측	북 측
<p>전이라도 이번에 귀측에서 부를 차려 니까 혹시 올림픽문제가 급히 되겠다 이런 전망이 보이면 연락하면 언제든 지 달려오고 좀 기다리겠음.</p> <p>그외에는 우리 사정으로 10월에 들 어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임.</p> <p>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길게 시작되면 선전전으로 오고 감.</p> <p>귀측의 합동회의 「아이디어」를 못받 아 들이니까 10월로 넘기자는 것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않을 수 없음.</p> <p>이걸 위해서 우리가 네번 접촉해서 싸웠는데 이제 와서는 올림픽문제를 버리고 10월로 이 상봉을 넘기자는 것 은 무책임한 얘기임. 우리가 여기에 대 해서 대단히 엄중시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올림픽문제는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동주최안이나 또 소위 IOC가 조정안 으로 내놓은 분산개최문제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불가능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민족대 화합의 차원에서 북측선수들이 서울을 림픽에 참가해 주라는 것이 당초 우리 국회가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보낸 서 한에 담겨져 있는 뜻임.</p>	<p>올림픽문제는 대단히 아주 긴박한 문제로 상정되어 있음.</p> <p>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연석회의와 관련된 형식문제에 서 대폭 양보하면서 회의를 성사시켜 서, 국회합동회의라는 이런 형식으로 빨리 성사시켜서 올림픽문제를 첫 의 정으로, 긴급의제로 상정시켜서 협의· 해결하자고 했음.</p>

우 리 측	북 측
<p>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보낸 이후 벌써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내일이면 제주도에 회람에서 떠난 성화가 도착을 함.</p> <p>그리고 이제 9월 17일까지 불과 20일 전후 남은 이 시점에서 공동주최나 분산주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짐.</p> <p>따라서 최종 선수조정하는 마감일이 9월 2일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북측에서 선수들을 참가시키고, 지난 사마란치의 최종 중재안대로 입장도 마지막에 주최국의 입장에서 같이 입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임.</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에서, 국제사회를 너무 모름. 올림픽위원회라는게 우리 마음대로</p>	<p>이제 그쪽에서 올림픽문제는 서울에 오면 된다고 하는데 앞서 대화에서, 앞서 상봉에서 그쪽에서 인정한 것처럼 민족의 이익을 위하고 민족공동의 이익,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는 일방적 초청이 좋으나 하는데 대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우월하다는데 대해서 인정을 했음.</p> <p>이 논리대로 한다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내놓은 초청이라는 것은 철회하고 공동주최문제만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옳음.</p> <p>그러면 해결책도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과 남사이라는 민족이 분열된 조선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합의점을 모색하면 현장에 관계없이 자기는 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걸리는게 하나도 없음. 우리는 준비 다 되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p>이 문제 결정권은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민족위원회도 아</p>

우 리 측	북 측
<p>하는 게 아님.</p> <p>167개국, 쿠바도 들고 다 들어가 있음. 우리 민족이 수십억 인구를 마음대로 못함. 사마란치가 우리 민족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무리 뒤져 보아도 없음.</p> <p>그리고 나라가 하는게 아니며 민족이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가 함. 올림픽이라는 것은 도시가 하는 것이지 민족하고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님.</p> <p>(4차 준비접촉-토의)</p>	<p>닌 우리 조선민족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우리가 합의하면 다 되는 것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지금 그쪽에서 양보를 하면 되는데 양보할 가능성도 없음.</p> <p>일이 40년 해결 안된 문제가 상정이 되었으니까.</p> <p>10월에 다시 웃고 만나고 올림픽문제에 무슨 구체성이 있으면 오늘 오후도 좋다 이런 입장임.</p> <p>현실적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데, 안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내일하자 29일하자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봄.</p>	<p>어제서 올림픽문제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자꾸 말하면서, 이제와서 그걸 남조선내부사정이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10월로 넘기자 이렇게 나오는가?</p> <p>(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서로 연구하고 또 자성하고 그래서 10월에 또 만나자는 것임.</p> <p>우리는 올림픽을 치러야 됨. 다 뻔한 얘기 가지고 자꾸 그러지 않는게 좋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p>준비접촉 다섯사람 만나서도 의제 채택, 회담형식, 실무절차도 합의를 못하는 이 판국인데 이 올림픽을 가지고, 지금 귀측에서 얘기하는 큰 천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로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p> <p>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본다면 회담형식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봐서, 그렇다며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이 민족축제의 하나인 이 올림픽을 성대하게 또 그리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정말 정중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p>	<p>첫째는 오늘 4차 접촉으로서 올림픽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물러나자고 하는걸로 우리 인정해도 좋은가 이것 하나 하고, 둘째는 귀측에서 오늘 접촉으로 이것을 중지하고 10월로 넘기자고 하는 이것은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외국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공동의 중대사를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이해해도 좋은가 두가지 좀 대답해 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10월달로 넘겨서 그동안 또 우리가 통일문제라든가 불가침문제 진지하게 4당이 또 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갖고, 해가지고 새로운 자세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제의를 한 것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분명하게 우리 수석대표께서 「올림픽」을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을 감안을 하면서 성사시킬 수 있는 진일보된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내일도 좋고 심지어 오늘 오후에라도 토의를 하자 언제든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p> <p>우리측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아는바와 같이 9월 2일이 「엔트리」마감임. 그 이전에 만나야 됨.</p> <p>그러나 이것이 성사가 안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논쟁만 하고 여기에서 합의점을 발견못할 것이 뻔하다면 9월 2일 이전에 만나도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임.</p>	<p>다음 5차 접촉을 우리들이 8월중에 하자고 계속 말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다른 방법이 없음. 그러나 어쨌든 「올림픽」은 중대한 문제, 긴요한 문제임.</p> <p>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 강조함.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5차 상봉이 늦어지는 것으로 해서 올림픽을 날려 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귀측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함. 이걸 명백히 밝힘.</p> <p>(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라든지 불가침 문제 이런 중대한 문제가 정말 외국손님을 맞이해 가지고서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한 그 문제보다는 가벼운 문제나,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음.</p> <p>다 여러가지가 전부 중요함, 민족문제 더욱 중대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40여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 왔음.</p> <p>한달쯤 서로간 양측 의견을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10월에 만나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는 건 큰 잘못이 아님.</p> <p style="text-align: right;">(4차 준비접촉-토의)</p>	

다. 남북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문제 (적십자·경제회담 재개문제)

우 리 측	북 측
<p>남북국회회담에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의 차원에서는 물론 남북간의 긴장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것임.</p> <p>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긴장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사회·문화·경제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게 될 것임.</p> <p>이를 위해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들의 교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해외동포들의 남북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가 개방되어야 함.</p> <p>남북 모든 동포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통해 상부상조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해야 할 것임.</p> <p>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남과 북도 서울·</p>	<p>교류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제기했습니까? 역사적으로 270여 회를 제기했음.</p> <p>북남회담, 적십자회담·경제회담 이것들이 어떻게 결렬되었습니까? 바로 대결의 산물로써 그렇게 되었음. 대결의 희생물로써 그렇게 되었음.</p> <p>우리 이제 다시 국회회담을 열어서 어떻게 하나 완화의 길에서 이것이 열리면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한 측
<p>평양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민족내부의 경제협력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정부당국에 권고를 해야 함.</p> <p>이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의 재개에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하리라고 생각함.</p> <p>우리 국회의원들이 중단된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함.</p> <p>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유독 우리 동포만이 분단의 장벽을 이유로 끊어진 혈맥을 잇지 못하고 상호간에 안부편지 한장 주고 받을 수 없는 오늘의 비극적인 상황은 시급히 우리 손으로 극복되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인적·물적 교류분제도 역시 「촉진하는 문제」임.</p> <p>우리가 정부당국에 그러한 교류를 빨리하도록 촉진해야 되는 데 우리로</p>	<p>인적·물적 교류문제, 이게 권고를 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적·물적 교류와 관련되어서 우리 국회연석회의나 국회대표회담이 그 어떤 결정, 규</p>

우 리 측	북 측
<p>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평양과 서울에 상호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이러한 대표부, 이름은 뭐든지 좋음.</p> <p>남북간에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촉구하는 문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문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권고하는 문제, 우리가 대통령한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음. 우리가 권고하는 문제임. 거기도 마찬가지로일 것임.</p> <p>(1차 준비접촉-토의)</p> <p>인적·물적교류 이거야 말로 서로간에 있었던 많은 오해, 누적된 오해를 씻고 그리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초미의 과제일뿐만 아니라 그야 말로 귀측에서 쓰시는 중핵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임.</p> <p>(2차 준비접촉-토의)</p>	<p>정적인, 규제적인 이러한 결정을 채택 하자는 것인가?</p> <p>(1차 준비접촉-토의)</p> <p>그쪽에서 인적·물적 교류문제를 제기했는데, 조금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적·물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각 방면에서 다 염두에 두어서,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이렇게 하면 좀 더 폭이 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함.</p> <p>경제만이 아니라 문화도 염두에 두는 것이고 나아가서 정치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인사교류도 염두에 두는 것</p>

우 리 측	북 측
<p>수백만의 이산가족들이 지금 울고 있음.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서로 교류할 것을 질서정연하게 교류할 것을 원하고 있음. 종교인도 그렇고, 체육인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른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조건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상호간의 입장을 한번더 깊이 생각해야 됨.</p> <p>(3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이고,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번째 협력문제는 그 쪽에서 제기한 문제를 고려해 넣은 것임.</p> <p>(2차 준비접촉-토의)</p> <p>이산가족문제 아주 귀중함. 그것을 풀어야 됨.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가침문제와 같은 긴장완화분제와 분리시켜서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 이산가족 문제 풀자 이견 안됨.</p> <p>(3차 준비접촉-토의)</p> <p>인적·물적 교류문제, 이것은 쌍방이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문제로 합의해 놓고 다시 또 후퇴해 가지고 인적·물적 교류 문제로 하자고 하지 않았는가?</p> <p>회담제개문제도 인적·물적 교류문제와 함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안에 포함시키자고 양해도 하고 우리하고 합의 해 놓고, 3차에 와서는 적십자회담</p>

우 리 측	북 측
<p>우리 정치인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현안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임.</p> <p>그것은 지난 43년동안 남북간에 쌓이고 쌓인 두꺼운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대화의 재개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에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함.</p> <p>동서가 문을 열고 교류·협력하면서 화해를 도모하고 있고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사이에서도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역사적 추세속에서, 우리 민족만이 단절의 벽을 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p> <p>우리는 남북이산가족을 포함한 겨레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진 이 교류·협력문제를 그리고 세계 사람들도 바라는 이 긴요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과 경제회담을 비롯한 인적·물적 교류 협력문제라고 다시 또 들고 나왔음.</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재개문제는 이미 양측이 남북사이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한 조건에서 구태여 기존회담재개문제를 명문화하지 않고 다만 북남사이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로 정립하면 되리라고 인정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귀측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제속에 『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분명히 밝히자는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p> <p>이것은 또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과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봄. 여러가지 회담을 자꾸 새로하고 새로하기 보다는 있는 회담이라도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생각함.</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북남사이에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때 대한 문제를 의제로 정립하면 귀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대화 재개문제, 인적·물적 교류문제 등을 다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음.</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이란 것은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문화나 외교나 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교류한다는 뜻임.</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에서 내놓은 의제로서는 첫 번째 의제이고 귀측에서 내놓은 것은 둘째 번째 의제인데, 말씀하신 다방면적 교류 문제, 그앞에 우리들이 내놓기는 남북적십자문제하고 경제회담문제, 기존 회담재개임.</p> <p>이것을 말하자면 의제에다 명시를 해주는 것이 그 문제가 일단 중단된 것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넣은 것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측은 귀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제 ① 항을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의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하는 바임.</p> <p>오늘날 남북관계에서 가장 절박하고</p>	<p>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방면적 협력·교류하면 그것이 다 포괄된다는 것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p>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라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호상이 인정했으니까 서로 그 의제안에 중단된 적십자와 경제 회담 재개문제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을 기록에 처리하도록 함. 우리 담보함.</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재개문제를 의제안에 명기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놓은 「북남사이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귀측도 이</p>

우 리 측	북 측
<p>중요한 과업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손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임.</p> <p>더우기 1천만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경제회담의 재개는 그 자체가 신뢰회복의 중요한 징표임.</p> <p>그러기 때문에 국회회담 의제에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남북한 신뢰회복에 대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결의를 공동으로 천명하고 그 길을 터주자는 것으로서, 우리의 접촉을 지켜보는 온 겨레의 여망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일인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측이 지난 7차 접촉때 수정제의 한 의제 제1항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의 재개분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에 관해서 말하겠음.</p> <p>이것은 「교류와 협력문제」앞에 있는</p>	<p>사실에 유의하고 이미 2차 상봉때 철회하였던 문제이며 지난번 제6차 상봉 때에는 우리측이 내놓은 의제안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한데 대하여 귀측도 기본상 양해를 표시한 문제이므로 우리 안대로 확정하면 되리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귀측이 주장하는 기존대화를 재개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확인하는 조건에서 구태여 그것을 밝</p>

우 리 측	북 측
<p>「인적·물적」이라는 말대신 「다방면적」이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강조한 귀측 주장을 우리측에서 충분히 수용하여 수정 제의한 것이었음.</p> <p>우리측은 지금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이 진행중에 있고 여기서 본회담 개최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제 제1항을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로 다시 수정 제의함.</p> <p>(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봄.</p> <p>이 문제는 오늘 발언에서 본질적으로 우리제안을 그쪽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봄. 이견 거의 합의에 도달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함.</p> <p>(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라.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남북국회회담 의제로서 남북 당국간의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를 제안한 것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조성과 함께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음. 선언보다는 협정이 더 법적구속력이 강함. 협정이 더 안심될 수 있는 장치임.</p> <p>우리는 남북국회회담에서 남북불가침에 관한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쌍방 당국에 맡겨 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함.</p> <p>이것은 귀측의 의향에도 맞고 쌍방 국회의 권능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함.</p>	<p>평화에 대하여 말들은 많이 되고 있으나 북과 남은 의연히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방대한 부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며 매우 불안정한 오늘의 정세는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의 불집이 더질수 있는 극히 위험한 개선에 이르고 있음.</p> <p>전쟁은 북과 남의 누구에게도 이로운 것이 없음. 누가 누구를 먹을수도 없고 벽히울수 없는 전쟁에서 다같이 참담한 피해자로 되지 않기 위하여, 민족을 파멸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방도를 모색하여야 함.</p> <p>실로 불가침문제는 통일도상에 나서는 초미의 민족중대사이며 일순의 유예도 허용치 않는 긴밀한 과제임.</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불가침,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함.</p> <p>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사람</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 문제는 북남관계 전반, 통일문제, 통일도상에 나선 모든 문제해결 하자는 아주 중핵</p>

우 리 측	북 측
<p>으로서 더욱 더 이 불가침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음.</p> <p>그러나 우리는 1974년도에 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안을 내놓은 이후 수십번 이 불가침협정 체결하자고 촉구해왔고 기회있을 때마다 요구해왔음.</p> <p>특히 지난 6월 10일 UN군축특별총회에서 또 한번 우리 외무부장관이 제시한 바 있음.</p> <p>이와같은 절차를 통해서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생각은 안하고, 국회쪽에서 이 문제를 계속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85년도의 예비접촉때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움.</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준비접촉-토의)</p> <p>불가침문제라는 것은 말로써 하는 선언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조약,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그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p>	<p>적인 것임.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그런 문제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것은 일단 뒤로 마루자는 것임.</p> <p>그쪽에서 제기한 문제중에서 불가침에 관한 권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불가침에 대한 것을 인정하신 셈임.</p> <p>그러나 국회가 권고하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음.</p> <p>의제는 권고라고 하기 보다는 폭을 넓혀서 국회가 마땅히 자기 권한을 행사해서 전인민들에게 전체 우리 겨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불가침의 공동선언을 하나 만들어 발표하도록 의제를 정립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준비접촉- 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제임.</p> <p>대결과 불신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법적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방법을 택해야 할것 아니냐, 우리는 전쟁방지를 위해서 다시 재침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함.</p> <p>우리 정치인들이 모여서 책임있고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 정부당국에 권고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협정을 맺어 이땅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임. 「권고를 하는 분제」를 우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제로 삼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1차 준비접촉-토의)</p> <p>불가침과 관련하여 선언이나 권고 등의 말을 빼고 「남북불가침 문제」로 하자는 것은 쌍방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면서 쌍방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의 조정안에 귀측도 동의를 표시하리라고 믿음.</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의제 세번째 「불가침 문제」라 이렇게 요약한 것은 권고를 철회하고 우리가 제기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기본적으로 토론하자고 염두에 둔 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2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그 문제 자체를 국회 본회담에서 토론하자는 것임.</p> <p>우리 국회가 역사상 선언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없음. 우리 국회 역사에는 실례도 없고 우리 헌법에도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합의문으로 한다, 남북국회간에 이러한 합의를 하였는데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하자, 그런 형태로 하자는 것임. 올림픽 참가나, 공동주최나, 이 문제도 본회담에서 하듯이 불가침문제도 국회 본회담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토의)</p>	<p>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전민족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서 응당 국회 연석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문제임.</p> <p>우리가 북남 국회연석회의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토의·해결할데 대해서 제의한 것은 우리 인민의 염원으로 보나, 우리 국회의 사명과 기능으로 보나 전적으로 아주 정당한 것임.</p> <p>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은 의심할바 없이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획기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귀측이 지난번 상봉때 이른바 수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불가침에 대한 의제를 남북당국에 불가침협정체</p>



우 리 측	북 측
<p>그쪽에서 알고 있는 협정하고 우리 협정하고 같은것 아닌지도 모르지 않</p>	<p>결을 권고하는 문제와 우리측이 제기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다같이 의제로 하자고 한데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군터더기를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으로써 문제토의에 난관이나 조성하는 결과불가져온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음.</p> <p>귀측이 불가침문제와 관련한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권고문제는 우리측이 내용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임.</p> <p>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토의의제로 하면 귀측이 주장하는 쌍방당국이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게 될 것임.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때 대한 문제가 응당 의제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3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불가침조약체결이요 뭐 권고요 하는 것은 그만두고 그저 불가침공동선언</p>

우 리 측	북 측
<p>습니까?</p> <p>우리는 초안도 만나왔다고 하는데 왜 미리 짐작을 하는지 알 수 없음.</p> <p>(4차 준비접촉-토의)</p>	<p>발표문제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음.</p> <p>불가침공동발표라는것이 이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공동의 것임.</p> <p>그 안에 귀측에서 말하는 불가침, 이른바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는 내용이 다 있음.</p> <p>그쪽에서 염두에 둔다는것, 불가침협정 초안이 무엇인가?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데 과거에 내놓았던 불가침제결은 그만둘 것을 제기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이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지난 7월 20일부로 우리측에 보내온 바 있는 공동선언 초안을 협의·해결할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준비접촉이 갖는 임무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함.</p> <p>우리는 불가침문제에 관해서 내용 토의는 본회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준비접촉에서 불가침</p>	<p>국회가 불가침문제에 대해 자기의 책임에서 회피하여 단순히 당국에 권고나 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음.</p> <p>우리가 내놓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에는 불가침선언채택건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가침 권고문제를 따로 독립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의 내용과 성격까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p> <p>우리가 의제 ②항으로서 제시한 남북불가침문제는 그동안의 쌍방 주장을 포괄한 타협적인 안임.</p> <p>이땅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 그리고 평화정착을 바라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남북간 불가침의 필요성과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고 쌍방 당국에게 불가침에 관한 구체적합의와 철저한 이행을 권고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가 지금 예비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예비접촉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그 범주안에서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됨. 우리가 위임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p> <p>그런 대전제밑에서 먼저 불가침에 관한 문제를 말했는데 불가침문제 우리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취급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님.</p>	<p>우리가 여기서 채택하자는 것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국회 합동회의에서 발표하자는 건데, 불가침에 관한 하나의 필요성과 의의를 우리가 정립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행정당국이라든가 저쪽에서 채택하게 될 불가침의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지, 그 방향이라고 할지, 그 정도를 선언에 우리가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5차 준비접촉-토의)</p> <p>불가침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예를들이 인적·물적교류다,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다, 이 문제는 명백함. 그래서 구태여 그것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정상회담이다, 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명백함. 그래서 구태여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무슨 확인할 필요는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늘 주장해 온 이야기를 한번 상기시키면 사실 불가침문제는 누가 협정하느냐? 누가 약속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p> <p>그래서 우리 국회회담에서는 국회권능과 국회기능에 맞는 남북불가침문제를 취급하자.</p> <p>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냐? 남북한 국회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불가침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선언」으로 할 것인가 「협정」으로 할 것인가, 또는 정부당국에 권고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본회담을 열자고 하는 것임.</p> <p>그러니까 불가침문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제기하신 공동선언문제, 우리가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를 통털어서 불가침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임.</p> <p>그런데 예비회담에서 미리 불가침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결정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p>	<p>그러나 불가침문제는 여기 세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는 「불가침」이라는 그 형식을, 표현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짐. 가령 예를 들면 그쪽에서 「불가침협정체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성질이 달라진다. 근본은 민족국가들 사이에서 하는 그런 냄새가 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형식에서 달리하자는 것임.</p> <p>두번째는 누가 불가침하는데 우리 국회가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국회가 어느 정도 참여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한 몫을 담당해서 하겠느냐, 그것을 다 불가침문제는 행정당국에 권고하는 식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국회는 국회로서 할 몫이 있느냐, 말할 몫이 있느냐 이것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음.</p> <p>세번째는 그 불가침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1차 회담때 얘기 되었음. 불가침문제야 세계적으로 있었음. 그러나 그 성격은 어떤 것이었었는가? 불가침은 같은 불가</p>

우 리 측	북 측
<p>본 준비접촉의 임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함.</p> <p>(5차 준비접촉—토의)</p>	<p>침협정이라 하지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기여 못한게 있음. 말하자면 「가짜 불가침」이 있고 「진짜 불가침」이 있다는 것임.</p> <p>그래서 우리가 공개한 것임. 공개해서 전민족적 토의에 붙여야 좋음. 대체 불가침문제를 국회에서 토의하는 이런 테두리안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우리 그저 발표한 것임. 왜냐하면 그 성격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임.</p> <p>잘못하면 우리가 불가침문제다 이렇게 모호하게 해놓고 본회의에서 가서 옛날에 인류를 기만하고 우롱했던 그런 식의 「가짜 불가침」문제를 등장시켜 놓고 왈가왈부한다면야 이게 되나? 이것 웃음거리가 된단말임.</p> <p>에비회담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런 불명확한 의정을, 성격을 확정하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넘기자 해서 에비회담을 하는 것임.</p> <p>(5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남북불가침문제는 본회담에서 쌍방이 각기 제시하는 의견을 함께 놓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며 지금도 불가침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p> <p>우리측이 불가침문제에 관한 의제에 「선언」을 추가한 것은 상호불가침·불간섭·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남북당국간에 채택할 불가침선언의 기본방향에 대한 남북정치인들의 의지를 공동으로 결의하고 남북당국간에 조속히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것임.</p> <p>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북당국이 상호불가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자는 데에는 쌍방간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쌍방 당국자들도 이미 그같은 의사를 국내외에 밝히고 있음.</p> <p>따라서 남북 쌍방이 대표회담에서 이같은 의제를 놓고 쌍방이 각기의 의견을 충분히 자유스럽게 제시하여 합</p>	

우 리 측	북 측
<p>의점을 찾아 남북국회의 공동결의문에 함께 반영하면 우리의 사명은 일응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함.</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측이 불가침문제에 관한 의제에 「선언」을 추가한 것은 상호불가침·불간섭·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남북당국간에 채택할 불가침선언의 기본방향에 대한 남북정치인들의 의사를, 의지를 공동으로 결의하고 남북당국간에 조속히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임. 위임이라 해도 좋음. 권고란 말을 빼고 위임하자고 해도 좋음.</p> <p>그래서 우리로서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불가침에 관계되는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또 기본방향을 최고책임자들끼리 채택하도록 이렇게 권고하자 이런 뜻임.</p> <p>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지간하면 본회담을 열어 거기서 이야기 하면 될 것이며 우리가 예비회담에서 이야기 하기에는 위임사항 밖이고 예비회담</p>	<p>불간섭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군사문제는 아닌 것이고 여기에서 꼭 안치해야할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민족 내부에서 상호불간섭이다 하는 이 말도 좀 맞지 않음.</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정부간에 하는 내용이 따로 있고 국회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따로 있음. 내가 예기하고 싶은 것은 다만 무엇인가, 그 방향이라고 하는,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불가침을 담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과 방향으로 돼 있지 않다는 것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복 측
<p>자체에서는 의제하고 형식만 정해가지고 날짜하고 규모만 정하기로 하였으니까,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성질상 안맞음.</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 국회가 국회의 권능이 있는 것이고 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포괄적인 기본방향을 표시해서 이것을 상호간에 확인을 하고 결의를 한다.</p> <p>그렇게 하고 귀측에서 이야기했듯이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서 채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권능이라든지 위상의 차원이 적어도 행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서있기 때문에 큰 기본방향을 정치인으로서 공동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본방침을 제시를 하고 당국에 위임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이 불가침문제에 관한 의제에 「선언」을 추가한 것은 상호 불가침·불간섭·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불가침선언의 기본방향에 대한 남북정치인들의 의지를 모아 이를 결의하고 남북당국간에 조속히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의미와 함께 귀측의 요구를 고려한 것임.</p> <p>귀측도 이와 같은 우리측 의제를 「전진적」이라고 평가한 만큼 그대로 합의를 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당연히 「대표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선 중요의제인 불가침문제와 관련해서는 귀측이 지난번 상봉때에 불가침선언발표문제로 하는데 동의한 조건에서 거기에 군축과 외국군대의 단계적 철수문제를 더 포함시켜서 의제를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로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측이 제안한 의제 제2항 「남북 불가침선언문제」임.</p> <p>이것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로 하자는 귀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우리측이 지난 6차 접촉때 수정제외한 안으로서, 귀측도 「전진적」이라고 평가한 만큼 우리측 안대로 확정하면 될 것임.</p>	<p>우리가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로 하자는데 대하여 귀측은 「남북불가침선언문제」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음.</p> <p>「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발표문제」로 하자고 하는 우리 제안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설명한 바 있으며 지금으로서도 이렇게 하는 것</p>

우 리 측	북 측
<p>(8차 준비접촉-기초발언)</p> <p>넘기전에 또 나중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p> <p>제 생각은 우리 여기서 의제만 지금 선정만 하는거지 내용에 관해서는 뭐 상호 각기 얘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전연 여기에서 우리가 토의될 문제는 아님.</p> <p>국회의 기능에 맞는 내용이 담겨야 됨. 불가침선언은 결국은 행정부, 당국에서 하는 것임. 그래서 국회의 기능에</p>	<p>이 어느모로 보나 합리적이라고 인정함.</p> <p>그렇지만 귀측이 우리의 제안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의제를 「남북불가침선언문제」로 표현하자고 하기때문에 내용상 다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귀측의 제의에 동의할 용의가 있음.</p> <p>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합의에 도달한거로 볼 수 있다고 봄.</p> <p>(8차 준비접촉-기초발언)</p> <p>당국간에 해야 할 불가침방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결정한다 결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p> <p>그 무슨 뜻인가 하면 문장 그대로만 해석하면 당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불가침문제 해결하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결로 끝나게 되어 있음.</p> <p>동시에 우리 국회도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됨.</p> <p>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자면 무슨 가령 의제를</p>

우 리 측	북 측
<p>맞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국에다가 이 불가침선언을 하도록 권장하는 그러한 테두리의 내용, 이러한 것이 불가침선언, 국회에서의 불가침선언 그것이 국회의 기능에 맞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9차 준비접촉-토의)</p>	<p>철거시키고 무슨 군축을 하고 무력불사용하고 이런 걸 해야된다 하는 이 목소리, 국회자체의 주장이 있어야 된다 이말임.</p> <p>이제 당국에 방향을 제시하는 불가침선언의 방향문제인데 그 방향이 뭐인가하면 폭을 넓혀야 됨.</p> <p style="text-align: right;">(9차 준비접촉-토의)</p>

마.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우 리 측	북 측
<p>불가침협정체결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결단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할 것임.</p> <p>남북의 정상이 아무런 전제나 조건 없이 서로 만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임.</p> <p>남북의 정상은, 남북 두 최고당국자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담을 개최해야 할 민족적인 의무를 민족 앞에 지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양측의 최고 정상께서 만나서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오늘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나누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봄.</p> <p>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문제와 더불어 정상간에 만나는 문제를 국회</p>	

우 리 측	북 측
<p>차원에서 권고를 하자는 의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제들은 귀측에서 내놓은 의제 못지않게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임.</p> <p>(1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에서 국회가 정상회담에 관해서 권고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의 사명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양쪽이 정상에 대한 애우가 여러가지로 다른 그러한 뜻이 있음.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귀측 대표들도 말했지만 정치인이 무슨 일을 못하느냐, 또 국회가 굉장히 많은, 민의를 대표하는 많은 권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남북의 정상이 만나도록 권고말씀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임.</p> <p>남북영수회담 촉구문제 권고문제인데, 아까 단장께서 국회의 권한 밖이고 분수에 넘는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국회가 대통령한테 건의함.</p>	<p>귀측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권고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데 대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것임.</p> <p>우리는 그 무슨 권고가 없어도 이미 전에 최고위급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음. 그러나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그것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돼야 되고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 것임.</p> <p>더욱이 우리로서는 귀측이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권고하는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 사명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분수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정함.</p>

우 리 측	북 측
<p>남북수뇌가 모이면, 지도자가 모여 하면 해결될 문제임.</p> <p>한번 만날 기회를 만들면 좋은데, 귀측에서는 이것이 국회에서 하는게 『우리 분수에 넘는다』 이러니까 남쪽에서는 보통 대통령한테 건의하지만 이 문제는 보류해도 좋음.</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토의)</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귀측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의 사명에도 맞지 않을 분 아니라, 그대로 인용함. 『분수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쌍방국회의 권능으로 보아서, 또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불가침문제나 교류문제나 남북국회회담에서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p> <p>국회가, 최고인민회의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최고책임자, 최고당국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음.</p> <p>우리가 원칙적인 얘기는 논의를 해</p>	<p>최고위급회담문제도 어제 귀측이 분명히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 어저께 말한 것을 뒤집어서 더 후퇴한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정상회담문제도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일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준비되고 성숙해나가는 걸로 되는데도 이걸 굳이 제기했음. 중도에서 그걸 그쪽에서 『좋다, 이걸 보류한다』고 했는데 왜 4차에 와서는 다시 또 내놓는지를 알 수 없음.</p>
<p>우리가 원칙적인 얘기는 논의를 해</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야되겠지만 많은 문제는 최고책임자가 해야 됨.</p> <p>미·소간이 서로 원자탄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도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양쪽 영수회담에서 이룩된 것임.</p> <p>또 동·서독이 25만의 미군이 서독에 주둔하고 있고, 원자탄이 수없이 있는데도 서로 화해하고 평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은 양독 수뇌들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 까닭임.</p> <p>우리가 이렇게 서로 국회와 최고인민회의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생산적인 토론을 못할 바에야 최고영수회담이, 최고지도자가 만나서 우리 민족문제를 한번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남한국회의 염원임. 이런태 대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기꺼이 호응해 주기를 바랍.</p> <p>(3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이 돌파구를 여는데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을 감안하여 특히 내외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여기에 쏠리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현실을 돕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이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까지 언급하고 있는 만큼 남북국회는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민족화합과 통일실현에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정상회담문제는 의정에서 빠지고 합의된 것임.</p> <p>이 문제를 놓고 말하면야 우리가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게 언제입니까? 1972년부터 일관하게 제기해온 문제임. 72년, 85년, 86년 정초, 금년 9월에 또 제기했음. 상세히 제기했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권위있는 회담임.</p> <p>민족문제 적어도 이거 모여 앉으면 이 회담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계기를 분명히 열어 놓아야지 모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되지 않거나 하면 이걸 민족앞에서 대담못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준비가 필요하고 성숙시켜야 되고 조건이 필요하고 분위기가 필요한 것임.</p> <p>그래서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히 천명하셨음. 이 문제는 우리 하는데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토의하려면 오고, 이런 조건을 성숙시켜야 된다는 것임. 그래</p>



우 리 측	북 측
<p>남북정상회담은 이땅에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일대전기를 마련하는 길이며 이미 쌍방 최고당국자들도 누차에 걸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음.</p> <p>따라서 남북국회가 그 권능과 성격에 맞게 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거조)</p> <p>남북정상회담은 쌍방 최고당국자들에게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p>	<p>야 진짜 그것이 통일을 위한 권위있는 회담으로 되지 않으면서 그저 와서 모여 앉는다, 이게 안됨.</p> <p style="text-align: right;">(5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는 쌍방이 다같이 최고위급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는 최고위급회담</p>

우 리 측	북 측
<p>더욱이 남북사이에 불가침선언 채택과 함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신뢰회복과 긴장완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실현을 권고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의 전제를 마련하게 될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열리게 되어있는 현시점에서 구태여 그것을 의제로 정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측이 제안한 의제 제3항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임.</p> <p>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쌍방의 최고당국자는 물론 내외의 여론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항임.</p> <p>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기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정립하여 촉구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함.</p> <p>(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귀측이 주장하는 「남북정상회담개최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국회회의 의제로 정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음.</p> <p>이 의제에 대해서는 귀측이 2차상봉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제기한 민족통일협상회의가 소집되면 그 테두리안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 명백히 밝혀진 것 만큼 북남국회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구태여 토의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함. 이거는 빼자는 생각임.</p> <p>(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귀측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미 여러차례 인정하면서 의제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p> <p>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평화와 통일문제,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에 일대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p> <p>남북의 국회의원들이 온 겨레의 여망에 부응하여 정상회담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p> <p>또한 정상회담 개최문제는 국민대의 기구인 국회의 기능으로 보아서나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서나 남북국회회담에서 당연히 협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믿고있음.</p> <p>이러한 견지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는데 귀측이 동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임.</p> <p>(9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 3. 본회담 형식 문제 (대표회담·연석회의·합동회의)

우 리 측	북 측
<p>남북국회회담의 형식에 관해 우리로서는 대표회담이 합리적이고 적합한 회담방식이라고 생각한다.</p> <p>대표회담은 우선 회담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지난 85년의 국회회담 예비접촉시에 쌍방간에 이미 합의를 보았던 회담형식이며 또한 그동안 남북간에 있었던 모든 회담들도 쌍무회담으로 진행되어온 선례와도 부합되는 것임.</p> <p>남북국회회담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많은 인원이 모여 확인하는 절차가 아님.</p> <p>올림픽 참가를 비롯하여 남북간에 존재하는 수다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양측이 진지한 태도로 협의·타협하는 모임이며, 이를 위하여 대표회담의 형식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가 그동안 북측에 보낸 몇 차례의 서한 어디를 보아도 북측에서 제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국회회담 형식</p>	<p>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지난 7월 20일에 북남국회연석회의를 열데 대한 중대한 발기를 하였는 바 귀측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국회연석회의 소집에 동의한 것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는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려는 염원으로 부터 출발하여 북남국회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함)를 소집하는데 견해를 같이했음.</p> <p style="text-align: center;">(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는 이미 주고 받은 편지들과 정당들의 정책발표를 통해서 북남국회회담이 형식등에 대하여 원칙상 상통한</p>

우 리 측	북 측
<p>을 연석회의로 하는 것에 합의했거나 그것을 수락한 의사표시는 어느 구석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p> <p>오히려 8월 12일자 우리측 서한에서도 우리 국회의원과 북측 대의원간의 회답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은 정당이나 사회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람.</p> <p>따라서 회의의 형태나 의제를 기정사실화한 토대위에서 회답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본회답을 제대로 성사시키기 위한 의제나 회답형태부터 단계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토의하는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함.</p> <p>(1차 준비접촉-토의)</p>	<p>입장과 전혜의 일치를 보았다고 인정함.</p> <p>7월 20일부 우리 제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국회들 사이에서 회답을 할 필요성을 논증한 기초위에서 북남국회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임.</p> <p>(1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에서 첫번째 문제제기를 했던 대표회답에서는 민의를 직접 반영을 할 수 없고 집대성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논리를 말했는데, 이 국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공통적인 의사를 저희들</p>	<p>귀측의 보도내용을 보면 대체로 국회연석회의 개최에 동의하는지로 의견을 모으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음.</p> <p>최근까지만 해도 그쪽 정당들이 정책을 표명한 것을 보면 이 문제와 관</p>

우 리 측	북 측
<p>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의사들을 국정 에 또는 다른 분야에 대신해서 전달하 는 명실공히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헌법기관임.</p> <p>귀측에서 『보도에 의하면 연석회의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이렇게 말 했는데 각당이 비슷하지만 평민당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문제에 대해 제1 안, 제2안, 제3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 책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이를 다시 당 무회의를 거쳐 회의형식은 연석회의 보다는 국회대표회담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지 었음.</p> <p>그동안에 보도되었던 상황들은 정당 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 학계에서, 언론에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들을 자 유롭게 토론하고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였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당 뿐만 아니라 국회를 대표한 우리들은 이걸 대표회담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 야 함.</p> <p>(1차 준비접촉-토의)</p>	<p>런해서 연석회의가 좋다는 이런 평들 이 적지 않았음.</p> <p>통일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효 과적으로 해결하자면 그러한 민족의 의사를 최대한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협상마당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협 상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것임.</p> <p>국회회담에는 형식도 많은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표회담 형식도 있고, 연석회의 형태도 있는데, 그 중에서야 연석회의 형식이 민의를 수렴하는데서, 인민들의 의사를 집대성하는데서 그래 도 최상의 것이 아니냐 이걸 고려했음.</p> <p>전민족의 사활적 운명과 관련되고 전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관심 사인만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 마당도, 협상무대도 민족의 관심사를 최대한 수렴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연석회의형태이지 국 회대표회담은 아님 것임.</p> <p>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마찬 가지이고 그쪽 국회의원도 마찬가리고 생각함.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다 직접 참여하고 싶지</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은 대표회의의 경우에는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가 없고, 또 여론을 국민 개개인한테서 집대성할 수가 없다, 각계각층에서 다 모여야 된다, 그런 논리를 폈음.</p> <p>귀측의 대의원 655명, 우리측 299명임. 합치면 근 천명이됨.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또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p> <p>어디까지나 하나의 집회와 행사와 이런 것으로서 그쳐지게 되는 것임.</p> <p>현실적으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관계를 고려할때, 1,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번 우리들이 논하고 싶고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고 싶어하는 의제들, 현안들은 민족의 생존하고 통일하고, 평화하고 직결된 엄청난게 큰 과제들</p>	<p>대표 몇사람만 보내서 뒤앉아서 자기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야 직접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병백한 이치임.</p> <p>(1차 준비접촉-토의)</p> <p>최근에 들어서 우리 북에서도 남에서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음.</p> <p>남에서만 하여도 최근에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대단히 높아가고 있고, 대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직접 주인으로서 참여하는데 관심이 대단히 높아가고 있음.</p> <p>귀측 당국에서도 통일문제의 자유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범한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했음.</p> <p>사실 통일이야 6,000만 겨레를 발동해서 통일하자는 건데, 몇 백명이 모여앉아서 논하는 이것 조차 못한다면야 언제 우리가 통일로 나가겠는가 이런 생각도 듬.</p>





우 리 측	북 측
<p>내 방식이 대단히 효율적이어야 함.</p> <p>6,000만 민족 다 모아놓고, 어디다 모아놓고 떠들면 그것이 가장 원칙적인 문제인가?</p> <p>어떻게 하면 원칙적인 문제를 국민 다수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의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내느냐, 구체화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임.</p> <p>연석회의 천명이 아니라 만명, 몇십 만명이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음. 앞으로 우리 만나야 함.</p> <p>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민족의 문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공통분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적당한 수가 만나서 머리 맞대고 얘기하는 것임.</p> <p>85년도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도 쌍방의 차이가 있는데, 그 방법은 어느 것이보다 효과적이나, 효율적이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걸 찾아야함.</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준비접촉-토의)</p>	<p>식이라는건, 아 우리가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체제에 집착해서 문제를 고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안됨.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야 되는가? 어디까지나 체제와 사상과 제도와 어느 일방적 법률, 이런걸 초월해서 민족이라는것,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는것,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는것, 민족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고찰 해야함. 6,000만의 의사를 집대성해서 협상마당을 마련하는데 몇백명이 참가하는 연석회의 형태조차 이거 복잡하다 어쩐다 하면서 이거 선택 못한다면야 우리가 언제 6,000만이 화합해서 민족단합을 해서 통일을 하느냐 실망스러움. 문제는 효율성 보다도 더 중요한 자세나 원칙 문제임.</p> <p>우리가 이 원칙에만 선다면 다른 문제는 다 효율성이라든가, 방법·기술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1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은 남북국회회담을 대표회담으로 하는 것이 회담의 효율성과 대의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음.</p>	<p>우리가 주장하는 연석회의가 민족의 중대사를 해결하는 협상형식에서 최소한의 형식이라는데 대해서는 반론할 여지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복잡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수 없다고 하면서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음.</p>
<p>남북간에 존재하는 수다하고 복잡한 문제를 진지한 태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협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서 회담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민족들 뿐만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도 생각을 같이 할 것임.</p>	<p>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연다고 해서 복잡하다는 것은 귀측의 국회의원들이 대화를 부정하는 이유로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대화형식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임.</p>
<p>귀측은 남북연석회의가 마치 민의수령의 최상의 방법인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민의를 폭넓고 정확히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참석보다 대표성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더 좋을 것임.</p>	<p>실사 연석회의가 복잡하다고 그렇게 가상한다 하더라도 민족의 운명과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된 중대사를 해결하는 데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복잡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는 것임.</p>
<p>다시말해 쌍방대표들이 각기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여과된 최대 공약수를 회의장에 가지고 나와 반영시키면 되는 것임.</p>	<p>귀측이 주장하는 대표회담이라는 것은 인민을 대표하는 대표들속에서 또 대표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인민의</p>

우 리 측	북 측
<p>고 있음.</p> <p>이같은 점에서 남북국회회담을 대표회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대의정치의 성격에도 부합되는 것임.</p> <p>우리측의 국회와 귀측 최고인민회의 간의 회담이 대표회담의 성격만 유지된다면 남북국회회담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p> <p>대표회담이다, 연석회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국회회담 이렇게 해서 수시토의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p> <p>다만 우리로서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의회담이다, 대표회담이다, 이런 대의정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임.</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대표회담을 연석회의나 대표회담이다, 이렇게 말로써 할 것이 아니라 효</p>	<p>의사를 폭넓게 정확히 수렴할 수 없는 이러한 부족점을 가지고 있지만, 연석회의는 민의의 대표자들이 직접 참가하기 때문에 민족의 의사를 보다 가깝게 수렴할 수 있다는 논박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p> <p>또 대표회담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만 마주 앉고 왔다갔다 하는 소극적인 형식이라면, 연석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고 오가는 아주 적극적인 형식으로서 그 테두리안에서 쌍방 국회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이런 우월성도 가지고 있는 것임.</p> <p>대표회담은 인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연석회의는 거래의 의사를 최대한 집대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협상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대표회담에 대해 수정제의한 건데 대표회담의 성격만 유지된다면 명칭은</p>

우 리 측	북 측
<p>올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국회회담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잘되면 귀측의 입장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임.</p> <p>우리 서로 20명정도 모여서 만장일치의 공통된 결론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전체 합동회의에서 만세부르고 박수치는 이런 기회도 가질 수 있는게 아닌가? 다만 나중에 무슨 전체 합동회의, 남북한 국회가 합동회의하는데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의안을 제공하는 그러한 토의를 대표회담에서, 국회회담에서 하자는 것임.</p> <p>국회회담을 하는데 대표회담이다, 연석회의다 하는 이름은 이 이상 토론 말고 효과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서 쌍방 각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자.</p> <p>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필요하다면 같이 모여서 서로 재확인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차 준비접촉-토의)</p>	<p>국회회담으로 하자는 것인가?</p> <p>오늘 귀측의 새로운 제안은 결국 연석회의는 그저 날라가 버리는 거고 대표회담은 결국하자 표현상 다른거는 있지만은 다르게 전혀 없다고 생각함.</p> <p>우선 성격자체를 연석회의로 하는가 대표회담으로 하는가? 성격자체를 대표회담으로 고착시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찬성할 수 없음.</p> <p>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연석회의에서 그것을 추인한다고 하면 그런 추인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그야말로 그것은 아주 복잡한 단계임.</p> <p>연석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에 처리하면 되는거지 구태여 대표회담을 열고 다시 또 앞으로 연석회의에서 이거를 추인한다, 또 연석회의 한다는 담보도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2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오래전부터 귀측에서 연석회의를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측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회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라고 한 것은 본질문제 토의가 아닌 예비접촉에서 조차도 이렇게 의견을 합치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터에 이 본질문제를 논의하자는데 약 900여명의 양측 국회의원이 모여 이야기가 되겠는가 하는 것임.</p> <p>이러한 회의에 무언가를 생산하고 또 창조하기 위한 그런 회의라는 것은 대표들이 우선 모여가지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대표들이 모인 회담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또 각각 다시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도 받고, 그리고 또 평양이든 함동으로 또 모여서 우리 좋은 성과에 대해서 형식이 추인이 된다, 뭐가 된다 이런 말 떠나서 한번 모여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도 믿을 수 있는 것을 대표단 회의에서 한번 의논해 보자 이런 말 아닌가?</p> <p>이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실질</p>	<p>회의형식문제는 무엇과 관련되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북과 남의 관계를 지금 이상으로 전환하려 하는가, 안 하는가?</p> <p>또 대결로부터 화해로 넘는가, 분열로부터 통일로 전환하는가, 민족대결로부터 민족화해로 넘자고 하는가?</p> <p>이런 것들과 관련된 원칙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함.</p> <p>우리가 논하는 것은 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대성하느냐 이 문제에서 국회 회담 형식문제도 관련된 문제임.</p> <p style="text-align: right;">(2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효과적이고, 또 회의도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담형식에 대해서는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의한 대표회담을 꼭 귀측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2차 준비접촉-토의)</p> <p>연석회의란 말이 귀측의 사전에 있는 해석하고 우리측 사전에 있는 해석하고 많이 다름. 이것은 40년의 분단이 가져온 것으로 우리측의 연석회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회상공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가 연석해서 회의를 하며 또 정부와 정당간에도 연석회의를 함.</p> <p>1,000명이나 900명이 모여서 한 회의는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음. 이것은 서울운동장에서 모이는 군중대회임.</p> <p>다중이 참여하는 회의, 이것이 귀측이 말하는 연석회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석회의란 것은 동등한 대표권</p>	<p>토의하려는 문제의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그 내용이 심각하면 할수록 적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빠른 시일안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치임.</p> <p>인원이 적으면 모이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음.</p> <p>귀측의 말대로 대표회담이라고도 하지말고 연석회의라고도 하지말고, 막연하게 국회회담이라고 해 놓으면, 그것이 도대체 국회회의를 어떻게 한단 말</p>

우 리 측	북 측
<p>을 가진, 즉 인구 10만을 대표한다든지, 권한이 같든지 이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대체의 경우는 다수결 없이 토론하는 장이 연석회의임.</p> <p>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연석회의인데, 귀측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온 연석회의는 요즘 내가 며칠동안 연구했는데 다수가 참가하는 군중집회 형식의 회의, 이것이 연석회의임.</p> <p>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쪽에서는 그것을 연석회의라고 하지 않고 다중회의라고 하겠음. 그래야 혼동이 안생김.</p> <p>(3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지난번에 귀측에서 일천명이 모여 양쪽의 다섯사람씩 다시 공동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열사람들이 대표로 나와서 의제별로 심도있게 깊이 있게 이렇게 타협을 해서 전체 회의가 되었든지 연석회의가 되었든지 합동회의가 되었든지 채택하는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담방법인데, 왜 남측에서는 말 안듣느냐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음.</p>	<p>인가?</p> <p>그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회의형식문제를 토의하지 말자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그 어떤 국회간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음.</p> <p>국회연석회의방식을 택해야 할 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귀측의 여러 정당들과 많은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음.</p> <p>(3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그쪽 논리대로 한다면야 다섯명이 앉아서 했으면 효율적으로 되겠고 또 생산물이 있어야겠는데, 17년동안 다섯명이나 여섯명 가지고 했지만 무슨 완화나 화해나 단합을 가져온게 없음.</p> <p>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님. 정책방향에서 새로운 입장과 자세를 가지는게 문제이지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p>

우 리 측	북 측
<p>다섯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공동운 영위원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 을 인정하는 것임.</p> <p>(3차 준비접촉-토의)</p> <p>적십자회담같은 것도 우리 대표자 보내서 하는 것임. 이산가족들이 천만 이 같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님.</p> <p>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반드시 전체 국민,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의 방식이라고 그런다면 불가침문제가 되 었든지, 여러분들 측과 우리측의 현안 문제,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 서로 싸 움하지 않고 통일의 기반조성을 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6천만 모든 국 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국민투표를 하여 물어 볼 수도 있다는 이러한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음.</p> <p>왜 대표성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최 고인민회의가 5만명, 3만명을 대표하 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쪽 체제문제를 가지고 말은 안하겠지만, 대표 해가지</p>	<p>(3차 준비접촉-토의)</p> <p>연석회의 자체, 북남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연석한다는 자체가 의제, 전민족구성원의 생존과 관련되 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매개인이 제 각기 소속하는 구성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에서 발언할 수 있 음.</p> <p>이 연석회의 자체가 대표성의 원리 를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으므로 북남 관계에서 대표성의 원리를 구현한 연 석회의가 더 좋지않은가 난 이렇게 생 각함. 북남관계에서 대표들을 뽑는 그 대표성의 원리는 필연코 우리가 여기 서 마주앉는 것처럼 대결관계를 띠지 않을 수 없지만 국회연석회의같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모여 앉는다는 것 은 대결관계가 없어짐.</p> <p>(3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고 온 것임.</p> <p>그래서 최고인민회의 대표하고 우리 쪽 대표들과 같이 하자 그러는데, 남북한의 인구가 4,000만, 6,000만 하나까 남북간에는 인구차가 많음.</p> <p>국제의회연맹에서는 남북한의 투표권이 차이가 있음.</p> <p>왜 투표권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각국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투표수가 차이가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3차 준비접촉-토의)</p>	<p style="text-align: center;">귀측은 회의형식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단 하나의 구실로 우리 국회연석회의의 제안을 무작정 반대하고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회의형식을 채택하면서 복잡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 군중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형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p> <p>(4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여러 사람이 참가하면 복잡하고 몇 사람이 모여 앉으면 능률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주장임.</p> <p>몇 사람이 모여 앉는다 해도 서로 입장이 다르면 아무리 토의 한다고 해도 옳은 대책을 찾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시간을 한정없이 끌게 될 것임.</p> <p>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대화경험이 실증해 줄 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들의 상봉과정이 또한 응변으로 실증해 주고</p>

우 리 측	북 측
<p>우리 민족내부의 문제니까 우리 독특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지금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효과적인 그 방법의 내용은 실무차원에서 나중에 운영절차에 다 맡기자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회담형식의 성격상의 본질문제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있는 것임.</p> <p>문제는 참가자들이 진정으로 상정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서는가, 아니면 시간이나 끌면서 해결을 회피하는가 하는데 있지 결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임.</p> <p>회의형식을 몇 사람이 참가하는 대표회담으로 하자고 하는 귀측 주장은 민족의 중대사를 협의·해결하는데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음.</p> <p>(4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그리고 귀측은 우리 연석회의제의와 관련해서 그러한 회의는 세계 어디에서든 해 본 적이 없다는 구실을 들고 반대해 나서고 있음.</p> <p>이거 역시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것임. 우린 그 어떤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 내부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의를 하자는 것임.</p> <p>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해 보았는가 해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전</p>

우 리 측	북 측
<p>그쪽에서 299명, 655명 전원으로 구성하는 연석회의를 주장했었고, 의결방법은 그때도 의결을 할 때에는 양쪽이 동수가 참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의결을 하면 된다고 했고 공동운영위원회도 그때 이미 그 연석회의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었음. 그렇게 볼때 당초 제안한 연석회의를 합동회의라고 두자만 바꾼것 이외에는 본질적인 내용에서</p>	<p>면에 제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임.</p> <p>우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교조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고 우리 민족 내부문제를 푸는데 적합하고 이로운 형식이라면 주저없이 그것을 채택해야 하는 것임.</p> <p>북남국회들 사이 협상은 북남국회의원들이 동석하는 합동회의로 함.</p> <p>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당·단체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을 북남국회 합동회의에 참가시키는 문제는 보유하고 본회의에 가서 협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오늘 우리들이 제안한 것은 「연석회의」 그 명칭을 「합동회의」로 바꿀 뿐 아니라 그 구성인원 내용에서도 국회의원들만 참가하고 정당·단체, 개별인사들의 참가는 이견 보유하고 본회의에 가서 협의한다는 것임.</p> <p>이러니까 상당한 차이임. 이견 큰 양보임.</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크게 차이가 없음.</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여기서 이것을 매듭짓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되풀이 되지만 정당·사회단체 그 문제를 유보하는 것 이외에는 귀측에서 새로 제의하신 내용이 명칭변경 이외에는 큰 조정을 안한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선생들은 합동회의 형식자체를 합의하고 그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에 응해 줘야지, 국회연석회의 수정인가, 본질과 같다, 왜 이렇게 자기네 입장에서만 문제를 헤명하는지 알 수 없음.</p> <p>우리의 제안이 선생님들 의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참작했으며, 국면을 다개하기 위한 안으로서 제기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각도에서 좀 더 성의껏 협의를 해야 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오늘 내안으로서 정당·사회단체와 각계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만나자』하는 것은 발전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음.</p> <p>내 개인의사로서는 아주 발전적인 의사다, 그런 뒤늦게나마 귀측에서 정당·사회단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p>	<p>민족의 운명문제를 논하는데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하기 보다 정당·단체 참가시켜서, 국회밖에 있는 정당·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의 의사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국회안에서 우리 듣는것, 그것도 아주 좋음. 그점에선 지금도 변함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는 연석회의 그런 형식가지고는 민족의 생존권과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민족의 동질성, 통일이라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토의·협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늦게나마 인정해 주셨다는 점에서 고맙게 여감.</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가 새 제안을 내놓게 된 것은 귀측이 우리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줄곧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은 제안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개책으로 대폭 양보해서 이런 안 내놓은 것임. 이거 명백히 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정당·사회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문제는 일단 보유하고, 그것은 본 합동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서 토의해서 결정한다는 그러한 취지인가?</p> <p>(4차 준비접촉-토의)</p>	<p>본회의에 가서 본다, 그말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정당·사회단체 인사문제를 본회의에서 협의한다는 것은 이번에 본회의 의제에서 빼기를 바람.</p> <p>이 문제는 꼭 하고 싶으면 이북의 정당·사회단체하고 이남의 정당·사회단체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이번 국회 본회담에서는 이것을 본회담 의제로 넣지 말라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지난번에 연석회의 제안을 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제의한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p> <p>자격심사위원회는 서로 없는데 낫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귀측의 인민회의 대의원 명부나 우리 명부나 유동적임.</p> <p>그러니까 그런것 일일이 시작하면 서로가 안 믿는 것이 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그것 살아있는 것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20명의 대표자회의에서 모든 의안과 운영내용에 합의를 보면 우리는 그 결과를 추가적으로 승인하는 합동회의를 열 수 있는데 찬성함.</p> <p>그 합동회의는 어떤 경우라도 쌍방의 입장을 표시하는 만장일치제가 되어야 하며 다수결은 없음. 그렇게 답을 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것임.</p> <p>형식을 떠난 합동회의에 찬성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답은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는 답을 못함.</p> <p>그러나 우리는 만장일치의 합동회의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p>	<p>합동회담 운영절차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자는 것은 먼저 그쪽에서 계속 20명 대표자회의를 고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그레도 우리의 이러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서 정당·단체들 참가하는 문제는 우리가 보류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합동회의를 하자는 이 제안에 찬성을 하는가?</p> <p>우선 이게 먼저 합의가 되고 만약에 이것이 합의되면 그 다음에 우리 절차상 문제, 운영상 문제, 이게 다수결로 해야 되는가 무슨 뭐 어떻게 하는가</p>

우 리 측	북 측
<p>찬성하고 제안해 놓았음.</p> <p>합동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민족 내 부문제를 표결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하나의 전치하는 형식으로서 우리측의 대표 20명 그리고 귀측에서 내는 대표 20명이 모이자는 것임.</p> <p>거기에서 정말 이 민족문제를 전체 회의에 가서 왈가왈부를 하고, 표결을 하고 아까 이한동 의장 말씀대로, 49대 51이나 등등 그런 문제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양측의 동수 20명씩이 모여서 그 대표들이 충분한 역시 정치에는 현실문제도 있는 거니까, 여러가지를 서로간에 합의점을 발견해 가지고 완전히 합의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합동회의에 가서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자는 내용임.</p> <p>지금 우리 수석대표께서 운영위원 11명도 좋다, 20명이라도 좋다, 하신 얘기는 그러한 성격의 합동회의 이전</p>	<p>이런 문제,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는가 안두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또 다음에도 토의할 절차가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에 우리가 합의점을 발견하는 그러한 회담, 국회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귀측에 얘기함.</p> <p>합동회의의 내용에 관해서 즉 설명을 하면서 구성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인 남의 299명 북의 655명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금까지 연석회의의 내용으로 주장했던 정당·사회단체의 참여문제는 본회의에서 협의·결정하도록 한다고 보류할 것을 말했음.</p> <p>그리고 의결방법은 다수결의 원리를 그대로 연석회의의 내용으로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오늘 했고, 그 외에 무슨 공동위원회 운영문제,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보면 수정안이라고 하면서도, 연석회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포장만 바꿨지 알맹이는 결국 그대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p> <p>국회회담으로 하되 우리들이 주장했던 20명에서 조금 숫자를 늘이는 방향</p>	

우 리 측	북 측
<p>으로 우리합의점을 도출해 보자 이렇게 예비접촉을 진행시키면 좋다는 것임. 그렇지 않고는 타협이 안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연석회의 방식은 남북관계 현실을 비추어 보거나 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회담 형식이라고 볼 수 없음.</p> <p>남북국회회담은 「개회모임」과 「의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의」, 「폐회모임」순으로 진행함.</p> <p>먼저 우리가 남북국회회담을 「개회모임」과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폐회모임」순으로 진행하고 개·폐회모임은 남북국회합동회의 형식으로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의제토의는 대표회담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서 국회회담의 참가자 수를 많이 늘리자는 귀측 주장도 반영시킨 회담형식이라고 생각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연석회의나 합동회의가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서 대표회담형식의 국회회담만을 주장하는 것은 대결의 관념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함.</p> <p>연석회의나 합동회의가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의 바탕에는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고있고 서로 다른 사상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견해나 입장에 놓여있음.</p> <p>북과 남의 국회의원 900명이나 1천명이 모이는 것이 대표 몇사람 마주앉는 것에 비해 다소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결코 국회연석회의나 국회합동회의를 그만두고 대표회담을 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로는 될 수 없음.</p> <p>우리는 귀측이 여러 기회에 국회합동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또 국회본회담 참가인원수를 늘릴 의사도</p>

우 리 측	북 측
<p>과거의 국회회담처럼 쌍부회담을 하자는 이 전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됨. 거기서 1/3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이게 어디 객관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게 꼭 과거에 우리 남한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인구비례로 하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p> <p>(5차 준비접촉-토의)</p>	<p>표시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국회회담을 국회합동회의로 하되 참가인원수를 대폭 축소하여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전체 대의원수의 3분의 1로, 남측은 전체 국회회원수의 절반으로 각각 축소하여 참가할 것을 제안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기본 핵이 없음. 핵이란게 뭔가 하면, 불가침문제를 비롯해서 상정된 문제토의에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참가해서 민족문제를 논하는데 직접 기여할 수 있게,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참가해서 이렇게 된게 이게 핵인데, 여기에서는 개·폐회식은 전체가 한다, 의제토의는 대표회담에서 한다, 이러니까 개·폐회식이란 들어보면 그저 하나의 행사임.</p> <p>이미 결정하고 협의되고 합의된 걸, 그쪽 얘기대로 하면 공동성명이 아니고 공동합의문건임. 그런 걸 그저 확인하는 것이 전부임.</p> <p>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참가하고 전원</p>

우 리 측	북 측
<p>과거의 국회회담처럼 쌍무회담을 하자는 이 전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됨. 거기서 1/3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이게 어디 객관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게 꼭 과거에 우리 남한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인구비례로 하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p> <p>(5차 준비접촉-토의)</p>	<p>표시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국회회담을 국회합동회의로 하되 참가인원수를 대폭 축소하여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전체 대의원수의 3분의 1로, 남측은 전체 국회회원수의 절반으로 각각 축소하여 참가할 것을 제안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기본 핵이 없음. 핵이란게 뭔가 하면, 불가침문제를 비롯해서 상정된 문제토의에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참가해서 민족문제를 논하는데 직접 기여할 수 있게,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참가해서 이렇게 된게 이게 핵인데, 여기에서는 개·폐회식은 전체가 한다, 의제토의는 대표회담에서 한다, 이러니까 개·폐회식이란 들어보면 그저 하나의 행사임.</p> <p>이미 결정하고 협의되고 합의된 걸, 그쪽 얘기대로 하면 공동성명이 아니고 공동합의문건임. 그런 걸 그저 확인하는 것이 전부임.</p> <p>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참가하고 전원</p>

우 리 측	북 측
	<p>이 참가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민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한다는 의미에서도 그게 부족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임.</p> <p>우리는 연석회의를 이렇게 행사로 하자는 것이 아님. 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광범위하게 국론을 토론하자는 것임.</p> <p>어제서 양쪽 국회의원들 전원이 참가하는 것은 좋다고 하면서 전체가 개회·폐회에는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이 문제토의에만은 국회의원의 참가를 그렇게 제한하겠는가? 이것 자체가 일관성없는 변측적인 회담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함.</p> <p>어디 회의를 하면서 도중에 진짜 토론을 할 때는 다 빠지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기왕 양쪽 국회의원들이 개회·폐회도 다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북애도 다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기왕이면 이 토론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참가해야 함.</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무슨 연석회의를 행사로 하자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연석회의와 대표회담이라는 어떤 대사상태는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임.</p> <p>합동회의를 한다해서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이결 조정함이 없이 그저 의정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수결을 해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먹이겠다는 방법은 아님.</p> <p>충분한 협의, 말하자면 그쪽 국회형식과 비슷하게 하자는 것임. 예하면 의정정립도 내놓고 회의운영도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것도 그쪽 방식대로 하자는 것이요, 의견상치가 되는 문제는 충분히 토론해서, 의견상치는 소범위에서 간사회의라든지 우리가 내놓은 공동운영위원회라든지 여기서 압축하고 조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당대표들 나와서 또 협의하고 조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문서작성기초위원회 같은데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북과 남의 각당 대표들</p>

우 리 측	북 측
	<p>다 만나가지고,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의사가 정립됐다 할 때 그것을 가결에 붙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절대 다수 의원들이 합의기초해서 운영하자는 것임.</p> <p>그러니까 무슨 효율이라는 견지에서 말하면 귀측 국회나 합동 회의나 같음. 「개·폐회모임」이라는 것과 우리가 「합동회의」라는 것과 지금 차이는 어디 있는가?</p> <p>우리가 말하는 합동회의는 그래도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다 발언권도 행사하고 가결에도 참가하고, 말하자면 문제해결의 직접주인으로서 참가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5차 준비접촉-토의)</p>

#### 4. 본회담 진행방식

##### 가. 남북국회합동회의(개·폐회모임)

우 리 측	북 측
<p>「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 형식으로 하고 의제토의는 대표회담형식으로 진행함.</p> <p>「개회모임」에서는 준비접촉에서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토의를 위해 각기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 국회의장이 개회연설을 함.</p> <p>「개회모임」은 준비접촉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평양에서 개최함.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서울에서 해도 무방함.</p> <p style="text-align: center;">(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폐회모임」은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공동결의문을 확인·채택하며,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평양에서 개최함.</p> <p>개·폐회모임에는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 형식으로 운영하며 이 자리에 나온 쌍방 국회의원들</p>	



우 리 측	북 측
<p>사이에 서로 인사와 환담을 나누고 따뜻한 동포의 정을 나누면서 역사적인 남북국회회담의 개막과 그 성공적 완수를 축하할 수 있을 것임.</p> <p>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개회모임」은 의제토의에 좋은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임.</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개회모임」을 열어 준비접촉에서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토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이 개회연설과 증진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하는 한편, 「폐회모임」에서는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공동결의문을 확인·체택하게 되면 온 민족의 축복속에서 남북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가운데 남북국회회담의 시작과 끝을 훌륭하게 장식하게 될 것임. 이것 역시 또한 귀측의 남북국회회담은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우리가 대폭 수용한 것임.</p>	<p>환문점 상봉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수정안을 내놓는 바임.</p> <p>1. 회의형식</p> <p>① 북남국회회의는 개막회의와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 폐막회의로 함.</p> <p>② 개막회의와 폐막회의는 북남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로 함.</p> <p>③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1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표회의로 함.</p>

우 리 측	북 측
<p>「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되면 우선 회의에 참가한 쌍방 국회의원들 사이에 서로 인사와 동포의 정을 나누면서 남북국회회담의 역사적 개막과 성공적 완수를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임.</p> <p>뿐만 아니라 이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치인들 사이에 폭넓은 교류의 선례를 남게 되는 것으로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상호 왕래의 길을 트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 형식으로 함.</p> <p>「개회모임」에서는 준비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토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개회연설과 각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함.</p>	<p>④ 개막회의는 판문점 국회의원 상봉이 끝난 후 1개월안에 평양에서 소집함.</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폐막회의는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가 끝난 후 1개월안에 소집함.</p> <p>개막회의에서는 판문점 국회의원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확인하며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에 파견할 쌍방대표들의 명단을 발표함.</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폐회모임」에서는 「대표회담」에서 합의·채택된 「공동합의문」을 확인·공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폐회연설과 각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나.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의)

우 리 측	부 측
<p>「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서는 상정된 의제를 토의, 쌍방합의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의제를 포괄하는 공동결의문을 작성함.</p> <p>「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의 대표수는 쌍방이 합의하는 적정수로 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함.</p> <p>「개회모임」직후 「의제토의를 위한 제1차 대표회담」을 개최함.</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을 갖게 될 경우, 그것은 양측이 진지한 태도로 의제를 심도있게 협의·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쌍무회담에 의한 합의제인 만큼 거기서 이룩된 합의사항을 「폐회모임」에서 만장일치로 확인·채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임.</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대표회담을 주장하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가능한 한 수용하면서 표현을 대표회의라고 한 배경을 말할</p>	<p>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1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표회의로 함.</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민족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쌍방 쌍무회담 형식은</p>

우 리 측	북 측
<p>때 이런 민족문제나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쌍무회담 방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회의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민족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을 했음.</p> <p>그래서 결국 본질적으로 볼 때 오늘 제의한 대표회의라는게 어디까지나 본질에 있어서는 회의임.</p> <p>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를 두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자, 논리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음.</p> <p>집행부 문제가 왜 나오는가 하면, 회의체니까 회의체를 움직일려면 우선 사회를 보는 사람을 의장이라고 하건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또 그 사람이 유고가 있으면 누가 대리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라는 것이 필요한 것임.</p> <p>또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문제 등 사소한 문제를 쌍방이 협의·결정하기 위한 공동운영위원회라는 건 꼭 있어야 될 것임.</p> <p>그렇게 볼 때 이 대표회의도 회의체</p>	<p>그만두자, 그래서 대표회의라고 해서 인원 축소해서 각기 100명으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전원이 같은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연좌해서 말하자면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지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쌍무회담 그렇게는 하지말자는 것임.</p> <p>그리고 그 대표회의에서 왜 「대표」라고 했느냐 할 때는 그쪽에서 299명다는 아니고 그 중 일부니까 대표로 했고, 우리 655명이 다는 참가 못하고 100명이 참가하니까 대표라고 했음.</p> <p>그리고 왜 「회의」라고 했느냐 하면 쌍방 쌍무적인 회담이 아니고 하나의 연좌하는 그런 회의다, 그래서 대표회의라고 이렇게 명명했음.</p> <p>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그쪽에 제기하는 「대표회담」 이런 것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는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가령 평양이면 평양에서 이제 200명이 참가하는 대표회의를 한다고 할 때 그 대표회의의 테두리 안에서</p>

우 리 측	북 측
<p>로서 운영이 됨.</p> <p>(6차 준비접촉-토의)</p>	<p>마음대로 자유롭게 합의도 하고, 우리 북의 정당들은 또 북의 정당들끼리 합의·협약하고, 이래 그것을 남에서 오신 대표들이 합의된 의사를 가지고 그 회의에 임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쌍무적인 이런 협상방식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음. 그것도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한다면 막을 수도 없음.</p> <p>그러니까 민족문제를 놓고 논하는 무슨 적십자회담하고 다르고 경제회담하고 다르다 이것임. 이 국회회담이요 국회 본연의 운영방식을 살리자, 국회 본연의 운영을 살려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p>개막회의는 회의로 하고, 기본문제 토의는 회담으로 하고 다시 종결에 가서 회의로 하고, 회의로 했다가 회담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변칙적임.</p> <p>이걸 회의로 일관시킬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표회의로 하자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대표회의하고 대표회담하고 어떻게 다른가? (6차 준비접촉-토의)</p>	<p>그렇다면 귀측에서 얘기하는 20명 정도의 대표회담을 하는데 요란하게 무슨 개막회의라는 게 필요있는가? 그래도 100명 정도의 대표회의를 한다면 개막회의가 의의가 있고 폐막회의도 의의가 있음. (6차 준비접촉-토의)</p> <p>대표회의와 대표회담 차이인데 그거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적어도 쌍무회담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임. 형식상 수석대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대좌하는 형태로는 하지말자. 형식은 그저 국회회의 압축판이다. 남에서 하는 국회회의 압축판이요 우리 최고인민회의하는 압축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집행부를 협의·조정기구로 거기다 앉혀 놓았다 뿐이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임. 대좌하는게 아니라 연좌하는 것임. (6차 준비접촉-토의)</p>
<p>본질에 있어서 거의 근접을 했으면</p>	<p>쌍무회담 형식도 그 내부에 게재되</p>

우 리 측	북 측
<p>표현이 무슨 문제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대표회담으로 이름을 붙일거나 대표회의로 할거나 하는데 따라서 약간 내용이 달라짐.</p> <p>회담으로 하면 집행부라는 것은 필요없는거고 공동운영위원회도 필요없는거고 쌍방이 사회하는 그런 부담도 필요없는 거고한데, 회의체로 할 때는 그렇게 전부 또 들어가야 됨.</p> <p>그런것에 대해서 어느 의미에서는 가장 지금 본질면에, 기본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이나 입장이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토의)</p> <p>남북국회회담에서 쌍방이 토의하고자 하는 의제들, 즉 남북적십자회담·남</p>	<p>어 있는 것임.</p> <p>이런 형식을 우리가 대표회의라 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 온 연석회의완 본질적으로 다름.</p> <p>지금까지 남북연석회의, 북남연석회의를 우리가 주장하고, 합동회의를 우리가 주장하고, 합동회의를 주장해온 것은 무어냐? 북의 최고인민회의가 특정한 문제, 불가침의 문제를 상정시켜서 북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마당에 남의 국회의원들이 연석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석회의라고 했음.</p> <p>그러나 이걸 그렇게 아니고, 북에서 하는 무슨 대표회의에 남의 국회대표들이 참가하는게 아니라 같은 동격의 자격을 가지고 새롭게 모여 앉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던 연석회의나 합동회의하고도 형식이 다름.</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토의)</p> <p>기본문제 토의를 대표회의형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대표회담형식으로 하는</p>



우 리 측	북 측
<p>북경제회담의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 남북불가침선언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는 사실상 남과 북사이에 협의·해결하자는 쌍무적 내용으로서, 그 밑바닥에는 상호 현실인정과 존중의 정신이 깔려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임.</p> <p>또한 같은 이념과 체제하에서는 회의방식의 모임이 생산적일 수 있으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의 대표가 회의방식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아직까지 그같은 선례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함.</p> <p>우리는 제6차 접촉에서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에 참가할 대표수를 50 : 50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한 쌍무적 회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음.</p> <p>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을 쌍무회담의 성격을</p>	<p>가 하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이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하겠는가 하는 것을 위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인정함.</p> <p>우리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같이 쌍방은 북이다, 남이다 하는 관념보다는 단합을 실현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할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을 앞세워야 함. 북과 남이라는 관념을 떠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쌍방회담 형식의 대표회담보다 대표회의형식이 우월하다는 것은 더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임.</p> <p>우리가 대표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회의운영방식을 통일문제, 민족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서도 그대로 살리자는 것임.</p> <p>대표회의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귀측이 거기에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그것이 앞으로 북남대화에서 하나의 전례로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모든 북남대</p>

우 리 측	북 측
<p>갖는 「대표회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함.</p> <p>「대표회담」은 쌍방에서 각기 5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쌍무회담 형식으로 함.</p> <p>「대표회담」은 쌍방 합의제로 운영하며 표결은 하지 않음.</p>	<p>화들을 다 회의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귀측은 「회담」형식이 대결을 조장한다고 말하지만 결과를 생산적으로 생산해 내자는 의미에서는 역시 회담형식으로 가지고 나가서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음.</p>	<p>귀측은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이 회의형식도 대표회담으로 해야지 대표회의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전개를 하는데 이것은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임.</p>
<p>(7차 준비접촉-토의)</p>	<p>(7차 준비접촉-토의)</p>
<p>회담이나 회의냐가 기본원칙임. 이 원칙이 정해져야 세부사항이 나오는 것임. 집행부하고 공동운영위원회는 합의를 했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합의사항으로 할 것을 분명히 명시했음.</p>	<p>쌍무회담에서야 수석대표가 있어서 무슨 분쟁문제가 되고 수석대표가 오손도손 저녁에 가서 만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연락원이나 하나 중간에 놓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또</p>

우 리 측	북 측
<p>회답과 회의는 다르며 이진 원칙임. 회답이 될 때와 회의가 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임. 기본원칙은 합의보지 않았음.</p> <p>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를 두고 공동의장제로 한다는 것은 합의된 사항임.</p> <p>(7차 준비접촉-토의)</p>	<p>무슨 집행부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가?</p> <p>우리가 지난번에 장시간에 걸쳐서 해석사업 했음. 「집행부」는 「대표회의」안에 있는 기구라는 것, 「쌍무회담」의 기구가 아니라는 것, 또 「공동운영위원회」도 대표회의 안에 있는 기구라는 것, 쌍무회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등 다 합의하고 이해했음.</p> <p>(7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은 대표회담을 하는 것이 서로 맞서는 것이고 대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염원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결이 아니고 서로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지역의, 우리 민족의 일부분과 또 이 지역의 특수한 체제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결일 수도 없고 또 대좌일 수도 없음.</p> <p>(7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가 대표회의를 하면 귀측에서 마치 무슨 함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집행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분쟁문제들을 협의하자는 것임.</p> <p>또 가결방식에서 다수결이라는게 좋지않다 해서 그것도 합의제로 다 받아들였고, 이러면 이 대표회의 안에서 언좌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쌍무회담 형식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음.</p> <p>(7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지난번 6차접촉이 끝난 후 귀측단장이 기자회견 하는 것을 좀 보았음.</p> <p>그때도 전금철 단장께서 기자들 앞에서 명백히 얘기를 했음. 대표회의로 할 것인가 대표회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7차 준비접촉-토의)</p>	<p>이 형식은 국회본연의 운영방식임. 우리 최고인민회의도 그렇게 운영하고 대좌하는 형식이 없음. 그쪽 국회도 대좌가 아님. 이것을 합쳐서 그냥 연좌하는 형식, 국회본연의 운영방식으로 하자는 것임. 국회에 사회자가 있어 가지고 집행하고, 각자가 나와 정당출신이다 나와 발언하고 견해를 다 피력하는 이러한 방식임.</p> <p style="text-align: right;">(7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은 우리측더러 지난번에 완전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완전히 번복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측은 국회회의를 전제로 해서 거기서 대표자들을 다섯사람씩 열사람, 이렇게 집행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쌍무적인 완전 합의제로, 또 거기다가 전체 국회회의에서는 확인하고 채택하는 식이라면 참 좋은 안이겠다, 그 안은 돌아가서 이 다음 회의때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지 합의한 것 아무것도 없음.</p>	<p>귀측은 6차회담에서 대표회의 기본 방식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했음.</p> <p>그 다음에 가결방식에 대해서도 합의제에 의견이 도달하면서 이것이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특히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표시했음.</p> <p>다만 이것이 전례가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에 가서 연구해 오겠다고 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7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해 본 결과 그러한 「스타일」보다는 「회담」이 좋겠다는 우리 의지를 표명한 것임.</p> <p>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복했다는 얘기는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임.</p> <p>(7차 준비접촉-토의)</p> <p>북쪽과 남쪽이 전쟁하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또 남북한 간에 경제적인, 적십자적인 또는 이산가족을 위한 교류를 하자라는 의제는 쌍부적 회담을 의미하는 것임.</p> <p>이러한 문제는 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지 불가침문제를 어떻게 회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논의하자는 이야기인가?</p> <p>현실적으로 북과 남이 다른 체제하에서 현존하고 있음. 여러분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50대 50, 다시 말해 1대1의 위치에서 회의를 하자, 회의구성원도 1대1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50대50으로 구성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대등한 위치이며 그래서 회담의 형식이어야 됨.</p> <p>(7차 준비접촉-토의)</p>	<p>남이건 북이건 우기기전에 민족 공동의 성원임. 우리는 이 입장에 서자는 것임. 이것이 우리가 회의형식으로 하자는 취지임.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찌서 우리 한 집안의 대사를 논의하는데 천척끼리 두패로 갈라서 논의하는가 그것임.</p> <p>우리는 벌써 연합회의, 연석회의에서부터 오늘 대표회의로 후퇴를 했음. 그러나 귀측에서는 회담형식 문제에 대해서는 일보의 양보도 없음.</p> <p>회의형식문제에 관해 지난번 합의된 사항을 우리가 뒤집어 있는나든지 그래서 새로 출발을 하자고 그렇게 말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을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돼야 됨.</p> <p>(7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의 성격문제임.</p> <p>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p> <p>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준비접촉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제6차 접촉에서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에 참가할 대표수를 50대 50으로 합의한 사실, 그리고 쌍방이 토의하고자 하는 의제의 성격이 쌍무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은 모두가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 쌍무적 회담관계를 반영한 것임.</p> <p>이러한 견지에서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을 쌍무회담의 성격을 갖는 「대표회담」으로 해야 한다고 믿음.</p> <p>이와 관련하여 쌍방이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의 테두리안에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남북국회회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 조속히 합의를 생산해 내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결과로서 쌍무적</p>	<p>우리는 본회의를 연석회의형식으로 하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당한 인원으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일방의 의사를 타방에 내리먹이는 불합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공동의장을 내서 회의를 사회하게 하고 또 쌍방에서 동수의 인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상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최종의결은 다수결의 방식이 아니고 합의제 방식으로 할데 대한 아주 획기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던 것임.</p> <p>우리가 6차상봉에서 내놓은 수정제안으로 말하면 대표회의와 관련하여 귀측이 의문시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준 아주 합리적인 제안으로서 결국 귀측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보고 있음.</p> <p>그러므로 오늘 상봉에서는 귀측이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본회의형식을 우리가 내놓은 대표회의형식으로 하는데 기꺼이 동의해 나오리라고 믿음.</p> <p style="text-align: right;">(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회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음.</p> <p>(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측은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을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쌍무적인 대표회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음.</p> <p>남북국회회담은 남과 북의 두 체제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사이의 회담으로서 지금 이 준비접촉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귀측 최고인민회의의 위임을 받은 각기 5명의 대표간에 쌍무적 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귀측은 부인하지 못할 것임.</p> <p>뿐만 아니라 남북국회회담에서 쌍방이 토의하기로 의견이 접근된 교류·협력문제와 불가침선언 문제도 쌍무적 성격의 의제이며 이제까지 남북간에 있었던 모든 회담들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대표회담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나는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도 쌍무회담의 성격을</p>	

우 리 측	북 측
<p>갖는 「대표회담」으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함.</p> <p>이미 지난 85년의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 남북 쌍방간에 국회회담의 형식을 대표회담으로 할 것에 합의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협의·결정해야 할 회담형식의 귀중한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9차 준비접촉-기조연설)</p> <p>그래서 7차회담때도 아주 명확히 이야기 드렸고 요번에도 명확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측은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이 그 쌍무적인 회담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함. 굳이 옛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지만 1985년도에 전금철단장께서 회담형식이 좋다 그렇게 하자 한대로 귀측에서 이것은 회담형식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견의 일치를 보자 하는 것이 매우 온당하지 않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9차 준비접촉-토의)</p>	<p>북남국회회의 형식문제에서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대화형식을 우리는 대표회의로 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합리적이라고 인정함.</p> <p>우리가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대화형식을 대표회의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형식이 국회를 운영하는 본연의 형식에 맞을 뿐아니라 대결관념을 배제하고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는 형식으로 되기때문임.</p> <p>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쌍방이 대표회의에만 고유한 공동운영위원회, 공동의장,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이미</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은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을 쌍무회담 방식의 대표회담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반하여 귀측은 연석회의 방식의 대표회의로 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음.</p> <p>귀측은 대표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p>	<p>합의를 본 조건에서 대표회의로 하는데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함.</p> <p>귀측은 7차상봉때에 대표회의에만 존재할 수 있는 공동운영위원회와 공동의장, 집행부를 쌍무회담형식인 대표회담에 두자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아주 억지이고 대화의 형식과 운영방법의 호상관계를 놓고 보아도 모순이며 자기가 했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신의없는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p> <p>오늘 상봉에서는 귀측이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화의 형식을 우리가 내놓은 대표회의로 하는데 기꺼이 동의해나오리라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9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국회를 운영하는 본연의 형식에 맞을 뿐 아니라 대결관념을 배제하고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음.</p> <p>그러나 나는 이러한 귀측의 주장이 남북관계의 현실과 남북대화의 관례를 무시한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함.</p> <p>남북국회회담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 하는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 대의기구 사이에 갖는 회담임.</p> <p>따라서 회담형식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립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같은 정치제도와 법체제 아래서 운영되는 기구사이에서나 가능한 연석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임.</p> <p>뿐만 아니라 쌍방이 토의하고자 하는 의제들도 쌍방간에 협상을 통해서 협의·해결해야 할 쌍무적 내용이기 때문에 연석회의 방식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은</p>	

우 리 측	북 측
<p>자명한 것임.</p> <p>또한 귀측은 우리측이 연석회의에만 존재할 수 있는 공동운영위원회, 공동의장, 집행부를 쌍무회담 형식인 대표회담에 두자고 한 것은 의지이며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10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그러나 우리측은 처음부터 남북국회회담을 대표회담 방식으로 하자고 해왔기 때문에 합동회의 형식의 개·폐회 모임에서는 공동의장제를 두기로 했으나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석대표제로 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 공동위원회와 집행부는 귀측의 제안내용을 존중하여 우리측에서 수용한 것임.</p> <p>공동운영위원회와 집행부의 설치문제를 가지고 회담형식과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은 주객을 전도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며 여러 사폐나 관례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1972년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지난 연말 제6차 남북체육회담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던 「남북단일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에서, 다같이 공동위원장을 두면서도 쌍방합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회담형식과 성격을 규정하는데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생각함.</p> <p>귀측이 그간 남북간의 모든 회담이 쌍무회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남북국회회담을 대표회담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1985년의 합의정신에 따라 우리측이 내놓은 대표회담 방식에 흔쾌히 동의해 오기를 바랍.</p> <p>(10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다. 집행부(간사회의)

우 리 측	북 측
<p>지금 같으면 각 정당대표들로 하여금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신데, 이 집행부를 양측에서 대략 몇 사람으</p>	<p>기본분쟁토의를 위한 대표회의에서는 각 정당 대표들로 집행부를 구성하며 대표회의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은 집행부에서 협의 조정함.</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 해서 한 100명쯤 모여 앉으면 뭐 다중회의다 효율적이 못된다 이런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각 정당대표들로 구성하자. 물론 그 집행부에 의장도 들어가 있음. 쌍방 의장도 들어가 있음.</p> <p>그래서 사회는 의장이 하도록 하고, 공동의장이 나오고 그리고 집행부를 구성해서 그 분쟁문제들, 의견합의되지 못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자.</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가 기본으로 염두에 둔 것은 그저 각 정당에서 대표 한사람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큰 정당 같은데는 조</p>

우 리 측	북 측
<p>로 생각하는가? (6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에서 집행부가 각 당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토의하고 이것을 대표회의에 넘기면 만장일치로 가결될 것이다 그랬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본질</p>	<p>금 신축성있게 뭐 한 두어명 더 들 수 있다고 생각함. (6차 준비접촉-토의)</p> <p>집행부가 정당대표들로 구성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의견분쟁문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분쟁문제는 집행부에서 협의하고 휴식을 선포하고 협의하고 합의함.</p> <p>가령 만장일치로 집행부에서 최종합의 봤다고 하자. 그건 아무래도 전체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이 집행부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견합의를 보고 그 내용을, 선포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태반의 경우에 만장일치로 통과되리라고 봄. (6차 준비접촉-토의)</p> <p>민족문제라는 것을 토의하는데 그 토의에 참가하는 분들은 우선 다수가 참가하여 토의하자는 것임.</p> <p>대표회의 기본방식은 전체가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p>

우 리 측	북 측
<p>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이, 귀측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걸쳐 주장하신 가능한 다수가 모여서 이 민족문제를 토의하자 그랬음.</p> <p>그러면 집행부에서 토의한 것을 우리가 주장한대로 남쪽 국회의원 전원, 북쪽 국회의원 전원이 모인 폐회모임에서 반장일치로 가결하면 그것이 보다 다수가 참여하고 양쪽 의원이 모이는 것이지, 이게 뭐 또 100명씩 모이는 것이냐? 그것이 이해가 안감.</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토의)</p>	<p>참가해서 민족의 운명하고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넓게 깊이있게 토론하자, 그것이 기본방식임.</p> <p>거기에서 분쟁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집행부에서 협의·조정하는 것임. 그래서 기본방식은 어데까지나 다수가 모여서 655명, 299명 다 모여 앉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하시겠다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모여 앉아서 그래도 다수의견의 형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임.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분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집행부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토의)</p>
<p>대표회의를 하면서 의장을 포함해 가지고 예컨대 각 당의 대표라든지 회의에서 이견이 있는 것을 말하자면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집행부의 구성에 대해서 귀측에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부</p>	<p>운영위원회와 대표회의 문제 이견 어디까지나 회의임. 회의니까 집행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임.</p> <p>그런데 집행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됨.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토론 끝에 귀측에서 제</p>

우 리 측	북 측
<p>엇인지 그리고 의견상이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양측대표가 완전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는 의견만 교환하고 대표회의, 본회의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로 되는 것인지? 그러한 면을 좀 알았으면 좋겠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의 진행을 수석대표와 비슷한 대표를 두지 않고 그냥 모임형태로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런 측면을 묻고 싶음.</p> <p>(6차 준비접촉-토의)</p>	<p>기했던 의견들을 참작해서 각당 대표들로서, 각 당에서 여러사람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각각 한두명씩 지정대표를 냄.</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집행부는 결론적으로 각 정당대표가 한명씩은 최소한도 들어간다는 것이지만 남북이 동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는가?</p> <p>(6차 준비접촉-토의)</p>	<p>동수로 하면 더욱 좋음.</p> <p>이 집행부는 회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상이들을 주로 거기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p> <p>이게 집행부 역할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집행부는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함.</p> <p>「집행부」는 「대표회담」의 위임에 의해 「대표회담」에서 제기되는 의견차이를 협의·조정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합의문」 초안을 작성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라. 공동운영위원회

우 리 측	부 측
<p>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쌍방 5명의 대표로 간사회의, 귀측에서 말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연석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쌍방에서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전체회의를 운영하는 연석회의에서 공동운영위원회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걸려있는걸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좁히고 공동위원회에서 좁혀진 문제를 다시 내놓기도 하고, 호상 이렇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p> <p>이건 상식으로 되어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란 말인데 이런 실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난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함.</p> <p>(3차 준비접촉-토의)</p>
<p>합동회의의 구성,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왕에 북측에서 국회의원들 우리끼리 만나자 또 운영에서는 5대 5로</p>	<p>공동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이 앞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연석회의와 별도의 어떤 기구로 저희들 생각하는건 아니고 그건 그저 말하자면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무, 하나</p>

우 리 측	북 측
<p>해가지고 공동운영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귀측에서 먼저 재안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단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 그런 입장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의 조직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간사회의와 같은 것인가?</p> <p>(4차 준비접촉-토의)</p>	<p>그쪽에서 제기한 간사회의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함.</p> <p>전체회의를 하다가 또 거기서 논의된 문제들을 매듭짓기 위해서, 의사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소범위에서 협의한다든지 소범위에서 협의된 것을 전체에 제기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더 연구해서 실무단에서 협의·해결 하자는 것이고 아직 공동위원회 사명, 기능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없음.</p> <p>(4차 준비접촉-토의)</p>
<p>거기에 운영회의가 다섯명인데 이것을 각자 11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22명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준비회답, 운영</p>	<p>공동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대표권을 가진 기구가 아님. 연석회의 안의 보조기관이란 말임.</p>

우 리 측	부 측
<p>회담 다 해가지고, 좋게 문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모인데 가서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봄.</p> <p>또 의제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안건을 갖다가 하나하나 문제를 운영위원회라 해서 그것을 5명, 5명 할 것이 아니라, 11명으로 해서 먼저 평양에서 하든지, 서울에서 하든지 이렇게 회담을 한번해서, 모두가 모였을 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할 수 없겠는가, 이것이 질문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가 말하는 운영회의라는 것은 양측의 쌍방 대표가 모여가지고 어떤 의안을 가지고 합의를 작성해서 만장일치로 합동회의에서 찬성하도록 내놓는 그것을 만드는 회의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집행부를 두고 또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그것 상당부분 기능이 중복되지 않을까?</p>	<p>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쌍방에서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함.</p> <p>(6차 준비접촉-기조)</p> <p>공동위원회는 실무 일꾼들로 할 것이고 집행부는 그게 다 대표자 급 되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니까 집행부라는 것은 각 정당의 대표들로 의장을 포함해서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면 공동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 정도는 그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정당대표들로 구성된 집행부가 있고 또 운영을 위해 각각 공동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혼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p> <p>공동운영위원회에 관한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음.</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위원회라는 세부적인 것을 토의할 수야 없음.</p> <p>(6차 준비접촉-토의)</p> <p>공동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토론은 어느 정당이 먼저 시키겠는가, 그 다음에 합의서 채택은 어느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등을 협의하는 기구로서, 말하자면 운영분과나 같음.</p> <p>몇시부터 몇시까지 휴식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토론회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문건 채택하고, 그 회의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다. 그런 차이를 두자는 것임.</p> <p>분명히 그건 어차피 실무일꾼들이 나서서 그런 연락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봄.</p>

우 리 측	북 측
<p>공동운영위원회는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함.</p> <p>「공동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작성 등 회담운영과 관련된 실무문제를 다룸.</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이런 차이를 두는 것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 5. 대표단 구성

우 리 측	북 측
<p>남북국회회담의 대표단은 쌍방 각기 20명의 대표와 40명의 지원인원 및 50명의 취재기자로 구성하며, 수석대표는 의장이 지명하는 중진위원으로 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연석회의에는 쌍방 국회의원 전원과 쌍방에서 각각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 단체들의 대표와 각계인사 50명씩 참가함.</p> <p>수원은 각각 20명으로 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남북국회회담에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을 참가시키는 문제와 관해서는 국회회담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함.</p> <p>귀측에서 5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쌍방 주민의 대표인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인 만큼 여기에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개별인사를 별도로 참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봄.</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연석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는 쌍방에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우리는 북한 국회연석회의에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것이 분열된 우리나라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능률적인</p>

우 리 측	북 측
<p>5명 내지 6명을 생각하는데, 귀측에서 또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또 의논할 수 있음.</p> <p>(5차 준비접촉-토의)</p> <p>20명은 전체가 안 모였을 경우 20명이고 이제는 전부가 가지 않는가? 다와가지고 개회식하고, 기조연설 다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의제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심의하는 그 대표수가 5명 또는 6명이라는 얘기임.</p> <p>(5차 준비접촉-토의)</p>	<p>해결책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봄.</p> <p>그런 전지에서 우리는 북남 국회연석회의에 정당·단체, 각계인사들까지 참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 정당, 단체 및 각계인사들을 참가시키는 것은 국회의석을 가지지 못한 이런 계층들의 의사도 집대성하는데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음.</p> <p>(2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대표회담 형식을 주장하는데 그 적정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p> <p>(5차 준비접촉-토의)</p> <p>앞서 20명씩 하기로 했었잖았는가?</p> <p>(5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20명도 좋고 30명도 좋음. (5차 준비접촉-토의)</p> <p>「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 참가하는 적정수의 대표라는 것은 귀측의 중앙방송과 「로동신문」에서 몇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5명을 생각하는 것은 아님.</p> <p>그때에도 굳이 꼭 숫자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꼬리를 잡힐 염려가 있으니 5명부터 20명까지, 30명까지 다 좋다는 것임.</p> <p>그래서 5명만 잡아가지고 귀측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적정수라는 것은 귀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축성있는 수요를 말하는 것임. 그러나 오늘 편의상 각기 20명이내 즉 남북이 합해서 40명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측 의견임. 이것은</p>	<p>대표회담을 20명으로 하자 했다가 이제는 개폐식을 전체가 참가하니까 대표회담을 5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20명에서 더 후퇴한 감이 있음.</p> <p>(5차 준비접촉-토의)</p> <p>남북국회대표회의의 참가수를 대폭 줄여서 쌍방에서 각각 50명으로 할 것을 다시 제의함.</p> <p>우리가 오늘 또 다시 북남국회대표회의 참가수를 대폭 줄여서 각각 50명으로 할데 대한 획기적인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 상봉을 빨리 결속짓고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마련해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긴장완화, 전쟁방지분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아주 성실하고도 진지한 대책이라고 생각함.</p> <p>(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양측에서 수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이같은 우리측의 제의는 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현실을 아울러 고려한 것으로서 국회회담의 참가자 수를 늘리자는 귀측의 주장도 반영한 것임.</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숫자 문제는 굳이 50명이 좋다고 하시면 좋음.</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개회모임」, 「대표회담」, 「폐회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대표단은 150명 내외의 지원인원과 200명 내외의 기자를 동행토록 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 6. 회담운영절차

### 가. 합의방식(합의제·다수결)

우 리 측	북 측
<p>국회대표회담에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채택해서 각 국회에 돌아가서, 최고인민회의에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대표회담에서 결론을 내렸으니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킵시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하여 정부에 이송</p>	<p>토론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회의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하되 토론자수는 북과 남에서 동수로 함.</p> <p>토의된 의안에 대한 가결은 거수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p> <p>의결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수는 북과 남에서 동수로 하며 회의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음.</p> <p>표결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공동계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계산위원회는 북과 남에서 각각 5명씩으로 구성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이런 것임.</p> <p>(1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 생존하고 관계되는 이 큰 문제를 완전 합의제로 해야 결정된 상황에서 이북이나 우리나라 승복을 하는 것임.</p> <p>51대 49로 표결하자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p> <p>(1차 준비접촉-토의)</p>	
<p>북측은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최고인민회의가 만들어 졌고, 우리는 우리 6공화국 새 헌법에 의해 국회가 만들어졌음.</p> <p>별개의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개의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 의제를 놓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공통 의사를 창출해 내는 것이 정치현실적으로 불가능함.</p> <p>(2차 준비접촉-토의)</p>	<p>체제를 달리한 대표들이 모여서 연석회의같은 것을 하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귀측 논리임.</p> <p>그게 체제우위론임. 그건 덮어두어야 함.</p> <p>설사 의견차이가 있다고 해도, 남조선 국회안에서 논쟁보다도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음.</p> <p>(2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들이 그저께 2차 접촉에서 수정안으로 제의했던 골자가 어디까지나 남북국회의 대표들이 쌍방이 평양이 되었든지 서울이 되었는지 한번 만나 가지고 심도있게 예비접촉에서 채택된 의제들을 놓고 토의하되 거기서는 어디까지나 합의제로 함.</p> <p>표결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임.</p> <p>쌍방간에 양보할 것 양보하고 주장할 것 주장해 가지고 완전합의제로 채택된 최대공약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든지 여러분들이 오시든지 천여명에 가까운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합동회의에서 이걸 확인하는, 또 우리는 돌아와 가지고 국회에서 어느 경우는 승인을 맡는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1차는 국회의 기본적인 대외정치에 입각한 입장에서 형식을 갖춘 다음에 합동회의에서 확인을 하고 만세부르는 이러</p>	

우 리 측	북 측
<p>한 형식으로 밀고 나가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p> <p>(3차 준비접촉-토의)</p> <p>사실은 쌍방회담이 됩니까? 민중대회가 됩니까? 쌍방이 합의본 것은, 완전히 합의본 것은 채택하느냐, 아니면 다수결로 해서 어떻게 군중대회 형식으로 하느냐, 어느쪽입니까?</p> <p>(4차 준비접촉-토의)</p> <p>그것이 여기에서 토론이 되어야 됨. 여기가 절차문제 토의하는 곳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표하는 소위 인구와 북측이 대표하는 인구가 서로 다름.</p>	<p>저희들이 일단 제기한 것은 뭇인가, 다수결로 하자는 것임. 합의서초안에 제기했음. 그거야 뭐 민주주의의 가장 보편적 원칙이니까 좋은 것임.</p> <p>문제는 그 원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데서 여러가지 신축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함. 어떻게 활용하겠냐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은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음. 합의서 토론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절차문제 토론할 때도 있을 것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그래서 1대 1로 다같은 선거구를 가진 사람이 한다면 다수결도 있을 수 있는데, 대표하는 유권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다수결로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고 또한 과거의 우리의 남북간의 관계로 보아서 쌍방성이 있어야 됨. 양쪽의 입장을 다 대표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음.</p> <p>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합의서안에 분명히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아야 됨. 한 두개 정당에서 그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데가 있음. 그래서 알고 가는게 우리로서는 토론하기가 낫겠다라는 생각임.</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p>합동회의를 운영하는데 다수결이 적용되냐 안되냐, 만장일치제냐 하는 이것을 이 결정에 분명히 받고 넘어가야 됨.</p> <p>쌍방회의냐 아니면 3,000만, 4,000만,</p>	

우 리 측	부 측
<p>2,000만이 모인 그러한 다수결회의나, 그렇게 4,000만, 2,000만이 모이게 되면 남쪽이 대표수가 배나 되어야 함.</p> <p>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쌍방회의로 하자는 의견임. 그리고 만약 다수결이라는 말이 있고 만장일치제 아니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우리 남쪽의 정당에서는 절대로 합의 못봄.</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p>민족문제를 어떻게 표결하자는 겁니까? 49%대 51%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승복할 수도 우리들이 승복할 수도 없는 것임.</p> <p>절대 합의제로 해야 됨. 그러니 이 두가지, 전체 모이는 것 안되고, 표결 안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됨.</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p>자꾸 표결이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쪽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표결이 됩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대표성이 다 비슷함.</p> <p>우리는 4천만의 299명이고,기기는 2천만의 655명인데 어떻게 동등한 자격으로 1대1 표결을 하는가?</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어차피 표결에는 동수로 참여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서신에서 밝혀진 바 있음. 가령 표결과정에서 우리가 299명이니까 여러분들의 299에서 우리들 쪽에서 여러분들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표가 가리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p> <p>10,000의 1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임.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음.</p> <p>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51대 49라는 것이 피차가 승복하기 어려운 것임.</p> <p>표가지고 대결이 안됨. 표가지고 대결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전체국민들의 국민투표라는 논리도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p>	<p>표결문제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기구도 봐 두자는 얘기임.</p> <p>(4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억을 해야 됨.</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어떻게 민족문제를 표결로 한다는 것인가? 잘 알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가?</p> <p>(4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가 다수결의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처음에 얘기했음.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에 제기했음. 아주 원칙적인 문제 얘기했음.</p> <p>(4차 준비접촉-토의)</p>
<p>귀측 인원수 3분의1, 즉 218명과 우리 150명인데 합동회의라는 것이 다수결로 하는 회의인가?</p> <p>50표 차로, 100표 차로 결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음. 서로 마음을 털어 놓고 토의하고 화해하고 이런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와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함.</p> <p>(5차 준비접촉-토의)</p>	<p>다수결로 말인가? 회의형식을 먼저 결정하면 뒤따라 운영문제와 실무절차 문제이니까 능히 좋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p> <p>만장일치냐, 무슨 다수결이냐, 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문제임.</p> <p>절차문제를 토의하면서 토의를 해도 충분히 토의할 수 있음.</p> <p>(5차 준비접촉-토의)</p>
<p>의제로 선택되는 문제를 토론한 후 그 의제에 대해서 상반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자는 것인가?</p> <p>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p>	<p>의견에 합치가 다되면 표결에 들어가지만 분쟁문제가 있어 합의못되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기구들에서 협의·조정함.</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면 표결 안하는 것인가?</p> <p>다행히 피차 양쪽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이유없다, 북측 제안이 좋다 또 남측 제안이 좋다, 해가지고 쌍방 천명이 모인데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지만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령 거기서 피차 상반된 견해가 나왔을 경우에는 표결을 안하고, 가령 소의회라든가 운영위원회로 넘길 경우에는 그것까지 양해가 된 것인가?</p> <p>민족문제를, 통일문제를 어떻게 표결에 붙인다는 것인가? 합의를 해야 함. 합의해 가지고 단일안으로 도출해 가지고 채택하는 것 아닌가?</p> <p style="text-align: right;">(5차 준비접촉-토의)</p>	<p>간사회의 같은데서 협의·조정하면 됨.</p> <p>거기 국회운영하는거나 같음. 이제와 같이 토론한다, 그속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어서 의견이 상치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말하는 간사회의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그 밖에 비공식적으로 정당끼리도 모여 앉아서 소범위에서 협의도 하고 조정하고 의견이 상치되는 것을 간격을 좁히고, 문건위원회에서도 그 간격을 좁히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어느 방향에서 의견·견해가 일치되었다고 할 때에는 표결에 부친다는 것임.</p> <p>귀측에서 주장하는 만장일치 가결의 원리도 표결임.</p> <p style="text-align: right;">(5차 준비접촉-토의)</p> <p>운영방법의 문제는 우리가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과반수 운영문제를 제기했는데, 가결문제 예를 들면 과반수가 아니</p>

우 리 측	북 측
	<p>면 일치합의제도 있잖은가? 예를 들면 「Consensus」 이런 방법도, 또 만장일치도 있잖은가? 그런 것을 놓고 어느 것이 좋은가를 협의하자는 것임.</p> <p>우리가 과반수를 제기한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제기했음. 그러나 민족문제를 놓고 그쪽의 어떤 야당의원 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을 하나 찾아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님.</p> <p style="text-align: right;">(5차 준비접촉-토의)</p> <p>대표회의에서 기본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일치합의방식으로 함.</p> <p>일치합의에서는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합의하는 것으로 인정함.</p> <p>폐막회의에서는 대표회의에서 작성한 공동합의서를 박수로 인정함.</p> <p>우리는 국회 회의운영 절차문제에서도 귀측의 주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종합의를 다수결방식으로부터 절대다수의 찬성을 염두에 둔 일치합의제로</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은 대표회의에서 기본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는 일치합의방법으로 한다는 새 용어를 쓰면서, 또한 일치합의라는 뜻에 대한 설명은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보는 합의방식이 일치합의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수정하였음.</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여기 「일치합의제」라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하고 조금 차이를 두자는 것입니다.</p> <p>가령 만장일치라면 어떤 또 폐단이 있을수 있는가 하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분이 200명이 모였는데 199명은 찬성인데 한 사람이 어떤 정치적 동기로 또는 어떤 동기로 해서 반대한다면 이 한사람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다는 문제임. 이건 비민주주의적임.</p> <p>그래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한사람 반대를 해서 민족의 운명을 희롱하는 것으로 됨. 그래서 그 만장일치라는 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일치합의제로 하자. 일치합의제안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더욱 좋다. 그러나 극소수 인원이 반대하고 절대다수 인원이 찬성했을 때도 일치합의제로 통과된 걸로 하자.</p> <p>(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일치합의방식으로 하되 극소수의 반대는 이를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은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해보지 않았는가?</p> <p>이것은 필요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임.</p> <p>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음. 왜냐하면 한두 사람은 우리 다수가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음. 누가 보더라도 민족의 문제는 일치합의제로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 한둘 반대하는 것은 우리 양쪽이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도출해 낼 수 있음. 이것은 우려할 필요도 없는 사항을 굳이 넣어 놓은것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6차 준비접촉-토의)</p> <p>일치합의제라는 것은 물론 수를 헤아리는 다수결방식은 아니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별적 의사를 집결하는 방식임.</p> <p>그런 의미에서 이견 전원 일치합의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p>	<p>그런데 그게 다 변형되어서 다른데 국제회의들에서는 이제와 같이 절대다수 합의제방식으로 일치합의제방식이 절대다수합의제로 변형된 이런 국제회의가 또 적지않게 있는 것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해주었으면 좋겠음.</p> <p>(6차 준비접촉-토의)</p> <p>회답이 아닌 회의방식을 취할 때에 극소수가 반대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어볼려면 투표라는 절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의사표시를 받지 않고는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일치합의제라고 하지 말고 그저 합의제라고 하는 것이 좋겠음.</p> <p>집행부에서 협의·조정한다는 말하고 대표회의에서 일치합의제한다는 말하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p> <p>여기서 협의·조정한다고 하고 거기에 가서 극소수 반대가 있을 경우에 안된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음.</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는 100명 중에서 40명 정도 반대했다든가 그럴 경우도 통과시키지 말자는 생각임.</p> <p>극소수라 하면 그 보다 훨씬 작은 숫자를 염두에 둔 것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부 측
<p>집행부에서 협의·조정한다고 해놓고 또 전체대표회의에서 일치합의제를 한다고 하니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6차 준비접촉-토의)</p> <p>그 전에 집행부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차 준비접촉-토의)</p>	<p>집행부 성원들의 완전 합의를 보아야 될 것임.</p> <p>그건 민족문제인데 어느 정당이 하나 반대하는 격이 되는데 그 정당을 내놓고 또 가결에 부칠 수 없지 않겠는가? (6차 준비접촉-토의)</p> <p>대표회의가 최종결론권을 가졌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논의된 것은 내적 합의이니까, 내적 합의로 결론권을 줄 수 없지 않는가?</p> <p>그래서 그걸 우리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체회의에 확인을 시키는 공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닌가.</p> <p>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만장일치로 된다고 확신함. (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복 측
<p>우리는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이 쌍방 각 50명씩 도합 100명이 모이는 자리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회담」에서는 쌍방 수석대표의 책임하에 토의를 진행하고, 「대표회담」의 수입에 의해 쌍방 각 5명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집행부」에서 의견차이를 협의·조정한 후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여, 이를 「대표회의」에서 확인·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되리라고 봄.</p> <p style="text-align: center;">(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나. 합의서(공동결의문·공동선언문)

우 리 측	부 측
<p>남북국회회담의 합의사항은 공동합의문으로 채택하여 발표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최종합의서는 어디서 문안을 최종적으로 초안을 하느냐? 공동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할 수도 있겠음.</p> <p>그래서 이 안을 대표회의에서 채택을 해야 될 것임.</p> <p>(6차 준비접촉-토의)</p> <p>공동합의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기초를 하는지?</p> <p>집행부가 최고 권한을 가진다니까 집행부에서 합의가 되는데에 따라서, 위임에 따라서 함.</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집행부」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을 「대표회담」에서 확인·채택함.</p> <p>(7차 준비접촉-기조)</p>	<p>문건작성 그루빠가 나와야 됨.</p> <p>집행부에서 조정된 의견을 받아서 위임하는 방안을 누가 쓰면 됨.</p> <p>(6차 준비접촉-토의)</p>

다. 공동의장제

우 리 측	북 측
<p>개·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 진행하며 초청측의 국회의장이 회의의 사회를 맡음.</p> <p>(5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 하고 사회는 번갈아 함.</p> <p>「대표회담」과 「집행부」는 쌍방 수석대표가 회담을 공동주제하고 「공동운영위원회」는 쌍방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대표가 공동주제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회의집행은 북과 남의 국회의장들을 공동의장으로하여 평양에서 회의를 할 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하고 서울에서 회의를 할 때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개막회의와 폐막회의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제로 운영하며 사회는 번갈아 함.</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라. 개·폐회모임 연설

우 리 측	북 측
<p>기조연설 양측 의장이 하고 또 양측에서 유력한 인사들이 나와서 연설 서너사람 또 하고, 분위기가 통일을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불가침을 향해서 단결이 된 다음에 대표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p> <p>(5차 준비접촉-토의)</p>	<p>개막회의에서는 쌍방국회의장이 개막연설을 하며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각 정당 대표들과 개별 인사들이 축하연설을 함.</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폐막회의에서는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각 정당 대표들과 개별인사들이 축하연설을 하며 쌍방 국회의장이 폐막연설을 함.</p> <p>(6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개별인사 연설이 있는데, 개별인사는 어디 집행부에서 나중에 정하는가?</p> <p>(6차 준비접촉-토의)</p>	<p>운영위원회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임.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가지고 의장한테 제기해서 의장하고 다 합의된 기초위에서 선정함.</p> <p>(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국회의원들의 모임인데 개별인사 대표 연설이 꼭 필요한 것인가? (6차 준비접촉-토의)</p>	<p>개별인사로서 예하면 그쪽은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그쪽은 무소속으로서 국회의원 그런분 축하연설을 하고 싶다면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6차 준비접촉-토의)</p>

마. 회담개최 시기 및 장소(서울·평양)

우 리 측	북 측
<p>제1차 남북회담은 8월중 평양에서, 제2차 회담은 10월중 서울에서 개최함.</p> <p>상대측지역 체류기간은 3박 4일로 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연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며 제1차 연석회의는 평양에서 개최함.</p> <p>제1차 연석회의는 1988년 8월 26일에 하며 회의기간은 4박 5일로 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긴급의제로 올림픽문제 하나만을 다룰 본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정식 제의함.</p> <p>(2차 준비접촉-토의)</p>	<p>우리가 제기한 제1차 북남국회연석회의를 8월 26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데 합의하면 됨. 올림픽문제가 긴급문제라는 것은 우리도 더 잘 알고 있으며 또 여기에 날자를 늦추고 초청문제만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임.</p> <p>(2차 준비접촉-토의)</p> <p>기본문제토의를 위한 제1차 대표회의는 개막회의이후 1개월안에 서울에서 하며 다음번 회담부터는 1개월을 주기로 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엇바꾸어 함.</p> <p>(6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개회모임」은 판문점 준비접촉 종료 후 1개월내에 평양에서 개최함.</p> <p>「대표회담」은 「개회모임」이후 1개월내에 서울에서 제1차 회담을 개최하고 그 후 1개월내에 평양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하며 제3차 회담부터는 1개월을 주기로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함.</p> <p>「폐회모임」은 「대표회담」 종료후 1개월내에 서울에서 개최함.</p> <p style="text-align: center;">(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바. 기타 운영절차문제

우 리 측	북 측
<p>《운영절차 일반》</p> <p>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판문점 통과절차, 체류 및 회담일정, 표식, 장비 및 소지품, 교통·통신 및 연락, 회담장시설, 회의기록, 회의공개여부, 회담진행방법, 회담장의 활동, 각종 편의 제공 및 기타 제반실무절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남북왕래의 선례를 준용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실무대표 1명씩을 선정, 협의·결정토록 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판문점 통과절차》</p> <p>쌍방은 각각 연석회의에 참가할 국회의원들과 다른 정당,단체 대표 및 각계인사들, 수원 및 기자들의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고 사진이 첨가된 명단을 매차 상대측 지역에 들어오기 3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줌.</p> <p>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상대측 지역에는 가는 인원들은 자기측 국회나 국회의장이 발급한 신임장 또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함.</p> <p>쌍방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인원접수측의 관할 건물로 함.</p> <p>쌍방 내왕자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때로부터 자기측 지역에 돌아올 때까지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름.</p> <p>《신변안전보장》</p> <p>쌍방은 상대측 인원들이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의 신변안전과 불가침권을 책임적으로 보장함.</p>



우 리 측	북 측
	<p>신변안전과 불가침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은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성명 문본을 상대측에 넘겨줌.</p> <p>《편의보장》</p> <p>연석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인원들의 교통 및 통신 수단과 숙식을 비롯한 일체 편의는 주최측에서 보장함.</p> <p>《회의공개여부 및 의안상정 보고》</p> <p>연석회의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p> <p>의정에 대한 보고 또는 의안은 북과 남에서 각각 제기할 수 있으며 쌍방 국회에 망라된 정당별로도 제기할 수 있음.</p> <p>《회의기록》</p> <p>기록은 녹음과 녹화, 속기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회의 주최측은 상대측에 필요한 녹음중계선을 보장함.</p> <p>(1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판문점 통과절차, 체류 및 회담일정, 표식,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및 연락, 회담장의 활동, 각종 편의제공 및 기타 제반실무절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남북왕래의 선례를 준용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실무대표 1명씩을 선정하여 협의·결정토록 함.</p> <p>《회의공개 여부》</p> <p>「개·폐회모임」과 「대표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의 회담은 비공개로 할 수 있음.</p> <p>《취재활동》</p> <p>남북국회회담을 위한 남북왕래에 있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함.</p> <p>《체류기간》</p> <p>「개회모임」, 「대표회담」, 「폐회모임」의 상대측 체류기간은 4박 5일로 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 7. 회담 외적 문제

### 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우 리 측	북 측
	<p>우리는 이제 여러갈래로 열리게 될 북남대화들이 우여곡절을 겪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p> <p>이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북남대화를, 특히는 북남국회합동회담 개막회의를 개최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귀당국이 미국과 함께 매해 연초에 벌이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임.</p> <p>80년대를 보내고 바야흐로 90년대에 들어서려고 하는 이 시점에 모처럼 열리게 되어있는 여러갈래의 북남대화들이 남조선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됨으로써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거나 애당초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 통일문제 해결은 그만큼 지연되게 될 것이며 북남관계는 지금보다도 더 악화될 것임.</p> <p>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인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귀 국회의원들은 용당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의 진도를 좌우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p>

우 리 측	북 측
<p>국회회담이 성사되고 불가침선언문제, 교류문제, 정상회담문제들이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팀스피리트」 이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임. 그런데 이 국회본회담을 열자하는, 그동안 불가침문제, 교류문제, 정상회담 또 회담형식문제, 6개월동안 걸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거의 마무리지을 단계에 와서 느닷없이 「팀스피리트」문제를 의제 제1호로 삼아야 된다는 이런 기초적인 발언제기는 굉장히 우려가 됨.</p> <p>「팀스피리트」같은 문제는 앞으로 외교·정치·군사문제에서도 지금 우리가</p>	<p>여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함.</p> <p>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북남국회대표회의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상정하고 토의해결하는 것이 옹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문제를 북남국회대표회의 첫번째 의제로 정립하자는 것을 제의함.</p> <p>(7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팀스피리트」문제를 이제와서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말하겠음.</p> <p>첫째, 우리가 지난 7월 21일부로 북남국회회담을 제기한 것은 불가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음.</p> <p>대화가 시작된 이 마당에 와서는 「팀스피리트」는 중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했음.</p> <p>그런데 우리 대화가 막 거의 성숙되어가는 이 마당에까지도 「팀스피리트」를 하겠다고 공식선언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또 역시 「팀스피리트」하겠다</p>

우 리 측	북 측
<p>다루기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지 않고 그것이 열릴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느닷없이 7차접촉에 와서 이것을 꺼내 놓으려 하는 것은 우리 회담을 먹칠하고,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p> <p>「팀스피리트」훈련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사전통보를 했고 또 참견초청도 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은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전쟁억지기능의 일부분임.</p> <p>우리는 88년 6월에 UN군축특별총회에서 우리 외무부장관이 UN총회 특별위원회에서 밝힌게 있는데 그것은 3단계 군축방안임. 첫째는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의 바탕이 만들어져야 됨.</p> <p>그 다음에 불가침선언문제는 사실은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귀측의 주장에 의해서 불가침선언을 하기로 했음.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에서,</p>	<p>고 지금 하고 있음.</p> <p>이것은 민족간에 화해도 아니고 민족공동체 관계도 아니고, 여전히 대결을 추구한 것임.</p> <p>둘째, 우리가 회담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정세변화가 있음.</p> <p>벌써 우리가 제기한 체육회담문제도 지금 성숙돼 가고 있고, 학생회담문제도 지금 성숙돼 가고 있고, 또 3자회담문제도 지금 제기돼 있고, 고위급 정치·군사회담문제도 지금 성숙돼 가고 있음. 여러 갈래의 대화가 내년쯤 가면 열려 진다는 것이 지금 대체로 공인된 사항임.</p> <p>그런데 「팀스피리트」 이것은 대화의 전진을 장애하는 암적 존재임. 이것은 우리 국회회담의 운명만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남관계 전반, 여러갈래의 대화의 전부를 흐리게 하는 그런 장애요인임. 그래서 이것도 구원하자면 이제라도 「팀스피리트」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 해서 제기하게 된 것임.</p> <p>셋째,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용당히</p>

우 리 측	북 측
<p>당국에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군축협상으로 이룩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측의 원칙이 UN총회에서도 천명된 바가 있음.</p> <p>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중단시킬려고 하면 이 국회회담이 빨리 성사가 되어야 됨. 그래 가지고 불가침선언하고, 휴전협정 상태의 대치상태에서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주어야 됨.</p> <p>뿐만 아니라 우리 교류하고 또 정상회담하자는 것임. 여러분들의 최고통치권자하고 우리측의 최고통치권자하고 만나 가지고 신뢰회복하고 긴장완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해 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쟁하지 말자는 그러한 민족적인 공감대만 형성된다고 그러면 누가 지금 「팀스피리트」하겠는가?</p> <p>따라서 의제 제1의 의안으로 「팀스피리트」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은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형식문제라든가 의제문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생</p>	<p>열 문제를 앞에 놓고 자기책무를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제기하는 것임.</p> <p>인민들은 전쟁 반대함. 인민들은 「팀스피리트」 대규모 훈련할 때마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 해결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객관적 요구와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정치방향을 규제하는 것이 국회임.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임.</p> <p style="text-align: right;">(7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산적인 오늘의 예비접촉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p> <p>(7차 준비접촉-토의)</p> <p>「팀스피리트」훈련은 공격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의 일이라도 여러분들 오관해 가지고 전쟁도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고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임.</p> <p>그리고 전쟁이란 것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인식하자는 것이 「팀스피리트」군사훈련임.</p> <p>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회담의 성격은 국회본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회담임.</p> <p>그런데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절차를 갖추는 이 마당에서 상황하개 이 군사문제를 선치해 가지고 이것이 꼭 제1의 의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준비접촉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측이 정말</p>	<p>귀측에서 이야기가 우리가 마치 오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방위적인 입장에서 이걸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최근 시기만해도 평화를 위하고, 긴장을 조성시키는 이런 대훈련을 그만 두자고 상당한 정도로 노력해 왔음.</p> <p>가까운 실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88년 6월 군사당국자회담, 동년 12월 31일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88년 1월 북남연석회의를 제기하면서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해결하고자 했음.</p> <p>86년 1월에는 대화가 진행되는 전기간에 대소규모의 모든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것을 결정했고, 또 86년 9월에는 15만명의 인민군대를 평화적</p>

우 리 측	북 측
<p>로 이 회의를 과연 성사시켜 가지고 명년 초에 본회담을 할려고 하는건지 의문임.</p> <p>(7차 준비접촉-토의)</p>	<p>건설에 들렸음.</p> <p>작년 7월에는 우리가 다국적 군축회담을 제기하면서 7월부터 작년말까지 10만군대를 일방적으로 축소했음.</p> <p>우리 국회가 응당히 평화와 전쟁문제를 자기 사안 첫째 자리에 놓고 다루어야 함. 우리가 북남국회에 본회의에 이 「팀스피리트」를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의정 첫째로 놓고 어떤 결의를 채택하면 「팀스피리트」중지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보여줄 것임. 이것은 아마 미국에도 강한 압력이 될 것임.</p> <p>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대방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한 이런 위험한 전쟁훈련을 하는데 우리도 존엄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머리숙이고 들어와서 대화를 할 수 없음.</p> <p>우리 국회대화 이제 성숙되어가는 단계에서, 여러 갈래의 대화가 지금 성숙되어가는 단계에서, 이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제기하는 것임.</p> <p>(7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의 준비접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제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회담외적인 문제들과 부당한 조건들을 들고 나와 회담진행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함.</p>	<p>귀측은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와 내외의 여론을 외면하고 대화의 운명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끝끝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상봉이 더는 계속되지 못하게 했음.</p>
<p>지금 조금전에 귀측은 이것을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앞으로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로 하자는 것을 철회하겠다고 말을 했음. 이것은 어불성설임.</p>	<p>우리의 판문점상봉이 중단된 이후 대화를 다시 잇는 문제가 근 1년 가까이 지연된 것도 참으로 가슴아픈 일임.</p>
<p>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어디까지나 방위를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 훈련으로서 귀측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음.</p>	<p>귀측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후에도 대화를 재개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없이 상봉날짜를 뒤로 미루다가 7월 6일에 와서는 서경원의원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의 상봉을 무기 연기시켰음.</p>
<p>그것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공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측이 귀측에게 이 훈련의 실시기간과 규모·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있고 심지어 참관초청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p>	<p>그후에도 우리는 두차례씩이나 상봉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귀측은 두달가까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9월 하순에 와서야 상봉제기에 응하려는 의사를 밝혀 비로소 이렇게 자리를 같이할 수 있게 되었음.</p>
<p>남북간의 긴장상태나 남북대화의 장에는 귀측의 주장처럼 우리측의 공개적인 군사훈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p>	<p>우리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남측 당국의 입장을 옹호해</p>

우 리 측	북 측
<p>결코 아니라 오히려 북측에서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는 군사연습과 지나치고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임.</p> <p>따라서 상호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신뢰와 이해를 회복하는 것이 긴장완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신의있는 접촉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불가침선언 등 제반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p> <p>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진전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항구적평화가 정착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것은 필요조차 없을 것임.</p> <p>또한 과거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과 귀측의 군사훈련이 실시된 기간에도 남북대화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군사훈련과 남북대화가 직접 관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음. 귀측이 진정으로 순조로운 남북국회회담의 실현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 운운하는 것은 더이상 제기 하지 말고</p>	<p>나선 귀측의 태도나 상봉날짜를 지연시킨 귀측의 무책임한 처사를 두고 과연 이것이 대화를 하려는 자세이겠는가, 대결을 하려는 자세이겠는가, 과연 이런 환경에서 신의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p> <p>우리가 7차 상봉에서 본회의의 첫 의제로 제기했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 이 문제는 남측에서 다시는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는 전제밑에서 일단 보류하기로 하되 만일 귀측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종전과 같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 이 문제를 상정할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임.</p> <p style="text-align: right;">(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리 측	북 측
<p>쌍방간의 의견접근 사항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합의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음.</p> <p>(8차 준비접촉-토의)</p> <p>남북국회회담의 본질에 떨어진 문제를 앵무새처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을 열망하는 또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바라는 이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주는 것임.</p> <p>그래서 귀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함.</p> <p>또한 지금의 문제 등에 관해서 확고한 우리 대표단의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음.</p> <p>(10차 준비접촉-토의)</p>	<p>한쪽에서는 평화적인 통일구국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대화와 협상을 진지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가는 커녕 오히려 대규모의 합동 군사훈련, 전쟁연습을 벌리는 것으로 대답해 나서는 것은 대화와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반대화, 반통일적인 입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p>대화와 전쟁연습이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시기의 경험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며 가깝게는 지난해에 있었던 대화중단의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도 명백히 실증된 사실임.</p> <p>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는 귀측에서 지난 시기의 교훈에 다소라도 유념하려 한다면 올해부터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p>

우 리 측	북 측
	<p>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북남대화의 진전을 바란다면 최소한의 경우 외국 군대의 참가를 배제하고 훈련명칭도 고치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p> <p>그러나 귀측은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탐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p> <p>대규모의 전쟁연습은 불피코 불신을 조장하고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킬 것임.</p> <p>그리고 그것은 대화의 전도에 그늘을 던질 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쟁을 초래하는 결과밖에 빚어낼 것이 없음.</p> <p>정세를 긴장시켜 전쟁접경으로 끌고 가는 모험적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대화의 진전에 결정적인 장애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귀측에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으며 대화마당에서 직접 귀측에 거듭 강조하였음.</p> <p>우리는 북남국회의원들의 대화가 정상궤도에서 원만히 진척되자면 무엇보다</p>

우 리 측	북 측
<p>오늘 회담의 진전에 큰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된 모습으로 보고 귀측의 태도로 보아서 회담진전, 남북국회회담 성사에 성의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절실히 눈으로 보고 발견을 하였음.</p> <p>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섬섬하게 생각하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부터는 회담진전에 성의를 가지고 회담의의에 충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함.</p> <p>그리고 오늘 여러가지 구태의연한 이야기들을 많이 되풀이 했지만, 이러한</p>	<p>먼저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려는 귀측의 태도와 입장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p> <p>따라서 오늘의 상봉에서는 실무절차 문제토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팀스피리트 90」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긴급의제로 상정하고 협의할 것을 귀측에 제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10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p>오늘 회의를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팀스피리트를 의제밖의 문제나 하면서 토의를 회피하고 또 그쪽 국회로서, 이 팀스피리트 중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마땅히 조치를 취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계속 회피하고 있음.</p> <p>결국은 앞으로도 회담은 하되 대결정책은 계속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우리 대화의 진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것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우리 대표단은 생각을 같이 함. 또 팀스피리트가 우리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 전혀 의제가 될 수 없음.</p> <p>(10차 준비접촉-토의)</p>	<p>(10차 준비접촉-토의)</p>

## 나. 밀입국자 사법처리

우 리 측	북 측
<p>그간 귀측에 보낸 전화통지문과 성명 등을 통해 밝힌대로 문익환의 사법처리는 우리 당국의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귀측이 이에 대해 비방·중상을 늘어놓은 것은 우리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임을 다시 강조해 두고자 함.</p>	<p>귀측에서는 나라의 통일에 보탬을 주려는 숭고한 일념을 안고 평양에 다녀간 문익환목사와 서경원의원 그리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하였던 임수경학생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가하려 하고 있음.</p>
<p>문익환사건에 대하여 말하자면 귀측 당국이 특별기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꾸민 정치공작행위, 여러분들 기록하시는것 같아서 그런 부분 두번씩 읽겠음. 정치공작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였음이, 그것이 명백해졌음.</p>	<p>북에 와서 통일을 논의하고 돌아간 사람들을 무작정 「간첩」으로 모는 것은 민족적 단합과 화해의 길을 차단하고 대화와 완화의 분위기를 대결과 대립의 분위기로 돌려 세우는 극히 유해로운 발상으로서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임.</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특정인의 소망 운운한 것은 귀측 당국의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적극 비호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p>	<p>지금 내외여론은 문익환목사와 서경원의원 그리고 임수경학생의 평양방문을 통일의 물꼬를 터놓은 「애국적인 쾌거」로, 분단장벽의 한모퉁이를 허문 「장한 소행」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 나르고 있음.</p>
<p>뿐만 아니라 문익환·임수경·문규현 등은 입연한 대한민국 국민임.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법률의 보호를</p>	<p>그렇지만 귀측에서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오히려 북에 다녀간 사람들을</p>

우 리 측	북 측
<p>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p> <p>이것은 세계 어느 주권국가에게도 다같이 적용되는 기본원리이며, 귀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임.</p> <p>문익환·임수경·문규현 등은 우리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불법 입북하여 우리의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임.</p> <p>따라서 이들은 마땅히 대한민국 사직당국의 엄정한 재판에 의해 형량이 가려져야 하며 귀측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8차 준비접촉-토의)</p>	<p>감옥에 거두고 가혹하게 처형함으로써 거래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북과 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고 대화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p> <p>통일운동을 그 어느 일방의 법에 의하여 제약하거나 통일을 위하여 나선 사람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배반으로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임.</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 당국이 북에 다녀간 사람들을 「재판처형」하려고 지어 「간첩」으로까지 몰면서 우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측 당국의 통일의지를 더욱 의심케 하고 있음.</p> <p>귀국회가 북에 다녀간 사람들을 처형하려는 당국의 처사를 저지시키고 그들이 지체없이 석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임.</p> <p style="text-align: center;">(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다. 콘크리트장벽 철거

우 리 측	북 측
<p>우리 국가안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뭐 개방이다 운운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국가안보법 같은 실정법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니 하는 그러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임.</p> <p>그것에 앞서서 귀측의 형법이라든가 귀측의 악법들이 개폐되는 것이 개방의 일면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남북국회회담을 성과있게 진전시키는 거름인 것임.</p> <p>그래서 이러한 것을 귀측의 모든 것을 덮어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우리 국회회담에 다시 그런 말이 나온다면, 다시 그러한 작태가 또 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회담의 앞길이 어두워지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9차 준비접촉-토의)</p>	<p>콘크리트장벽 허물고 자유내왕하자 콘크리트장벽 허물란 말임. 그리고 자유왕래하자. 그걸 우리 주장함.</p> <p>그거 장벽 좋지못한 상징이고 우리 민족사에 오점으로 남긴 것임. 그거 빨리 허물어서 우리세대에 없어져 흔적 없어야 됨.</p> <p>다음은 개혁의 문제인데, 우리 개혁해 왔음. 민족해방, 개혁을 수행했음. 자주독립, 자주권 쟁취했음. 그다음에 해방후에 민주개혁을 시행했음.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을 했음.</p> <p>앞으로도 우리 개혁함. 그 개혁은 어떤 개혁이나?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를 더 공고히 하고 공산주의로 나가기 위한 이런 길에서 개혁임. 다른 개혁없음.</p> <p>여기로부터 어떤 지선을 타고 나가거나 후퇴하거나 이런 개혁은 없음. 우리는 인류의 이상사회에, 이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데 이길로 우리는 확고히 나아감.</p> <p>그쪽에 대해서 개방이라 말하는데</p>

우 리 측	북 측
	<p>개방에 대해서 두가지로 얘기할 수 있음.</p> <p>하나는 외세앞에 개방해 놓아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 외세앞에 예속시켰음. 외세가 들어와 지배하게 만들었음. 그걸 이제는 걷어치워야 됨.</p> <p>자주권 확립해야 됨. 미국이 절대 남조선국민들을 위해 와있거나 무슨 우리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 와 있는게 아님. 자기전략을 위해서 와있음.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와있음. 그러니까 그쪽에서 개방 그건 잘못했음. 민족 자주권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만 나라의 자주권을 팔아 먹는식 개방을 했음.</p> <p>다른 한편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폐쇄하고 장벽으로 만들었음. 개방해야 됨.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크리트 허물고 자유내왕하자.</p> <p>그런데 거기도 개혁해야 됨. 개혁 어떻게 하느냐 국가보안법 같은 거 다 개혁하고 선진사상을 탄압하고 비법화 하는 이런거 다 개혁해서 선진사상,</p>

우 리 측	북 측
<p>콘크리트장벽 얘기 하였지만, 귀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음.</p> <p>세계가 다 알고 있듯이 다만 있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 정전선 그 긴 선에 3,300볼트에서 10,000볼트의 고압전류를 놓은 귀측의 철조망이 있을 따름임.</p> <p>우리가 진정코 전향적으로 남북의 왕래 또 통일을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3,300볼트에서 10,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의 문제, 즉 그것의 철거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됨.</p> <p>(10차 준비접촉-토의)</p>	<p>진보적 사상이 자유화되도록 해야 됨.</p> <p>진보정당들 선진적 정당들의 합법화를 허용하는 이런 계획을 수행해야 됨.</p> <p>(9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콘크리트장벽은 숨길 수 없는 것임.</p> <p>그것이 없고 우리 철조망만 있다면 회의 끝난 다음에 같이 가 보자. 15분이면 되는데 가보자. 눈으로 보면 될 것임.</p> <p>철조망만 없애면 된다 하는데 우리 철조망 없애겠음.</p> <p>그리고 콘크리트장벽도 상당한 정도로 몇년 거듭해서 콘크리트만 530만톤, 혼합물 1,400만톤, 전석 400만톤 굉장히 투자하였음.</p> <p>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분열의 장벽으로 나쁜 상징을 가지니까 없애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0차 준비접촉-토의)</p> <p>땡크 들어가면 첫째로 땡크 1차 전진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을 보장해야 함. 콘크리트장벽은 일선으로 우리나라의 저 서로부터 동까지 가로질러서 나선의 뱀처럼 구불구불 우리 민족의 강토를 감고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면 지금의 반맹크 시설물은 1차 타격에 녹아나면 끝임. 그 다음에 맹크가 연달아 들어갈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세계 현대전서 군사적으로 볼때 반맹크 시설물을 그렇게 구축 안함. 그 물방으로 이렇게 1차선이 막아주면 계속 들어가지 못하게 중심 깊이 구축함. 초보적인 상식임. 따라서 반맹크 시설물이란 말이 맞지 않음.</p> <p>장벽을 담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옛날 성벽처럼 아무나 못다니게 문하나 내놓고 총 땅땅치고 검토를 받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통제를 함.</p> <p>분계선의 콘크리트 장벽이 바로 이렇게 갈라 놓았음. 여기로는 사람도 짐승도 그 누구도 다닐 수 없음. 말하자면 민족을 둘로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남북의 전체, 북남의 전체 어느 정치·경제 어느 사람도 자유로이 오갈 수 없게 만들었음. 이것은 엄연히 분단의 장벽임.</p> <p style="text-align: right;">(10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은 자꾸 탱크시설계획이라 하는데, 여기 군사전문가들 없음. 군사전문가들하고 만나서 하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제로 채택되어 있는 불가침 문제에 관해서도 또 토의할 기회가 있음.</p>	<p>이제는 무슨 대화든 어떻게든 해야 됨. 당국대화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대화도 다 해야 됨. 그러나 대화마당만 통해가지고 이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다 해결한다는건 이젠 낡은 사고방식임.</p>
<p>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해야할 임무는 따로 있음. 거기에 충실해야지 매번 기회때마다 의제와는 관계없는 걸가지고 나와서 자꾸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음.</p>	<p>이젠 터놓을 것을 요구함. 자유내왕, 전면개방할 것을 요구함.</p> <p>무슨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통행협정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통신협정 만드는 것을 원치 않음.</p>
<p>이런 기본자세를 가지고는 통일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콩크리트때문에 통일이 안되는가?</p>	<p>그래서 이 비등된 통일열망, 통일열기에 적응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이 장벽을 허물고 자유왕래하고 전면개방하는 것임.</p>
<p>(10차 준비접촉-토의)</p>	<p>장벽의 존재유무는 직접 같이 나가서 확인하면 될 것임. 분명히 그것은 분열의 장벽이고, 자꾸 땀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았는데 땀크의 체계적 방어구축의 높이는 1m50정도면 된다고 함. 그러나</p>

우 리 측	북 측
	<p>콘크리트 장벽은 8m, 높은대는 13m임. (10차 준비접촉-토의)</p>

## 라. 민족통일협상회의 개최

우 리 측	북 측
<p>오늘, 남북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처럼 자리를 같이한 이 준비접촉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에 벗어나는 회담 외적인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으려 했지만, 귀측이 굳이, 이 회담석상에서 「민족통일협상회의」문제를 거론하고 엉뚱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명백히 밝혀두지 않을 수 없음.</p> <p>먼저, 첫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북쌍방의 통일방안을 놓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진지한 토의를 하려 한다면 마땅히, 귀측은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당사자간에 회담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당사자간에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토의·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p> <p>우리측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귀측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안은 각각 쌍방 주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책임자가 발표한 것임.</p>	<p>북과 남의 우리 정치인들은 통일운동이 전례없이 고조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해서 자기앞에 지워진 책임을 깊이 의식하고 지난날의 대결관념속에서 벗어나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정신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임해야 할 것임.</p> <p>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과 남에서 통일열망이 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측의 많은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방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을 내놓았고 귀측 당국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음.</p> <p>이처럼 여러가지 「통일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수용하여 통일방도에 관한 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함.</p> <p>이러한 견지에서 얼마전에 우리는 북과 남의 당국과 주요정당, 단체대표들로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하고</p>



우 리 측	북 측
<p>따라서 이 두가지 통일방안을 놓고 보다 진실한 자세로 통일문제를 협의·해결하려한다면 귀측은 아무런 책임과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집회식의 회의를 하려 할 것이 결코 아니라, 정당한 국민의 위임을 받았고 또한 통일방안들을 정식발표한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만나 협의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p>	<p>거기에서 지금까지 북과 남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할 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음.</p>
<p>우리측이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로서 「남북정상회담」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긴장과 대화를 해결하고 평화와 통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바로 이와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며 그런 뜻에서 귀측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우리측 의제를, 그것을 채택할 것을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임.</p>	<p>민족통일협상회의가 소집되면 거기에서는 어느 특정의 통일방안만을 놓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내놓은 모든 통일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의하게 될 것이며 그에 기초해서 민족공동의 선언을 발표하는 문제가 토의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둘째로 귀측은 마치 「고려연방제」 하나밖에 없고, 우리측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외에 수많은 다른 방안들이 있는 듯이 묘사하면서 마치도 우리측의 내부혼란을 부채질할 수</p>	<p>그리고 우리는 민족통일협상회의의 테두리안에서 쌍방 최고위급의 회담도 가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밝혔음.</p> <p>이러한 협상마당이 마련되면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음.</p> <p>우리는 남측의 정치인들이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의혹과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설 것을 바라고 있고</p>

우 리 측	북 측
<p>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이러한 태도를 시정해야 할 것임.</p> <p>통일논의가 개방되어 있는, 우리측 사회내부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인 동시에 자랑스러운 일임.</p> <p>따라서 귀측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보다 큰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함으로써 북한 사회내에 「고려연방제」 이외의 다른 통일방안들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임.</p> <p>셋째로 통일방안을 토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귀측은 더이상 구태의연한 통일전선 채택을 쓰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p> <p>귀측은 이른바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에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원탁회의 방식」을 주장하고 우리측 일부 재야</p>	<p>여기에서도 귀측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임.</p> <p>(8차 준비접촉-기조발언)</p>

우 려 측	북 측
<p>단체와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나고 기초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는 불순한 태도를 취하였음.</p> <p>이것은 곧 귀측의 「민족통일협상회의」란 것이 「정치협상회의」나, 「내민족회의」나 또는 「범민족대회」나 「연석회의」나 하면서, 통일전선 책략의 일환으로 지난 40여년간 되풀이 해 온 것을 포장만 바꾸어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p> <p>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려 한다면, 구태의연한 「협상회의」같은 방식을 제외하여 불신과 대결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인정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고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대화에 보다 성실한 대화로 나올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8차 준비접촉--토의)</p>	

우 리 측	북 측
	<p>내왕을 회피하고 개방을 꺼려하면서 통일을 고창하는 것은 빈말공부이며 소극적이고 국부적이고 점차적인 교류만을 제창하면서 시간을 끌자는 것은 구경에는 분열의 현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밖에는 다르게 이해할 수 없음.</p> <p>좁은 테두리안에서 특정한 몇몇사람이 대화를 한다거나 교류를 한다고 해서 통일의 기반이 다져질 수 없음.</p> <p>북과 남이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면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구속을 받음이 없이 오고가면서 상대측의 실상을 파악하고 오해와 불신을 풀며 민족의 활로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임.</p> <p>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차별없이 상대측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고 제한없이 접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족분열과 북남대결의 상징으로 되어있는 군사</p>

우 리 측	북 측
	<p>분계선 남측 지역에 축성된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머물지 말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전면개방하자고 주장하는 바임.</p> <p>정치군사적대결이 극도로 침체한 오늘의 실정에서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한다는 것은 북남당국의 행정적인 실무적 처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없음.</p> <p>이 문제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계를 대표하는 각 정당 수뇌들의 진지한 협의와 결단에 의해서만 그 실현이 가능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며 온 민족의 공동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거족적인 문제임.</p> <p>바로 여기에 북남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지체없이 열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0차 준비접촉-기조 발언)</p>

우 리 측	북 측
	<p>분계선 남측 지역에 축성된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머물지 말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전면개방하자고 주장하는 바임.</p> <p>정치군사적대결이 극도로 첨예한 오늘의 실정에서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한다는 것은 북남당국의 행정적인 실무적 처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없음.</p> <p>이 문제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계를 대표하는 각 정당 수뇌들의 진지한 협의와 결단에 의해서만 그 실현이 가능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며 온 민족의 공동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거족적인 문제임.</p> <p>바로 여기에 북남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지체없이 열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임.</p> <p>(10차 준비접촉-기조 발언)</p>

우 리 측	북 측
	<p>남측대표 여러분들과 국회의 모든 정치인들이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헐어내고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가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응당한 노력을 경주 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임.</p> <p>(10차 준비접촉 기조발언)</p>

〈부 록〉

## 쌍방 합의서(안)



## 1. 우리측

### 가.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안 (제7차 준비접촉)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1988년 8월 19일부터 1988년 12월 29일 사이에 판문점의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도합 일곱차례에 걸쳐 남북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접촉을 갖고 남북국회회담의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의제 및 회담형식

가.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다음의 3개항으로 한다.

- ①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의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
- 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나. 남북국회회담은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이하 「대표회담」이라 함), 「폐회모임」 순으로 진행한다.

다.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 형식으로 한다.

라. 「대표회담」은 쌍방에서 각기 5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쌍무회담 형식으로 하며,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부」와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둔다.

#### 2. 회담운영 절차

가. 남북국회회담은 상호 존중 및 불간섭, 상호 형평의 원칙 등에 따라 상호주

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회모임」은 판문점 준비접촉 종료후 1개월내에 평양에서 개최한다.

다. 「개회모임」에서는 준비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 토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개회연설과 각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한다.

라. 「대표회담」은 「개회모임」이후 1개월내에 서울에서 제1차 회담을 개최하고 그후 1개월내에 평양에서 제2차회담을 개최하며 제3차회담부터는 1개월을 주기로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마. 「대표회담」은 쌍방 합의제로 운영하며 표결은 하지 않는다.

바. 「집행부」는 「대표회담」의 위임에 의해 「대표회담」에서 제기되는 의견차이를 협의·조정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합의문」초안을 작성한다.

사. 「집행부」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은 「대표회담」에서 확인·채택한다.

아. 「공동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작성 등 회담운영과 관련된 실무문제를 다룬다.

자. 「폐회모임」은 「대표회담」종료후 1개월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차. 「폐회모임」에서는 「대표회담」에서 합의·채택된 「공동합의문」을 확인·공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폐회연설과 각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한다.

### 3. 기타 진행절차

가.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 하고 사회는 번갈아 한다.

나. 「대표회담」과 「집행부」는 쌍방 수석대표가 회담을 공동주재하고 「공동운영위원회」는 쌍방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대표가 공동주재한다.

다. 「개·폐회모임」과 「대표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와 「공동운

영위원회」의 회담은 비공개로 할 수있다.

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남북왕래에 있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마. 「개회모임」, 「대표회담」, 「폐회모임」의 상대측 체류기간은 4박5일로 한다.

바. 「개회모임」, 「대표회담」, 「폐회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대표단은 150명 내외의 지원인원과 200명 내외의 기자를 동행토록 한다.

사. 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판문점 통과절차, 체류 및 회담일정, 표지,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및 연락, 회담장의 활동, 각종 편의제공 및 기타 제반실무절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남북왕래의 선례를 준용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실무대표 1명씩을 선정하여 협의·결정토록 한다.

#### 나. 남북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안 (제8차 준비접촉)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1988년 8월19일부터 1989년 10월25일 사이에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도합 여덟 차례에 걸쳐 남북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접촉을 갖고 남북국회회담의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의제 및 회담형식

가.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다음의 3개항으로 한다.

①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

## 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 ③ 남북정상회담개최 문제

나. 남북국회회담은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이하 「대표회담」이라함), 「폐회모임」순으로 진행한다.

다.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형식으로 한다.

라. 「대표회담」은 쌍방에서 각기 5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쌍무회담형식으로 하며,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는 「집행부」와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둔다.

## 2. 회담운영 절차

가. 남북국회회담은 상호 존중 및 불간섭, 상호 형평의 원칙 등에 따라 상호주의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회모임」은 판문점 준비접촉 종료후 1개월내에 평양에서 개최한다.

다. 「개회모임」에서는 준비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토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개회연설과 각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한다.

라. 「대표회담」은 「개회모임」이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제1차회담을 개최하고 그 후 1개월내에 평양에서 제2차회담을 개최하며 제3차회담 부터는 1개월을 주기로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마. 「대표회담」은 쌍방 합의제로 운영하며 표결은 하지 않는다.

바. 「집행부」는 「대표회담」의 위임에 의해 「대표회담」에서 제기되는 의견차이를 협의·조정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합의문」초안을 작성한다.

사. 「집행부」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은 「대표회담」에서 확인·채택한다.

아. 「공동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작성 등 회담운영과 관련된 실무문제를 다룬다.

자. 「폐회모임」은 「대표회담」이 종료된 1개월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차. 「폐회모임」에서는 「대표회담」에서 합의·체택된 「공동합의문」을 확인·공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폐회연설과 각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한다.

### 3. 기타 진행절차

가.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 하고 사회는 번갈아 한다.

나. 「대표회담」과 「집행부」는 쌍방 수석대표가 회담을 공동주재하고 「공동운영위원회」는 쌍방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대표가 공동주재한다.

다. 「개·폐회모임」과 「대표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의 회담은 비공개로 할수있다.

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남북왕래에 있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마. 「개회모임」, 「대표회담」, 「폐회모임」의 상대측 체류기간은 4박5일로 한다.

바. 「개회모임」, 「대표회담」, 「폐회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대표단은 150명 내외의 지원인원과 200명 내외의 기자를 동행토록 한다.

사. 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판문점 통과절차, 체류 및 회담일정, 표지,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및 연락, 회담장외 활동, 각종 편의제공 및 기타 제반 준비절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남북왕래의 선례를 존중하되 이외 따른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실무대표 1명씩을 선정하여 협의·결정토록 한다.

## 2. 북 측

### 가. 북남국회연석회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 초안 (제1차 준비접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남국회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함)를 소집하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1988년 8월 1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연석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북남국회의원들의 상봉을 가지었다.

#### 1. 연석회의 의제

연석회의 의제는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제24차 올림픽 경기대회문제로 하며 그밖에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도 의제로 한다.

#### 2. 연석회의 장소

연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며 제1차 연석회의는 평양에서 개최한다.

#### 3. 연석회의 참가대상과 인원

연석회의에는 쌍방 국회의원 전원과 쌍방에서 각각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 단체들의 대표와 각계인사 50명씩 참가한다.

수원은 각각 20명으로 한다.

#### 4. 제1차 연석회담 날짜 및 회의기간

제1차 연석회의는 1988년 8월 26일에 하며 회의기간은 4박 5일로 한다.

#### 5. 판문점 군사분계선 통과절차

- ① 쌍방은 각각 연석회의에 참가할 국회의원들과 다른 정당, 단체 대표 및 각 계인사들, 수원 및 기자들의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고 사진이 참가된 명단을 매차 상대측 지역에 들어오기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 ②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상대측 지역에 가는 인원들은 자기측 국회나 국회의장이 발급한 신임장 또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 ③ 쌍방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인원접수측의 관할 건물로 한다.
- ④ 쌍방 왕래자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때로부터 자기측 지역에 돌아올때까지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6. 신변안전보장

- ① 쌍방은 상대측 인원들이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의 신변안전과 불가침권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 ② 신변안전과 불가침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은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성명 문본을 상대측에 넘겨준다.

#### 7. 편의보장

연석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인원들의 교통 및 통신 수단과 숙식을 비롯한 일체 편의는 주최측에서 보장한다.

## 8. 국회연석회의 운영절차

- ① 연석회의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수 있다.
- ② 연석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는 쌍방에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③ 연석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쌍방에서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 ④ 회의집행은 북과 남의 국회의장들을 공동의장으로하여 평양에서 회의를 할 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하고 서울에서 회의를 할 때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한다.
- ⑤ 의정에 대한 보고 또는 의안은 북과 남에서 각각 제기할수 있으며 쌍방 국회에 망라된 정당별로도 제기할수 있다.
- ⑥ 토론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하되 토론자수는 북과 남에서 동수로 한다.
- ⑦ 토의된 의안에 대한 가결은 거수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의결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수는 북과 남에서 동수로 하며 회의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다.
- ⑨ 표결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공동계산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계산위원회는 북과 남에서 각각 5명씩으로 구성한다.

- ## 9. 회의기록은 녹음과 녹화, 속기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하며 회의 주최측은 상대측에 필요한 녹음중계선을 보장한다.



10. 이밖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회의개막전에 쌍방실무자들 사이에서 협의결정한다.

북남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북남국회의원들의  
상            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금철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박준규

1988년 8월 19일

판   문   점

나. 수정안 (제6차 준비접촉)

1. 회의형식

- ① 북남국회회의는 개막회의와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 폐막회의로 한다.
- ② 개막회의와 폐막회의는 북남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로 한다.
- ③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1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표회의로 한다.
- ④ 개막회의는 판문점 국회의원상봉이 끝난 후 1개월안에 평양에서 소집한다.
- ⑤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제1차 대표회의는 개막회의이후 1개월안에 서울에서 하며 다음번 회의부터는 1개월을 주기로 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엇바꾸어 한다.
- ⑥ 폐막회의는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가 끝난후 1개월안에 소집한다.

## 2. 회의운영절차

- ① 개막회의와 폐막회의는 북과 남의 공동의장제로 운영하며 사회는 번갈아 한다.
- ② 개막회의에서는 쌍방국회의장이 개막연설을 하며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각 정당 대표들과 개별인사들이 축하연설을 한다.
- ③ 개막회의에서는 환문집 국회의원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확인하며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에 파견할 쌍방대표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 ④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에서는 각 정당 대표들로 집행부를 구성한다. 대표회의에서 제기되는 의견사항은 집행부에서 협의조정한다.
- ⑤ 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쌍방에서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 ⑥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에서는 합의된 문제들을 공동합의서로 작성한다.
- ⑦ 대표회의에서 기본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는 일반합의방식으로 한다. 일치합의에서는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합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⑧ 폐막회의에서는 대표회의에서 작성한 공동합의서를 박수로 확인한다.
- ⑨ 폐막회의에서는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각 정당 대표들과 개별인사들이 축하연설을 하며 쌍방 국회의장이 폐막연설을 한다.

남북국회회담 쌍방주장 비교  
—에비접촉(1985), 준비접촉(1988~1990)—

---

인 쇄 1996년 9월 7일  
발 행 1996년 9월 7일

발행처 남북회담사무국  
운 영 1 부  
정 치 회 담 과  
(전화 735-1261)

인쇄처 삼 신 인 쇄 (주)

---